

'90年代 北韓의 軍事政策과 南北韓의  
葛藤構造 改善에 관한 研究

1990



統一院

##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統一關聯 政治·軍事問題 研究事業」의 一環으로 推  
進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本 研究는 90年代에 예상되는 韓半島의 政治·軍事的 葛藤管理라  
는 觀點에서 北韓의 軍事政策 變化展望을 가늠하고 戰爭遂行 潛在  
力量에 대한 巨視的 分析을 試圖함으로서 韓半島의 葛藤構造 改善  
에 참작할 수 있는 準據를 導出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報告書가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시 參考資料로 많이 活用되어  
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반드시 當院의 見  
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90. 12

調 查 研 究 室



## 〈 目 次 〉

第1章	90年代 南北韓의 政治·軍事的 葛藤管理 方向 .....	崔 明
I.	머리말 .....	5
II.	90年代 新데탕트 국제질서와 韓半島 .....	6
III.	南北韓間의 葛藤과 對話 .....	8
IV.	南北韓間의 葛藤管理 方向 .....	12
V.	맺음말 .....	20
第2章	北韓의 軍事政策 變化展望과 軍隊의 平和的 利用可能性 .....	任鏞淳
I.	머리말 .....	27
II.	北韓의 軍事 Doctrine .....	29
III.	北韓의 軍事政策 .....	34
IV.	北韓의 軍隊와 統一政策 .....	39
V.	北韓의 軍事戰略 傾向 .....	43
VI.	軍隊의 平和的 利用可能性 .....	46
VII.	맺음말 .....	49
第3章	北韓의 戰爭遂行 潛在力量에 대한 巨視的 分析 .....	朴東煥
I.	相對的 持久力과 戰爭의 勝敗 .....	57
II.	戰爭遂行 潛在力の 概念的 考察 .....	61
III.	軍事費支出을 통해 본 南北韓의 潛在力 比較 .....	72
IV.	結 論 .....	78

第4章	南北韓의 理想的인 人力 Modeling에 의한 軍縮人力規模 分析 .....	朴在夏
I.	序 論 .....	85
II.	南北韓 軍事力 比較 .....	87
III.	南北韓 軍事力 競爭 40年 .....	91
IV.	軍事力 規模 Modeling .....	95
V.	南北韓 緊張緩和의 適正 軍事力規模 .....	102
VI.	結 論 .....	108
第5章	南北韓의 軍備統制 接近方法과 類型別 評價 .....	宋大晟
I.	問題의 提起 .....	115
II.	軍備統制 類型 .....	116
III.	韓半島 軍備統制 接近方法 .....	120
IV.	韓半島 軍備統制方法 類型別 評價 .....	128
V.	結 論 .....	141
第6章	北韓의 軍事問題關聯 提議 評價 및 展望 .....	全寅永
I.	序 論 .....	153
II.	北韓의 軍備減縮 提案 .....	156
III.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	177
IV.	南北韓 軍事問題關聯 提案 比較 評價 .....	190
V.	結 論 .....	196

# 第1章 90年代 南北韓의 政治・軍事的 葛藤管理 方向

— 崔 明 (서울大 社會科學研究所長)

I. 머리말 .....	5
II. 90年代 新데탕트 국제질서와 韓半島 .....	6
III. 南北韓間의 葛藤과 對話 .....	8
1. 南北韓 葛藤의 性格 .....	8
2. 南北對話의 性格과 爭點 .....	10
IV. 南北韓間의 葛藤管理 方向 .....	12
— 統一指向的인 平和體制의 構築	
1. 相互體制의 認定 .....	13
2. 軍備統制의 方向 .....	15
3.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國際協力 方案 .....	19
V. 맺음말 .....	20

## I. 머리말

蘇聯의 改革 開放政策으로 야기된 신데탕트의 國際情勢는 급기야 2차대전 이후 冷戰의 상징이었던 독일의 統一을 가져왔다. 蘇聯을 시발로 한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의 자유화 民主化의 물결이 冷戰의 孤島로 남아있던 韓半島에도 파급되고 있다. 南北韓 총리회담, 일본과 북한의 早期 國交正常化 합의, 韓國과 蘇聯의 수교, 그리고 최근 아시안게임에서 보여주었던 南北韓 화해 분위기, 南北韓 축구, 영화, 음악 교류 등 불과 몇년전에만 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눈앞에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우리 민족의 최대의 관심사는 한국전쟁과 같은 비극적인 民族相爭이 재발되지 않도록 韓半島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민족의 統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南北韓은 분단정권 수립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적대감과 불신감이 증폭 심화되어 왔다. 그리하여 그간의 남북관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분쟁과 갈등이 주요한 내용이었다. 과거 남북의 양정권은 이 갈등과 대결을 解決하려는 노력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연장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신데탕트 움직임은 南北韓 관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한 정책도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고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80년대 이전의 體制競爭意識, 대북적대감 고취, 정권유지용 안보논리 등에서 벗어나 民族和解, 民族統一의 차원에서 새로운 사고와 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신데탕트의 새로운 상황속에서 南北韓의 정치 군사적 대립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극복해야 하는가를 살피고자한다. 이를 위해서는 1990년대 國際情勢의 변화가 韓半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남북관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에 南北韓간의 갈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평화체제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1990년대 新데탕트 國際秩序와 韓半島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따른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동서 양진영의 平和共存論으로 나타났다. 美蘇 정상들은 1989년 12월에 몰타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2차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冷戰을 종식시킴은 물론 새로운 미소협력시대의 개막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처음에는 구미지역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였지만 동서 양대진영사이의 낡은 이데올로기적 대결은 무너졌으며 군축이 광범위하게 실현되어 전후 冷戰體制의 뼈대인 알타체제의 붕괴를 낳았다. 그리고 동서 화해와 美蘇協力體制는 상당기간 深化 構造化될 전망이다.

이러한 미소주도의 冷戰體制의 약화와 신데탕트 國際秩序는 각 지역문제에 있어서 美蘇 영향력의 약화와 그에 따른 國際秩序의 지역화를 의미한다. 즉 각 지역국가들이 자신의 문제들을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거나 정치 경제적으로 협력을 증진하고 축소지향적인 軍事政策을 통한 안정된 세력균형의 유지 및 상호 신뢰의 구축을 통해 平和를 유지할 수 있는 地域安保體制를 모색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韓半島에 있어서 國際秩序의 지역화는 문제의 韓半島化를 의미하게 되었다.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演說(1986. 7. 28)과 크라스노야르스크 演說(1988. 9. 16)에서 아태 지역의 국가들에게 기회의 균등, 선택의 자유를 언급하고 이 지역의 平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具體적으로 안보 및 군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시아 안보회의 개최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또한 미소는 1990년 6월의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유럽의 冷戰秩序의 해체를 가져온 미소의 협력이 아시아지역에서도 가능하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그래서 韓半島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 등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相互協力을 다짐하였다. 韓半島문제에 관하여는 미소는 두 가지 점에

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는데 당면한 긴장완화책으로 남북간에 각료급협의 또는 고위급회담이 필요하다는 것과 유럽에서의 군축 및 상호신뢰군축 모델이 韓半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國際情勢의 영향과 더불어 1990년대의 韓半島는 몇가지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북한내부의 政權交替의 가능성이다. 현재까지 북한의 후계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된 상태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동구의 變革에서도 보여지듯이 開放과 改革의 물결이 북한에 파급되면 김정일 후계체제에 심각한 도전이 있을 것으로 豫想된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폐쇄정책을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의 장기집권과 부자상속은 심각한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될것이다. 더구나 현재 김일성의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 때 멀지않은 將來에 북한정권의 變化의 가능성이 存在한다. 이후에 등장하게 될 후계체제는 김일성정권과는 달리 다소 開放的이고 융통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南北韓간의 協商과 對話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주한미군이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 民主化가 더욱 진전되어 남북대화 의 장애가 되는 여러 제도들이 개선이 될 것이다.

국내외의 이러한 변화요인들은 장·단기적으로 南北韓관계의 개선을 促進할 것이다. 먼저 북한을 對話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여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는 토대를 만들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정착시키고 군비를 감축함으로써 冷戰의 비용을 민족경제의 발전으로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민족의 염원인 統一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에 기존의 冷戰的 사고와 政策에서 벗어나 새로운 질서에 부응하는 사고와 政策의 실시를 통하여 민족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Ⅲ. 南北韓間의 葛藤과 對話

#### 1. 南北韓 葛藤의 性格

葛藤이란 “당사자들이 각자 미래의 潛在的 지위가 兩立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상대방의 의사와 兩立하지 않는 위치를 점유하고자 하는 경쟁상태”로 正義할 수 있다.<sup>2)</sup> 갈등의 종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分類될 수 있으나 라포포트(A. Rapoport)는 갈등을 싸움(fights), 게임(games), 토론(debates)의 세가지 유형으로 分類하고 있다.<sup>3)</sup> 싸움형태의 갈등에서는 상대방이 제거되거나 사라져야 하므로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加害함으로써 구축시키나 굴복 파괴시키는데 있다. 게임유형의 갈등에서는 상대방이 제거되어야 할 적이 아니므로 게임의 規則내에서 상대방에 가해를 한다. 토론형태의 갈등에서는 행위자는 상대방의 心像을 자신의 심상에 調和될 수 있도록 誘導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세뇌, 설득, 대체될 심상에 대한 의구심제거 등의 手段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의 처리방법에는 중재(arbitration), 조정(mediation), 협상(negotiation), 법적 해결(judicial settlement), 비공식적 합의(informal consensus), 폭력(violence) 등이 있다. 그러나 국가간의 갈등은 항상 힘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갈등은 본질적으로 常存할 수 있는 要素이며 이의 효율적인 관리는 ‘갈등의 制度化’를 圖謀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이러한 갈등개념에 따라 南北韓의 갈등의 기본성격과 유형을 살펴보자. 南北韓간의 갈등의 기본적인 성격은 南北韓에 분단정권이 수립되는 과정속에서 주어진다. 2차대전의 종결에 따른 韓半島의 해방은 統一된 독립국가의



建設이란 민족적 과제를 부여받았으나 美蘇의 분할점령과 좌우익의 투쟁은 남북에 각각 社會主義政權과 資本主義政權의 수립을 가져왔다. 분단이 격렬한 계급투쟁과 정치투쟁의 産物이었기 때문에 남북의 정권은 상대방의 否定 위에서만이 그 존립이 가능하였다. 더욱이 한국전쟁은 남북의 폐허화 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뿌리깊은 불신과 적대감을 심어 분단의 內面化를 가져왔다. 이후의 남북관계는 協商과 對話보다는 상호비방과 부정 그리고 紛爭과 對決로 특징된다.

남한의 역대정권은 自由民主主義體制의 수호를 강조하면서 승공 또는 반공을 제일의 가치로 내세우고 북한을 타도해야 될 적대세력으로 規定하였다. 북한도 헌법과 노동당 규약에서 명시하였듯이 ‘資本主義의 사상을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 견결히 투쟁함을 바탕으로’ ‘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共產主義 社會를 건설하는데 있고’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sup>5)</sup>

이러한 南北韓의 시각은 상호부정과 일방만에 의한 승리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시각에서 연유하는 남북의 갈등은 제로섬게임(zero - sum game) 유형에 접근한다고 할 수 있다. 라포포트의 갈등유형에 따라 남북갈등을 고찰하면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싸움형태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잠재화된 갈등이 전쟁으로 폭발하지 않도록 南北韓 서로가 억제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紛爭이 잦아지고 強度가 높아지는 때에는 그 이후 對話와 協商의 제의들이 많았다는 한 연구결과에서도 확인이 된다.<sup>6)</sup> 싸움유형의 갈등에는 한국전쟁의 경험에 기초하여 안보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군비경쟁과 군사대치, 체제경쟁, 국제적차원에서의 외교경쟁 등이 포함되며 韓半



島内の 政統성 확보 노력이나 각자의 정책에 따른 통일의 성취시도 등은 게임유형의 갈등에 접근한다고 보여진다.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확산하려는 노력은 토론 유형의 갈등에 해당된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갈등은 혼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갈등행위 즉 상호비난, 군사적 충돌 혹은 간첩활동 등 직접적 상호작용의 형태와 外交舞臺에서의 경쟁적 행위, 개별이슈에 대한 비난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기존의 南北關係는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기인한 제로섬적 政策指向과 증강일변도의 軍備競爭 등 정치 군사적 대결과 갈등으로 특징지어진다.

## 2. 南北對話의 性格과 爭點

그동안의 南北對話를 살펴보면 韓國은 인도적 문제와 같은 비정치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옹호해 온데 반해 北韓은 韓半島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포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고 統一을 위해서 정치적 혁명적 접근방법을 主張해 왔다고 볼 수 있다.<sup>7)</sup>

韓國은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南北韓間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회복하여 가는 것이 對話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로 보고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등 비정치적 회담의 개최를 主張하였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70년부터 1988년까지 한군은 북한에 29회 제의를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이 '무력포기에 관한 宣言 또는 協定の 締結' '상호신뢰구축방안'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軍備統制問題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고 상호신뢰구축의 분위기 조성을 제일 중요한 첫단계로 제시하고 있다.<sup>8)</sup>

반면에 북한은 政治協商을 통한 일괄적 남북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여 대민 축회의 주장, 3자회담,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南北韓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

회의 개최를 主張하는 등 정치 군사문제에 압도적 비중을 두었다. 그동안에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비교적 변하지 않고 일관된 제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1) 통일이 북한정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점 (2) 미군철수와 미군보유의 핵무기제거를 지속적으로 主張하는 점 (3) 협상에서 정치 군사적 측면을 강조하는 점 (4) 점진적인 단계론을 부정하고 일괄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점 등이다.

그런데 南北韓은 상대방에 대한 심한 不信때문에 상대방의 提案을 심층있게 분석, 검토하였다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提案에 담긴 戰略的 의도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그에 따라 상대방의 提案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해 逆提案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의 提案은 결과로서의 군축을 선전하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및 순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對話의 상대에 대해서도 韓國은 북한정부와 한국정부를 유일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는 창구의 단일화 논리를 주장한데 비하여 북한은 한국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아 對話의 상대를 정당, 사회단체, 재야 등 민간차원으로 擴大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말까지만 해도 남한정부를 對話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 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회담에 참석하는 한편 별도로 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정치협상을 제시, 對話의 擴大를 꾀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남한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아 對話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반에 이르러 남한정부가 안정되자 3자회담을 제의(1984.1.11)하는 등 입장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적십자회담, 경제회담, 국회회담예비접촉, 로잔느 체육회담, 그리고 최근의 체육회담, 남북총리회담 등 정부간 對話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과의 平和協商締結 제의, 3자회담 제의 그리고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추진 등 협상대상의 전환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익환목사, 임수경 방

북, 전민련등 일부 재야단체와의 범민족대회 개최 합의, 최근의 남북영화제, 음악제 개최 등 민간차원의 對話도 적극 제의하고 있다.

南北對話에서의 북한의 입장과 자세, 주요 이슈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남북간의 對話와 交流에 있어서 정치 군사문제는 주요 爭點이 될 것이다.

그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韓半島의 비핵지대화, 정전협정의 平和協定으로의 대체, UN 가입문제, 군축의 절차와 내용 등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선군축 후신퇴 혹은 군축과 동시에 교류의 병행 입장과 韓國의 선신퇴 후군축 입장이 對立될 것으로 보인다.

#### IV. 南北韓間의 葛藤管理 方向

##### - 統一指向的인 平和體制의 構築

그동안의 南北關係가 갈등과 대결로 점철되었다면 새로운 國際秩序와 民族和解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1990년대에는 對話와 교류를 통한 民族統一의 토대를 형성하는 方向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적대의식과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止揚하고 韓半島에 평화와 안전을 정착시키는 南北 平和協商體制의 구축이 요구된다. 平和의 실현은 불신과 대결에서 벗어나 서로 상이한 체제의 존립을 인정하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政治 軍事的 信賴를 구축하는데서 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平和를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남북정부간의 協議을 통하여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관계를 正常化시키고 축소지향적인 군사적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또한 韓半島의 冷戰構造는 美蘇를 포함한 주변 4대강국의 利害의 대립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주변강대국들의 協力과 제도적 보장이 뒤따라야 韓半島에

명실상부한 平和體制를 구축할 수 있다.

### 1. 相互體制의 認定

韓半島에 平和體制構築의 선결요건은 南北韓이 분단이후 각기 상이한 발전의 길을 걸어온 현실에 대한 相互認定이다. 즉 냉전적 사고방식에 기초한 체제경쟁의식이나 정통성주장은 상대방의 실체를 부인하게 되고 제로섬적(zero-sum game) 政策指向을 나타나게 한다. 이것은 서로의 對話와 協商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힘의 대결에 의한 일방의 승리만을 추구하게 한다.

지난 40여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각기 고유의 資本主義와 社會主義의 발전전략에 따라 체제를 발전시켜왔다. 현재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의 그것을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고 蘇聯과 동구의 개방 개혁의 정책에서 보이듯이 현실사회주의의 문제점과 병폐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북한 社會主義體制를 부정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南北關係개선에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認定한 가운데 對話와 교류를 통하여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7.7선언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밝혔듯이 북한을 “이제 우리의 적이 아니라 民族共同體 건설을 위한 동반자”로 인식한 것은 南北關係에 대한 인식이 ‘적대개념에서 同伴者概念으로’ ‘대결에서 協力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것이다. 다만 선언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에 기초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때 북한의 인식과 정책의 변화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한도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社會主義의 革命의 완수’라는 統一政策과 대남 혁명노선을 포기해야 북한이 제기하는 여러 방안과 회담에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일관된 통일방안인 聯邦制案은 60년대의 ‘과도

적'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sup>10)</sup> 이 변화의 기저에는 남한과 북한체제의 相互認定과 共存이라는 기본인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간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정책은 이러한 변화가 단지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여져 신뢰를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南北韓의 움직임은 韓半島의 平和定着에 매우 고무적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南北關係는 체육교류, 총리회담, 영화제, 음악제 개최 등에서 보여주듯이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며 이는 상호신뢰를 구축하는데 토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화뿐만 아니라 南北韓의 相互體制認定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즉 南北韓간의 상호불가침 협정과 평화협정 등 기본조약을 체결하여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주변국가들의 교차승인은 남북정부의 실체를 국제적으로 인정, 合法化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교차승인이 '두개의 조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永久分斷化를 획책하는 음모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의 움직임에서는 이 입장에 조심스런 변화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한 - 소 수교를 합의하고 중국과도 가까운 시일내에 무역사무소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자 北韓도 美國 및 日本과의 관계개선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北韓과 美國은 1988년 12월 북경에서 참사관급 수준의 對話를 시작하였다. 또 89년 10월말에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지낸 켈슨 시거를 평양에 초청하여 美國과의 대화수준을 대사관급으로 격상할 것과 장소도 북경이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하고 그 회수도 늘릴 것을 요구 하였다. 그리고 日本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의 방북시에 일본과 북한의 조기 수교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sup>11)</sup> 이러한 움직임은 北韓이 실질적으로 남북 교차승인을 받아 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UN 加入問題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國際적으로 남북교차

승인이 진행되고 있고 남북화해와 대화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에 남북의 합의없이 유엔단독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北韓을 고립시키고 南北關係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남북합의시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2. 軍備統制의 方向

南北韓 平和體制 구축에 최대의 핵심적인 문제는 軍事問題이다. 南北韓은 해방후 약 40 여년 동안 相互不信과 적대감정으로 일관해 오면서 엄청난 군사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물론 무력의 증대로 潛在的 위기의식이 상승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군사력증대는 상호대결의 악순환과정이었다. 현재 韓半島에는 약 4,600여대의 탱크, 1,300여대의 전투기, 150만명에 가까운 병력이 포진하고 있다.<sup>12)</sup> 지상군만으로 보면 北韓과 南韓은 세계 6위와 7위의 병력보유국에 해당된다. 따라서 軍備統制는 民族 共同體 전체의 운명뿐만 아니라 南北統一을 앞당기는데 긴요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동북아 冷戰 構造를 혁파하고 協力體制를 구축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다.

원래 軍備統制는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의 제거보다는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며 전쟁의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과잉군사비에 의한 재정압박을 줄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韓半島에서 軍備統制가 제기되는 필요성은 위의 일반적 이유뿐만 아니라 남북의 특수한 여건에서도 찾아진다.

첫째, 民族共同體 개념에 입각하여 韓半島에 平和體制를 구축하고 통일에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남북의 정치 군사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다. 南北韓의 구축은 相互信賴를 전제한 것이지만 구축을 통하여 相互信賴를 증진시키고 점진적인 南北韓의 긴장완화는 물론 상호간의 平和協定이나 불가침선언이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民族和解 및 民族統一을 이룩하는



중간과정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둘째, 남북간의 경제적 부담에 따른 軍備統制의 필요성이다. 1987년말 현재 남한의 군사비는 약 57 억불(GNP의 약 5%)이며 북한은 약 40억불(GNP의 약 21%)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sup>13)</sup> 이는 군사비가 南北韓 양측에 주는 부담이 매우 큼을 보여준다. 특히 北韓이 군축문제를 강조하는 것은<sup>14)</sup> 군사비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南韓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北韓은 경공업 침체에 따른 산업간의 불균형, 과중한 외환도입에 따른 외채문제, 기술인력 및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기본적인 산업인력의 부족 그리고 식량사정의 악화로 경제가 심각한 곤란에 빠져있다고 한다. 더구나 동서화해의 분위기속에 전반적인 군사비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國際環境을 고려해 본다면 南北韓 군사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장기적으로 南北韓을 國際體制에서 뒤쳐지게 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셋째, 순수한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도 전쟁을 방지하고 군사적 균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軍備統制가 바람직하다. 즉 남북간의 軍備統制의 실현은 우발적인 사고에 따른 충돌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낮은 수준으로 軍事力 均衡을 유지함으로써 相互간 안정을 보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의 冷戰構造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2차대전 이후 冷戰의 산실이었고 세계에서 군사력의 밀도가 제일 높은 韓半島에서 軍備統制가 시작되어야 한다.

결국 군비통제는 南北韓간의 平和體制를 확립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平和統一의 길을 마련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軍備統制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南北韓은 軍事問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하면서도 군축의 방향과 절차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차이가 협상의 진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北韓은 先군축 혹은 군축과 신뢰구축의 병행을 주장하는데 반해 韓國은 先신뢰구축 後군축을 제

의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40여년간 적대적 관계와 상호불신하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해온 南北韓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약속이나 政策 그리고 협상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면에서 남북 모두는 상호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남한이 점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반면 北韓은 '군축을 통한 信賴構築'이란 일괄적인 해결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군축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합의사항을 실시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군축의 방향은 정치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 후에 실질적인 군축의 단계를 밟는 것이어야 한다.<sup>15)</sup>

먼저 政治的 信賴構築은 남북 상호간 교섭상대로의 認定 및 정부간의 회담과 교류를 통하여 조성된다. 南北韓간 공식, 비공식 접촉을 가능한 한 늘려 서로 상대방의 주장과 입장에 대한 신뢰감을 키워나가고 동시에 人的, 物的, 知的 交流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상호 중상 비방의 중지, 인도주의적 접촉과 교류의 실현, 經濟協力, 북의 혁명노선의 폐기 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軍事力의 운용을 통제(arms operational control)하여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이다. 軍事的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는 (1) 南北韓 쌍방의 軍事力과 의도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軍事情報의 교환과 통신의 유지 (2) 주요 군사활동의 공개를 통하여 군사력의 기동, 집중, 이동, 훈련의 운용적 통제의 모색 (3) 기습공격이나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로써 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 모색 (4) 불가침 선언 등이 있다.<sup>16)</sup>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일방적 방법과 쌍방적 방법이 있다. 일방적 방법은 고르바초프의 소련군 50만명의 일방적 減縮宣言이 유럽의 군축을 가져오게된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南北韓이 양보가능한 것을 일방적으로 宣言하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한 북한의 참가유도와 훈련의



일정 기간 중단 등을 고려할 수 있고 북한에서는 휴전선에 집중배치된 병력의 일부를 후방으로 분산배치하거나 攻擊型的 배치를 방어전력 위주로 바꾸는 것등을 생각할 수 있다. 쌍방적 방법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軍事委員會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상해 가야 한다.

이러한 信賴構築後에 南北韓은 실질적인 軍縮協商을 시작해야 한다. 즉 軍事力의 구조를 통제(arms structural control)하는 단계이다. 軍事力의 構造統制에는 軍事力의 증강 동결(freezing), 증강 제한(limitation), 감축(reduction)이 있는데 韓半島에서는 '축소지향적인 軍事力의 균형유지' 즉 군비 감축이 되어야 한다. 남북의 軍縮協商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sup>17)</sup> (1) 韓半島의 군축은 南北韓이 상호균형된 적정규모의 방어전력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 共同安保體制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군축은 병력중심보다는 武器體系中心으로 이루어져야하며 장비감축에 상응하여 상비전력의 감축, 그리고 예비전력의 감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3) 주한미군의 감축은 南北韓 군축과 연계하여 실현한다. (4) 국제합동감시단 등을 운용하여 감시, 검증하고 합의사항 위반시에는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남북의 軍縮協商시에 주한미군과 핵무기, 한미합동군사훈련, 그리고 작전통제권문제가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방의 相互認定 문제에서 볼 때 韓國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갖는 것과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남북군축협상에 있어서 韓國이 책임 있는 당사자라는 신뢰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南北對話의 주요한 중단이유가 되었던 팀스피리트훈련은 원활한 南北對話를 위해서 중지 혹은 규모의 축소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는 韓半島에 平和가 정착되고 구체적인 군축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단계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sup>18)</sup> 北韓은 韓半島의 비핵지대화를 가장 큰 이슈로 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철수전에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도 北韓의 신뢰와 양보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핵무기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韓國내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軍縮協商에는 많은 제약이 가로 놓여 있다. 먼저 北韓의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이고 더불어 南北韓의 전략개념과 무기 체계, 표준 및 배치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더욱 필요하며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3.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國際協力 方案

韓半島의 평화보장은 단순히 南北韓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주변국가들의 이해조정과 協力を 바탕으로 하는 지역적 안보체제의 구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현재 韓半島는 물론 동북아에서 평화보장을 위한 가장 큰 장애는 한국전쟁이후 심화 확대되어온 冷戰構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 미, 일 삼각안보동맹과 북한, 소련, 중국의 군사동맹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 대립은 새로운 국제질서속에서 서서히 붕괴되고 있지만 현시점에서 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南北韓과 美 蘇 中 日과의 관계정상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소련과 수교, 중국과 무역사무소 설치합의등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추진으로 어느 정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일본과도 조기수교에 합의하였다.

이렇게 관계가 정상화되면 兩者的이든 多者的이든 平和條約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平和條約안에는 한국전쟁의 종식은 물론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주권존중, 현 국경선 및 휴전선의 보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등이 포

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韓半島 평화보장을 위한 남북과 주변국들이 참여하는 集團安保會議를 구상할 수 있다.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의 UN 연설(1988.10.18)에서 제의한 東北亞平和協議會의 구상으로 구체화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은 韓半島를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하여 韓半島 주변세력으로 이른바 미, 소, 중, 일 및 남북으로 구성되는 동북아평화협의회의 개최를 제의하였다. 한편 아시아지역의 새로운 질서에 대한 소련의 구상도 헬싱키협정에 의거한 유럽安保協力會議과 유사한 형태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합의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세바르나제 前 소련외무장관은 일본과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南北韓을 포함한 미 소 중 일 등 주변국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의 常設化를 언급하였다.<sup>19)</sup> 이러한 국제회의의 상설화를 통해서 韓半島에서 무력사용의 금지와 南北韓에 대한 주변강대국들의 간섭 및 군사적 지원의 중지, 南北韓간의 내정불간섭 등의 원칙이 합의되고 對話의 교류를 통해 紛爭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V. 맺 음 말

그동안 南北韓의 敵對關係는 서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과 장애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는 비민주적 요소를 合理化시켜 주었고 경제적으로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방해하였으며 과다한 군사비지출로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민족동질성을 크게 훼손하였고 고유의 민족문화의 왜곡과 변질을 가져왔다. 그러나 급변하는 세계속에서 우리 민족만 '冷戰의 孤島'로 남아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韓半島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 발전

의 방향으로 南北關係는 진전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소련과 동유럽에서 시작된 신데탕트의 영향이 세계질서를 재편하면서 韓半島에도 파급되고 있다. 南北韓은 이제까지의 戰爭對備型 軍事競爭에서 平和追求型 相互協力體制로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南北韓 관계가 대결과 갈등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이러한 갈등을 제도화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할 時期이다. 이것은 南北協力關係의 制度化를 통하여 平和體制를 수립 공고히하고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統一을 지향하는 기초를 닦을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국내외질서를 여는 1990년대의 南北韓의 갈등은 平和體制의 수립을 통해 제도화되고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平和體制의 확립은 南北韓의 相互認定속에서 서로의 신뢰를 쌓고 그를 바탕으로 군비를 축소시켜 韓半島에 전쟁상태를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종식시킴으로써만 可能하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韓半島의 冷戰構造는 주변 강대국들의 利害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韓半島의 平和體制는 국제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 第1章 〈註〉

- 1) 〈한겨레신문〉, 1990.9.1
- 2) K.E. Boulding, Conflict and Denfense : A General Theory(N. Y. : Harper and Brothers, 1963) p. 5.
- 3) A. Rapoport, Fights, Games, and Debates(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0)
- 4) 구영록, 〈인간과 전쟁〉 (서울 : 법문사, 1986), pp. 55 - 59.
- 5) “조선노동당 규약”, 〈原資料로 본 北韓 1975 - 1988〉 (동아일보사, 1989), pp. 341 - 342.
- 6) 김선호, “南北韓 關係의 類型分析 - 갈등과 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서울대, 1989) pp. 38 - 39.
- 7) 곽태환, “南北韓 對話와 協商戰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제3권 1호(1987), pp. 165 - 166.
- 8) 박홍규, “南北韓 軍事問題에 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1989.9), p.13.
- 9) 김세균, “통일정책”, 최명 편, 〈북한개론〉 (을유문화사, 1990), p.659
- 10) 〈노동신문〉, 1984. 1. 11.
- 11) 〈한겨레신문〉, 1990. 9. 27.
- 12) IISS, The Military Balance 1988 - 1989, pp. 167 - 169.
- 13) 박홍규, “南北韓 軍事問題研究”, p. 24.
- 14) 일반적으로 군사문제에 대한 제안은 한국이 30 - 60여회, 북한이 200여회 한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상섭, “北韓의 軍縮制案”,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 (통일원, 1989), p. 102.
- 15) 소련의 학자들도 남북한 관계의 정상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그리

고 남북한 군축과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3단계의 군비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임동원, “韓半島의 軍備統制는 시대적 요청이다” 〈한국논단〉 (1990.7) p. 31.

16) 하영선, “韓半島의 現實的인 軍備統制 方案”, 한반도군비통제의 방향 세미나 발표논문, (외교안보연구원, 1990.8.31), p. 4.

17) 임동원,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시대적 요청이다”, pp. 36 -37.

하영선, “한반도의 현실적인 군비통제 방안”, p. 5.

18) 하영선, “韓美 軍事關係의 當面課題”, 〈남북한의 평화구조〉 (법문사, 1990), pp. 107 - 111. 참조.

19) 〈한겨레신문〉, 1990. 9. 1.

## 參考文獻

- 具永祿 외, 〈南北韓의 平和構造〉 (법문사, 1990)
- 국토통일원, 〈南北韓 分斷現況 克服 方案研究〉, 1988.
- 국토통일원, 〈金正日體制하의 北韓軍事政策 展開樣相 예측〉, 1987.  
〈韓半島의 軍縮과 平和〉, 1989.
- 김선호, “南北韓 관계의 類型分析 - 갈등과 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 1989)
- 김국진, “東北亞 平和協議會議 具現方案 研究”, 외교안보연구원, 1989.9.
- 노경수, “韓半島에서의 信賴構築과 武器制限措置에 대한 展望” 최종기편  
〈아태지역의 신국제질서〉 (한국국제관계연구소, 1990)
- 박홍규, “南北韓 軍事問題에 대한 研究”, 외교안보연구원, 1989.9.
-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國際的 協力 및 保障方案에 관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1990.4.
- 梁性喆, “南北韓 軍事力과 同盟體制”, 〈사상과 정책〉 (1989, 여름)
- 崔明 編, 〈北韓概論〉 (올유문화사, 1990)
- 하영선, “韓半島 軍備縮小의 現實的 모색”, 이호재편, 〈한반도 평화론〉 (법  
문사, 1989)
- A. Rapoport, Fights, Games, and Debates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0).
- K.E. Boulding, Conflict and Defense : A General Theory (N. Y. :  
Harper and Brothers, 1963).

## 第2章 北韓의 軍事政策 變化展望과 軍隊의 平和的 利用可能性

— 任鏞淳 (成均館大 教授)

I. 머리말 .....	27
II. 北韓의 軍事 Doctrine .....	29
III. 北韓의 軍事政策 .....	34
IV. 北韓의 軍隊와 統一政策 .....	39
V. 北韓의 軍事戰略의 傾向 .....	43
VI. 軍隊의 平和的 利用 .....	46
VII. 맺음말 .....	49



## I. 머리말

世界情勢는 숨가쁘게 변하고 있다. 소련에서 시작한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였고, 드디어는 전통적 共產主義를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협상끝에 INF조약을 체결하는데에 성공하였다.

부시행정부와 고르바초프정권은 구라파에서 전략무기 뿐만 아니라, 재래식 軍備를 줄이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그라스노스트 정책에 힘입은 동구라파는 소련보다 한발 앞서는 內政改革을 단행했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이 民主化 되었고 보수적인 루마니아도 차우세스쿠를 몰아내고 혁명을 수행했으며, 동독은 곧 서독과 병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情勢는 극동에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1975년 주은래에 의하여 제창되었고, 덩소평이 집권한 이래 실천에 옮겨졌던 改革政策이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급변하는 經濟政策은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게 되어, 1989년 6월에 천안문 사태를 야기시켰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986년 블라디보스톡에서 행한 演說에서 고르바초프는 소련이 태평양국임을 宣言했다. 1988년 크라스노야르크에서 고르바초프는 동북아세아에서 평화수립을 천명하였다. 또한 1989년 5월에 덩소평과 고르바초프는 頂上會談을 가졌으며, 소련과 중국간의 軍備縮小協商에 박차를 가했다. 가까운 몽고공화국도 內政改革을 단행하여 民主化를 실험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부단한 노력과 國際情勢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과 중국, 또한 한국과 소련의 友好關係가 급진전했으며 한국과 소련의 國交正常化가 올해안에 이루어 지리라고 예견된다. 또한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북한과 일본과의 國交關係도 正

常化 되리라 본다.

이와 더불어 南北韓關係의 개선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남북한도 세차례의 총리회담을 가졌으며 제4차 총리회담은 내년에 開催될 豫定이다.

과연 이같은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명한 점은 동북아세아에 있어서 平和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韓半島를 중심으로 열강국이 적대적 경쟁이 아닌 데탕뜨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制度化되었던 냉전상태가 종말을 고하게 된것이다.

이같은 변화가 북한 軍事政策의 변화를 초래하였는가? 물론 세월이 가면 북한의 軍事政策도 현실적 변화를 수용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북한이 軍事政策을 변경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국제적 데탕뜨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기본적인 軍事政策에는 변화가 없다고 볼수있다. 이같이 주장하는 이유가 몇가지 있다.

첫째, 어느 사회에서나 軍事政策은 가장 보수적인 정책이다. 국방은 성격상 함부로 변화시킬수가 없다. 따라서 國防政策 입안자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면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한다.

둘째, 軍事戰略의 변화에 앞서 사회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즉 技術革命이나 사회적 변화가 있은후에야 軍事政策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다. 현재 북한의 변화조짐은 보이나 혁명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셋째, 政治構造의 변화가 흔히 전략적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북한에서 정치적 동요가 있음은 분명하나, 김일성이 생존하는한 政治構造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넷째, 정치 및 군사지도층의 변화가 있을때 軍事政策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엄청난 세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치지도 체제에는 변화가 없다. 이같은 이유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북한의 전통적 軍事政策에서 변화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 II. 北韓의 軍事 Doctrine

故 소코로프스키(Sokolovskiy) 소련군 원수는 군사 독트린을 정의하기를 “未來의 戰爭에 대한 태도, 전쟁의 본질, 전쟁을 위한 경제적 및 도덕적 준비, 군사조직 및 전투를 위한 준비 등에 대한 정치적 평가 및 신념을 의미”한다고 했다. 즉 軍事政策은 한 국가가 지니고 있는 軍事的 신조 즉 독트린에 기초하여 세우게 되어있다. (소코로프스키, 1975 : 38)

이제 북한의 軍事的 信條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몇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북한의 군사이론은 맑시즘과 레닌이즘이란 정치적 이념에 근거를 두고있다. 이들의 이론은 특히 민족해방을 위한 戰爭論을 강조한다. 즉 레닌에 의하면 전쟁이란 사회변천의 결과이며, 全體的 사회의 변화는 정치로서 대표된다. (레닌, 1932) 전쟁은 정치의 계속이며, 전쟁중에도 정치는 계속된다. 전쟁이란 사회변화의 변증법적 결과이기에, 계급이 존재하는한 피할 수 없는 결과이다.

특히 전쟁은 帝國主義에 의해서 시작되며 중국에는 혁명으로 연결되어 민족 또는 억압되어 있는 階級의 解放을 초래하게 된다. 이같은 개념에서 볼때 전쟁은 2개의 군이 전투장에서 전투하는 것 이상이다. 즉 전쟁은 大衆의 전쟁이 되며 피지배자의 해방운동이 된다.

이는 傳統的 概念의 軍의 역할과는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개념에 있어서 군은 民間人이 外交에 실패했을 경우 정치적 목표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사용된다. 하지만, 민족 혹은 民衆解放의 전략개념에 따르면 군의 역할이 방대하다. 군은, 국가의 방어에도 사용되지만, 선전, 교육, 위생, 大衆의 煽動 및 정치교육 등에 종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군은 人民軍이 되어야 한다. 인민군은 시민과 비교적 統合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民族解放의 신조를 기초로 한 인민군은 2개의 목적이 있다. 첫째는 북한

을 방위하는 것이고, 둘째는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김일성 자신도 民族解放을 강조하면서, 인민군의 사명을 “미 제국주의자들과 꼭두각시, 지주, 자본가, 친일파를 몰아내는 것이며, 이로써 南朝鮮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서 인민군을 강철과 같은 간부의 군대로 키우기 위하여 인민은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1971 : 28)

이 概念은 몇가지 전략적 의미가 있다. 북한은 民族解放革命과 民主革命이라는 개념을 병합하여 民衆民主革命이라는 개념을 수립하였다. 이 해방전략에서는 노동자, 농민, 지성인 등의 정치적 聯合戰線이 필요하다. 또한 민족해방을 성취하기 위하여 인민군은 幹部화된 군인으로 정치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군인이어야 한다. 즉 정치적 지원을 국민으로부터 창출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민군은 전투만 하는 군인보다는 民衆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민군이어야 한다. 김일성은 강조하기를 “인민군은 현대무기, 전투방법, 현대기계, 군사학등 現代戰이 요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군은 노동자, 농민, 또는 다른 인민을 항상 도와야 한다. 인민군이 정치적으로 강화되면 無敵의 군이 될 수 있다.” (김일성, 1974 : 279)

둘째로, 北韓은 군사전략 독트린의 일부로써 모택동의 전략사상을 도입하였다. 특히 모택동의 大衆路線(Mass-line)과 遲久戰(Protracted warfare)은 北韓戰略의 일부가 되었다. 모택동은 군이 大衆의 문제에 항상 관심을 두고, 大衆生活을 組織化하는 역할을 하면 戰時에 大衆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교시했다. (Maozedong, 1954 : 135) 모택동은 간부화된 군은 항상 大衆을 존중하고 大衆을 도와주고, 大衆을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인민군은 融通性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적의 후방에 침투하여 적의 뒷전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후방의 교란이 계속되면, 정부군은 피해가 심한 後方戰鬪에 개입되어야 한다. 이것이 극심하면 국민

의 지원을 상실하게되는 지구적인 內亂으로 이행 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인기를 잃게되면 政府軍은 전의를 상실하게된다. 이것이 지구전의 시작이며, 특히 장기적인 게릴라전을 계속하려면, 적의 배후에 거점기지를 確保하여야 한다. 이 이론은 몇가지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 이 개념은 正規戰과는 달리, 적의 전방에서의 전투력을 제거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요한것은 국민의 戰爭意志를 제거하는 것이다. 즉 게릴라전을 지속하여 적군을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 前方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인민군은 후방에 침투하여 국민을 설득, 협박하여 정부군을 배반하게 하여 정부군의 지지기반을 와해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략은 후방 民間人 사기를 저하시켜 후방을 파괴시키고 정신적인 結束力을 제거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김일성도 이같은 모택동의 전략을 제5차 勞動黨 中央委員會에서 제시했다. 여기서 김일성은 “전쟁의 운명은 현대무기나 軍事的 技術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김일성, 1970 : 87) 즉 전쟁의 승패는 인력과 물자가 전방 뿐만아니라, 적의 후방에서도 오랜기간동안 공급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즉 전쟁의 勝利는 사병과 장교간의 同志愛, 군의 의식적 기율, 軍과 大衆사이의 혈연과 같은 一體感形成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적으로 우세한 적도 이길 수 있다고 보았다.

北韓의 전략 독트린을 신봉하는 指導部에서는 현대전쟁에서 기술적 능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國民全部가 참여하므로써 적이 후퇴할 수 있는 길을 막는데 있다고 믿는다. 또한 北韓은 월등한 조직력과, 사회의 결속력, 인민군의 훈련등으로 資本主義인 한국과 결전하여 오랫동안 지탱을 할 수 있기에 결국 피곤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한국의 大衆이 정부에 반항하여 봉기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北韓의 전략은 韓國國民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김일성은 누차 統一을 위하여 한국에서 革命黨을 창설하것을 주장했다. 즉 한국의 혁명당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등과 聯合戰線을 구성하여 大衆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大衆의 지원을 받으면 혁명군은, 노동자, 농민, 지성인, 학생등의 연합전선을, 鬪爭을 위한 길로 先導할 수 있다. 김일성은 또한 全國의 혁명을 위하여 3가지 능력을 키울것을 제창했다. 즉 北韓의 정치, 경제 및 군사력의 강화, 정치혁명을 통한 南韓 革命力量의 강화, 한국인과 國際革命역량의 강화 등이다. 물론 현단계에서 국제혁명 역량은 중요하지 않으며, 北韓과 남한에서의 혁명역량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이는 모택동이 사용하였던 전략이다. 이 전략이론은 몇가지 軍事的 의미가 있다. 물론 대량보복에 의한 速功戰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되, 남한을 패퇴시키려면, 게릴라전이 효과적이며 이에선 지속적인 민중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情報의 收集, 필요한 보급의 충당, 지리적 요건의 파악은 게릴라전에 절대 필요한 것이다. 고로 인민군은 人民이 되고, 人民大衆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로 중요한 北韓의 군사독트린은, 김일성의 항일투쟁 經驗과 한국전쟁의 經驗에서 연유한 것이다. 北韓은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크게 선전하고 있다. 전문섭(1979 : 39), 또는 김일성의 전기를 쓴 백봉(1969)에 의하면 혁명에 성공한 이유는 김일성의 항일투쟁 경험에 의한것이라고 주장한다. 여하튼 일본과의 투쟁, 한국전쟁 과정에서 얻은 전투경험은 北韓의 군사전략의 基幹이 되었다.

김일성이 주장하는 “주체”사상은 정치이념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주체사상은 한국혁명을 위한 공산주의 이념과, 자기나름대로의 民族主義를 결합시킨 政治理念이다. 김일성은 이를 인민군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戰略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인민군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해야 혁명전쟁에 승리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은 일본의 강력한 軍隊가 민족해방을 방해했고,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남한의 해방을 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北韓의 지도층은 재래식의 군사력만 갖고는 統一이 어렵다고 본다. 즉 강력한 民衆의 蜂起만이 강력한 外敵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다.

外國軍의 강력한 힘을 두려워한 北韓은 항상 통일을 논할때,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외국군이 존재할 경우, 월남에서 경험했듯이, 게릴라전을 활용한 지구전이 외국군의 철수를 강요하는 가장 效果的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고로 민중의 협조와 봉기가 더욱 필요하다. 이같은 長期戰을 할때나, 적의 후방을 攪亂시키는 전술을 사용하는데 주체사상은 현실적 軍事作戰에 도움이 된다.

滿洲에서 遊擊戰을 할때나, 한국전쟁동안에 김일성은 악조건에서 전투를 수행해야 했다. 빨치산은 흔히 主力部隊와 보급이 차단되었고, 통신이 두절되곤 하였다. 대피처의 부족, 식량난, 때로는 탄약의 부족 속에서 고립되기가 일쑤였다. 상부로 부터 적절한 지시를 받지 못할때 전반적인 軍事作戰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 경우 고립된 빨치산은 독자적인 능력을 키워, 자급자족할 수 있는 군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김일성은 “인민군은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손에는 망치와 호미를 들어야 된다”고 교시하였다. (김일성, 1968 : 13) 즉 인민군은 情報의 획득, 필요한 물자의 획득, 때로는 무기의 제조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革命軍은 혁명을 위하여 스스로 작전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人民軍이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음으로써, 군의 자신감 확립과 충성심을 공고히 해야한다. 그리고 인민군은 국가에 충성하고, 결속력이 있는 자주적 군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主體的 군 또는 自主的인 군은 작전상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즉

인민군은 지역의 조건에 適應할 수 있어야 한다. 군은 해당지역의 민간인과 밀착되어야 하며 민중을 이끌어야 하며, 民衆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군은 자연환경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즉 군은 어떠한 역경에서도 스스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主體思想은 政治的인 의미에서는 외국세력, 특히 한국에서 미국세력을 몰아냄을 의미하고, 軍事的으로는 게릴라 지구전을 수행할 때, 자주적인 군인이 됨을 의미한다. 즉 北韓의 중요한 군사 독트린의 요소는 民族·民衆解放戰, 遲久戰, 主體的 軍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소련전략의 영향을 받아 한국전쟁에서 보듯이 全面戰을 기초로한 速功戰도 감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 Ⅲ. 北韓의 軍事政策

위에 기술한 군사독트린은 北韓의 軍事政策에 기초가 되고있다. 北韓의 軍事組織은 표면상으로는 소련의 편제를 사용하고 있고, 戰鬪教範도 소련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1956년 이후 제도 및 조직, 교범은 계속 답습하나, 軍事教育의 내용이 점차 주체 및 게릴라 지구전을 고려해서 再編되었다.

北韓인민군의 훈련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첫째는 용기이다. 용기는 다른 군과민중을 지도하고 이끄는 능력을 키운다. 둘째는 육체적 단련과 전투력을 위한 강한 의지, 셋째는 책임감, 넷째는 기율, 즉 군의 法과 規約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 다섯째는 組織能力이다. 組織能力은 군의 해체된 단위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뿐만 아니라, 세포조직을 통해 민중을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여섯번째, 악조건에서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忍耐力, 일곱번째는 인민군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信念과 낙관적인 견해의 수립, 여덟번째는 結束力과 團體行爲를 할 수 있는 능력, 아홉번째는 노동자의 혁명적 기질의 습득, 열번째는 당과 革命課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 등이다.

이 10개 軍事訓練 강령의 이행은 군사 독트린과 연관이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Military Mind를 갖고 있다고 볼수있다. 인민군은 民衆解放 전략을 위해서, 훈련이 안되어 있는 민중을 조직하여 혁명세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군은 민중과 군의 結束力을 유지하는 한편, 인민군과 당과의 結束力을 유지해야 한다. 이같은 結束力을 창출하기 위하여, 인민군은 혁명사상을 대중에게 전수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훈련 기간동안 인민군의 民衆解放運動에 대한 이해가 강조된다.

게릴라전을 확산시켜 수행하려면 먼저 군대가 존경받을수 있어야 한다. 특히 게릴라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인해야 한다. 게릴라전은 지루한 전투이고 孤立狀態에서 수행해야하는 전투이기 때문에 인내력과 紀律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립해서 전투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인민군은 구조대와 보급이 반드시 올것이며 혁명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또 인민군은 이 전투기간에 당해 대한 충성심이 확고해야 한다. 또한 자주적인 군인이 되고, 자기부대를 自主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식, 탄약, 보급품 등을 직접 구해야 하며, 적의 후방을 교란하기 위하여 스스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이같은 작전은 戰術的 明確성과 기동력이 필요하다. 때문에 인민군은 본인과 이를 따르는 무리들과 혁명과업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야하며 이 10개의 군사 훈련강령을 충실이 수행하고자 한다.

主體思想은 北韓의 전반적 軍事政策에 영향을 주고 있다. 北韓의 군의 규모나, 戰鬥力이 韓國보다 우세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해군을 제외하면 육군, 공군력은 단연 앞서고 있으며, 北韓의 전반적인 재래식 군비도 우세하다. 北韓이 게릴라 전에 치중을 하고 있으면서도 재래식군비의 우위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바로 主體意識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

韓國戰爭 동안에 미군의 개입으로 武力統一이 실패하였다. 전쟁동안에 소련과 중공군의 구원으로 참패는 면했으나, 전쟁이 악화되면서 소련과 중공은 北韓에 休戰하도록 강요했다. 특히 소련은 전쟁초기에는 北韓을 격려하였으나, 소련의 이익에 불리하자 휴전을 강요했다. 결국 北韓이 배운것은 외국 의 지원이나 외국군은 별로 신뢰할 수 없으며, 독자적인 군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韓國과 전쟁을 하게되면, 韓國軍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원군과도 전투를 해야한다. 이 경우 소련과 중국이 참여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韓國軍과 美軍에 대처하려면 우선 재래식 전투에서 한미 연합군을 일차적으로 격파하면서 동시에 후방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韓國의 지형적 이유때문에 韓半島에서의 전쟁은 최종적으로 지상군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기에 北韓은 엄청난 규모의 지상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군력도 지상군의 보조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6.25전쟁때와 마찬가지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래식 군비를 사용한 速功戰으로 통일을 이루고자 할때, 北韓은 군사적 선택권을 갖기를 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軍事政策을 韓國과는 달리, 외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主體的 공격, 방어, 主體的 統一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려는 北韓의 軍事政策은 그들 나름대로의 주체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北韓의 士兵訓練 계획과정 또한 군사독트린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장교의 훈련과정은 더욱 철저한 것이지만 사병교육과정을 보아도 “인민군”을 만들려는 시도를 엿볼수 있다. 일년 466시간의 훈련중에 무려 122시간이 정치적 강의로 130시간이 軍事戰術訓練으로 배정되었다. 이에 비해서 무기사용 및 사격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 120시간이며, 교련시간이 22시간, 화

생방전을 위하여 20시간, 체육시간이 24시간, 나머지 시간은 공학계몽, 위생교육, 독도법사용 등에 이용하고 있다. 결국 25퍼센트의 시간을 정치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셈이다.

政治教育의 주내용은 주체사상과 맑스-레닌주의이다. 군사작전, 공학, 정치교육 등은 전투시 자주적인 인민군으로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 또한 北韓軍은 게릴라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 教育內容을 보면, (1) 도시와 농촌에서 게릴라 전법, (2) 위력있는 특수탄약 사용법, (3) 적을 독살시키는 법 (4) 간접침투방법 (5) 야영법 (6) 기습공격 (7) 매복 (8) 후퇴법 (9) 시설파괴법 (10) 비밀정보활동 (11) 장애물 제거법 (12) 人身保護法 등이다. 또한 시한폭탄장치법, 무음향 권총사용법, 최루탄, 모터보트 등에 대한 훈련도 받는다.

그리고 인민군의 내적인 결속과 당에대한 충성심을 보장하기 위하여 政治將校를 배치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정치담당 간부는 의무병인 사병출신이나 민간에서 차출하는 경우가 많다. 인민군을 民衆과 連繫하려는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치장교는 당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므로써 당과 인민간의 결속을 도모한다.

北韓은 正規軍外에 보안군(치안대)과 의용군을 보유하고 있다. 치안군과 의용군(적위대)은 AK 소총, 기관총, 때로는 야포로 무장한다. 이들의 기본적인 임무는 인민군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이 赤衛隊의 훈련은 남자는 18세에서 45세까지, 혼자사는 여자는 18세에서 35세까지 의무적이다. 예비군들은 방어가 주목적이나 주로 장기화될 게릴라전에 대비한것이다. 이 기구는 당의 軍事委員會의 지시를 받고있다. 적위대는 도, 시, 및 심지어는 직장하부단위까지 조직되어있다. 1000명이상의 단위는, 76.2mm 야포와, 120mm 박격포, 14.5mm고사포 등으로 무장되어있다.

예비군은 北韓에서 몇가지 이유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北韓은

인민전쟁의 개념을 수용한다. 또한 지구전이 계속될때, 예비군은 사회동원 및 통신시설의 설치등 정규군의 활동을 보조하며 게릴라전이 계속되면 게릴라전에도 참여해하 한다.

또한 韓國의 인구는 北韓에 비하여 두 배가 되므로 잠재적인 軍事力은 韓國이 월등히 높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北韓은 군의 복무기간을 늘리고, 예비군을 증가함으로써, 인구의 차이에서 오는 결함을 보충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비군은 民間人을 통솔하는데도 사용되고 있다.

이제까지 北韓의 군사 독트린에 근거한 戰略政策을 논하였다. 하지만 北韓은 기회가 생겼을 때는 大量先制奇襲 및 전면전을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예로써 현재 北韓의 재래식 군비는 상당한 것이다. 현재 北韓은 93만이라는 陸軍을 유지하고, 7만의 海軍을 유지하고, 4만명의 空軍력을 양성해서 전체의 병력은 1,040,000이나 된다. (1989, IISS 자료참조) 北韓은 750대의 제트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北韓이 126대의 水陸兩用艇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3500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개의 땅굴을 파놓았고, 대량의 병력이 軍事分界線 근방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北韓의 全面攻擊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초기 北韓의 軍事戰略 뿐만 아니라 軍事組織도 소련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6.25때의 전면적 攻擊戰略은 미군의 간섭이 없었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었다. 승리의 가능성은 역시 軍事力의 우월성이었다. 현재 北韓의 군사적 우월성이 지속되고 미군철수가 실현되면 北韓의 전면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현재 北韓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에 봉착해 있다. 경제문제, 여타 공산국가들의 變身, 무리한 권력계승 개인승배 및 철저한 전체주의의 문제, 상대적으로 韓國의 經濟發展 및 外交活動의 성공 등은 北韓을 괴롭히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체제를 유지하고, 住民團結을 위하여 전면전을 감

행할 위험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 IV. 北韓의 軍隊와 統一政策

김일성은 北韓을 요새화해서 침투불가능하게 하고 남한의 혁명과 미군의 철수를 통해 民族統一을 달성하며, 世界社會主義 革命을 위해 노력할 것을 누차 강조하였다. 이같은 목적을 이루는데 인민군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다. 즉 北韓의 統一政策은 군사 독트린과 軍事政策에 기초하고 있다.

北韓은 統一을 위하여 韓國에 혁명기지를 수립하려고 노력했고, 해외에도 군장비와 군의 고문단을 파견하였으며 여러 장소에서 김일성은 억압받은 민중을 해방시키겠다고 누차 선언했다. (김일성, 1968) 김일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北韓의 요새화와 남한의 민중혁명이다.

北韓의 공격전략은 기본적으로 韓國統一을 염두에 두고 수립되었다. 北韓의 공격전략을 수행하는데에는 미국과 일본이 결정적인 장애물이다. 과거에 미국은 北韓의 統一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北韓은 항상 韓國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 韓半島에서 핵무기 철수, 韓美合同訓練인 팀스피리트의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990년 9월에 서울에서 있었던 南北韓 總理會談에서도 이점을 분명히 하고있다.

北韓이 韓國과 전쟁을 수행할 경우, 설혹 미군과 대치하여 재래식 전쟁, 혹은 게릴라전을 일으킬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이 미군이 소유하고 있는 핵무기이다. 北韓의 압도적인 軍事力에 대해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北韓은 제3세계를 통해 혹은 미국의 여론을 동원해서 미군철수를 부추기고 있다.

다음의 걸림들은 일본이다. 北韓은 누차 美·日·韓國의 同盟關係를 해체

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北韓은 韓國의 經濟發展과 그에 따른 軍事力의 잠재력 개발을 위한 일본의 도움을 염려하고 있다. 韓日經濟協力은 미국의 극동정책에서 韓半島에 더많은 이해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본다. 北韓은 종종 韓國에서 일본의 군국주의가 부활하고, 미국이 太平洋同盟關係를 형성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판문점에서의 소요, 國際的 여론화 등을 통해 北韓은 일본과 미국이 韓半島에서 물러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제 統一을 위한 北韓의 軍事政策의 실현과정을 살펴보자. 제1단계는 물론 6.25전쟁기이다. 北韓은 소련의 전략을 답습하여 남침을 감행했다. 즉 충격군과 기동군의 개념을 도입하고 화력과 기동력을 중심으로 정지함이 없이 치열한 공격을 시도했다. 또 北韓은 기갑, 포병과 보병의 협조에 의한 3각 攻擊形態를 취했다. 하지만 北韓은 실패하였다. 그들은 실패이유를 몇 가지 지적하고 있다. 첫째는 대대적인 機甲의 전진이 韓國의 지형조건에 적합하지 못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둘째는 후방교란작전의 실패, 셋째는 남한군의 저항력에 대한 과소평가, 넷째는 미군의 참전 등이다.

終戰이 된후 북한은 전쟁후유증을 치유하며, 북한의 軍事戰略에 대한 재평가와, 김일성의 군사사상에 의한 전략이론을 개발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소련군사작전 방법을 대폭 수정하고, 중국의 경험을 재고하여 나름대로 북한에 맞게 군사 독트린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서 1960년까지 북한은 軍事力의 동원 보다는 政治的 공세를 중심으로 대남작전을 세웠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한국에 聯邦統一論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인 방법이 실패하자, 북한은 다시 統一政策을 軍事的 정책으로 전환하여 소위 민중의 민주주의 혁명론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반역자, 反動官吏, 위선적인 정치인에 반기를 들 연합전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에 혁명지하조직을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김일성은 한국에 自體의 共產組織을 세우라고 교시하고 다음과 같은 지시를 하였다. 첫째 남



한내의 혁명세력을 유지하고, 둘째 革命黨을 재건하고, 셋째 국민들의 혁명 의식을 높이고 넷째 혁명세력을 증대시키고, 다섯째 노동자, 농민, 학생, 지식인 사이에 聯合戰線을 형성하고, 여섯번째는 반미를 위한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신문: 1966)

이 전략은 민중봉기를 중심으로 미군철수를 꾀하고 적당한 시기에 북한이 軍事的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같은 軍事力을 사용한 統一政策이 1966년 이후는 점차 노골화 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聯邦制를 제시 하면서 또한 7.4공동 성명을 공표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또 북한은 대량간첩 침투를 시도했고, 김신조를 위시한 特攻隊를 한국에 침투시켜 혼란을 야기 시키려 하였고, 땅굴을 굴설하고 통혁당과 같은 지하조직체를 재건하려 시도하였다. 이와함께 미국신문에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美國輿論을 움직여 철군을 유도하였다. 그리고 휴전선 근방에서 계속 분쟁을 야기하였고, 漁民 및 심지어는 미해군에 속한 배를 납치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군사적 활동이 1976년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의 북한의 전략은 한국을 월남화하려는 군사전략에 따른것이다. 이 전략은 한국에서 內亂을 도모하고 이를 북한이 軍事的으로 지원하여 미군을 철수시키려는 통일전략이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북한의 이같은 軍事力동원은 규모는 적었지만 1980년 초기까지 계속되었다. 미얀마에서 테러로서 한국의 지도자를 살해하고자 했고 대한항공을 폭파하여 공포감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軍事力을 사용하여 統一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점차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軍事的 방법을 서서히 전환하면서, 南北對話에 응하기 시작하였고, 또한 스스로 대화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1972년 7.4공동성명 발표후, 1973년에 시작하여 수차례의 政治會談을 가졌다. 결국 1990년 9월에 열린 南北總理會談도 이같은 政治會談의 결실이다. 또한 1971년에 시작한 적십자 회담

이 소규모의 남북가족방문이란 결실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1984년에는 經濟會談을 시작했고, 1985년에는 남북국회의원 회담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 스포츠회담을 제의해서 그동안 수차례 회담을 가졌다. 그 결실로 1990년 9월에 시작한 아시안 게임에서 南北韓이 共同應援팀을 갖기로 합의 보았다.

이같이 북한이 軍事力보다는 정치적 統一方法을 더 강조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國際秩序의 변화이다. 중국과 미국이 데탕트를 이루고, 公式關係를 수립하였으며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중국에도 民主化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1989년 6월 천안문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또한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시행하여 內政改革을 하면서 미국과의 冷戰을 종식했다.

이로써 알타체제는 무너지고 미소의 協力時代가 열렸다. 최근 페르샤만 사건을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과 소련은 공동대처하기로 헬싱키에서 동의하였다. 또한 소련은 블라디보스톡 宣言에서, 크라스노야르스크의 宣言에서 韓半島의 平和的 해결을 원한다고 천명하였다. 한국과의 공식적인 수교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북한은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소련과 중국은 1989년 등소평과 고르바초프가 頂上會談을 가졌고, 중국과 소련의 국경지대에 주둔한 병력을 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제 미국과 소련의 군축합의에 이어 중국이 군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이다. 결과 동구라파는 民主化되고, 동서독이 平和的인 統一을 이루게 되었다.

이같은 國際的 평화무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軍事力을 사용할 명분을 제거하였다. 북한의 統一을 위한 軍事的 행위를 國際的 테러 행위로 비난을 받고 國際社會에서 고립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은 國內經濟問題를 타개하고, 國際的 고립을 면키 위하여, 미국과 일본과의 國交 正常化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는 영사급 회담을 북경에서 수차례 가졌고, 일본자



민당의 부총재인 가네마루가 북한을 방문하므로서 북한과 일본과의 國交正常化가 곧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 V. 北韓 軍事戰略 傾向

이같은 國際的 데탕트와 韓半島의 政治的 변화가 北韓의 軍事戰略의 大變化를 초래하였는가? 國際紛爭을 平和的으로 해결하려는 국제적 분위기가 北韓의 武力統一 의도를 좌절시켰는가? 北韓의 근본적인 軍의 구조가 변혁될 것인가? 물론 이같은 질문에 필자는 부정적일 수 밖에는 없다.

國際秩序가 변하고, 韓半島의 주변정세 또한 데탕트 분위기이기 때문에 軍事的인 행위가 국제적인 자탄을 받을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北韓의 態度 變化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머릿말에서 4가지를 지적하여 北韓의 軍事체계가 변치않으리라고 주장하였다. 北韓은 과거에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던 일이 있어서, 國際的인 압력이 있어도 北韓은 서둘러서 자체의 變化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 보인다. 아직도 北韓의 軍事목적은 韓國統一에 있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과 축적된 경험에 따라서 北韓의 軍事政策도 다소 변하리라 본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의 軍事戰略은 소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초기 軍의 幹部들 또한 소련에서 교육을 받았다. 김일성, 남일, 김용, 유경수, 최현, 필우창 등이 소련에서 교육을 받고 소련군과 전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소련군의 지휘하에 이들은 북한 초기의 軍을 편성하고 훈련을 실시하였다. 중국군에서 활약하던 武亭을 위시한 중국출신군도 이 조직에 편입이 되었다.

이 시절 北韓의 軍事戰略은 기갑을 중심으로, 보병, 포병, 공중지원을

통한 協同作戰으로 빠른 기동력으로 돌파구를 형성하고 보병이 급히따라 전진하여 깊숙히 침투하여, 적의 후방을 유린하는 것이었다. 후방의 공격에 성공하면 적의 退路를 막아서 재집결할 기회를 주지 않는 작전이었다.

또한 임표가 지휘하던 중국군도 초기에는 대부대를 중심으로 기동력을 사용한 지속적인 攻擊戰略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점차 유엔군의 공중공격이 심해 산악에 숨어서 후방 깊숙히 침투하는 戰鬥方式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기동수단의 부족으로 작전에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다. 특히 중국전략은 정면의 적 진지를 돌파한 후 後方으로 전진하며 거점지역을 확보하고 뒤에 오는 지원군과 합쳐서 적의 허리를 찢어 적군을 分散시키는 전술이었으나, 기동수단의 부족으로 後尾로의 진출이 어려워서 결국 보병 위주의 全面戰이 되어 많은 희생자를 냈다. 또한 평야보다 산악지형이 많아 소련식의 전차를 중심으로한 전투 수행이 어려웠다.

이같은 6.25의 경험이 김일성 나름대로의 戰略전술을 채택하게 된것이다. 김일성은 軍事戰略의 기본원칙에서 첫째 산악전과 야간전투의 강조, 둘째 소부대활동과 대부대 활동의 배합, 셋째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넷째 戰爭運營의 지배적 요소 파악, 다섯째 결정적인 攻擊作戰의 이행, 여섯째 현대 및 재래식 무기의 공유, 일곱째 입체전의 강조 등을 제시했다. (육군사령부, 1987 : 117)

이에 따르면, 6.25동안 유엔군의 制空權 장악으로 산악에 숨거나, 야간전투를 많이 이용했어야 했다. 그리고 대전차부대의 공격을 연대나 중대단위의 전차부대를 나누어야했다. 韓國戰爭동안 중요했던 것은 遊擊戰이었다. 특히 後尾에 떨어졌던 빨치산이 후방을 교란함으로써 유엔군 전투력에 차질을 주곤하였다.

김일성이 후방에서 民衆革命을 강조하고, 後方據占地域의 확보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 한국전쟁동안의 경험에서 온것이다. 결정적인 攻擊作戰의 실책은

北韓軍이 서울점령 후 며칠 지체한 것이다. 이것은 그후의 작전에 큰 지장을 가져왔다. 또한 유엔군의 우세한 現代武器는 중공군의 인해전술에 큰 치명타를 주었다.

최근 김일성은 모택동이 사용했던 包圍殲滅戰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약한 지역을 집중공격하여 후미에 진출하여 적을 포위하고 기동력을 사용하여 포위한 지역을 섬멸하는 방법이다. 6.25때 北韓軍이 정지하지않고 공격(non-stop-march)하여 적의 후방을 차단하는 방법과는 달리, 이는 소규모의 戰鬪概念으로 연대, 대대, 중대단위를 이용하는 戰術이다. 즉 방위력이 약한 지역을 기습하여 진군하면 즉시 작은 단위부대에서는 적의 退路를 막고, 機動力으로 섬멸하는 것이다. 적을 포위하되 작은 단위부대로 하여 적에게 재집결방위나 퇴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이다.

이같이 하려면 機動部隊의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 즉 많고 작은 여러지역을 포위해서 기동력으로 제압하려면 많은 수의 전차와 장갑차가 필요하다. 北韓이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밀집, 전진방어태세를 취하는 이유도 이같은 攻擊戰略에 기인한 것이다. 北韓이 立體戰을 강조함은 산악지대나 하천이나, 大路에서 전투를 할 경우, 기갑, 보병, 포병을 이용하되 전략적으로 가장 優勢한 요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격전략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北韓은 특히 소위 작전에서 예상밖의 차질이 발생할 것을 경고하고 이에 대처토록 군의 流動性 및 融通性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적의 전면에서 각자가 약한지역을 선제 침투하고 포위하여 섬멸하면서 진군을 하면, 小單位部隊가 활동하기에는 부대간의 전진속도가 不均衡을 이룬다. 이경우 指揮系統이 차단되고 物資補給이 지연된다. 공격전선이 넓고 기동성이 높으면, 진군의 불균형은 생기게 마련이다. 특히 渡江作戰, 심야전투, 공수작전, 또는 수륙양용정을 사용한 진군등 전투의 多樣性 때문에 극심한 공격선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이때문에 김일성은 각 단위부대의 自給自足, 즉 자주적 전략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민군은 北韓의 독트린에서 제시한 주체사상을 전투시에도 중요시한다. 北韓의 군사훈련 10대강령이나, 특수훈련은 이같은 不均衡前進에 대비한것이다. 즉 이것은 상부의 作戰 不均衡을 하부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北韓의 現代軍事戰略·政策은 6.25전쟁, 항일투쟁, 월남전쟁, 모택동의 유격전 소련의 세계제2차대전에서의 경험을 韓國地形에 맞게 개발한 것이다. 때문에 속공전과 지구전, 전면전쟁과 게릴라전, 현대전과 재래식전쟁에 필요한 무기의 배합, 화력전과 심리전, 야간전과 주간전의 대비, 전면을 속히 돌파하는 전투에서 후방의 혁명전을 겸비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오래된 전차 등 낡은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MIG류의 전투기, 대공미사일 등 발전된 무기도 보유하고 있다. 또한 現代戰은 정신적 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념을 강조하고 정신무장을 위한 政治思想教育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게릴라전에 대비한 훈련도 시키고 직접 응용하기도 했다.

## VI. 軍隊의 平和的 利用 可能性

북한의 軍事政策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4대군사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즉 전인민의 무장화, 전국토의 요새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이다. 이같은 軍事政策은 북한의 정치 및 經濟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軍需産業과 人力管理는 平和時에 군의 경제적 기여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인민군의 목적은 전시에 國家保衛 및 體制目標를 달성하는데 있고 平和時

는 질서유지와 체제유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그리고 북한은 經濟建設과 軍事力의 강화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김일성 : 1983). 또한 김일성은 軍事力과 經濟力은 상호 의존적인 것이며, 軍事力은 생산수단의 결과로 보고 있다(T.B Mukherjee : 1983). 특히 북한에서는 기술의 개발로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과 산업, 국방력과 인민생활의 차이, 여성과 남성의 差異를 줄여야 된다고 주장한다. (Inoue, Shuhachi : 1984).

또한 북한은 100만 이상의 常備軍을 유지하여 막대한 군사비 지출은 經濟成長에 지장을 주고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폐쇄적인 經濟政策을 추진해왔다. 여러차례에 걸친 經濟計劃에서 社會主義의 공업화 또는 자주적 공업건설을 추진했으나 이 자주적 經濟建設방침은 자본동원에 문제가 생긴다. 이 閉鎖經濟概念은 대외 의존도를 줄이기 때문에 국내저축에 의한 자본의 동원을 피해야 한다.

북한은 이 閉鎖經濟構造를 이용하여, 軍事目的을 위한 각종 기계공장, 정밀기계공장, 트랙터공장, 타이어공장 등을 건설했다. 또한 經濟發展을 위한 인력공급이 또한 중요한 바, 인력공급능력은 經濟發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군사능력 역시 인력공급 능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엄청난 상비군 및 예비군의 유지는 經濟發展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더우기 軍事力은 경제영역에서 가장 消費性이 높은 經濟領域이다. 그러므로 병력은 평화시에 줄일 수도 있다.

특히 북한은 군복무기간이 陸軍은 3년 6개월, 海軍과 空軍은 복무연한이 4년이나, 대개 장기간의 근무경향이 있다. 이는 군의 平和的 利用이 더욱 절실함을 말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인민군은 복무기간 동안 휴가기간이 적으며, 주말에 외출도 적다, 여가를 보내는 것도 주로 團體運動이 아니면 근방의 농가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군복무 기간동안 인민군은 건설업, 농사일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精神教育의 시간에 단위부대로 軍民間

협동농장이나 협동과수원에서 일을 하게 된다. 또한 도로공사, 아파트건설, 댐건설, 가을의 곡식추수 등 노력동원에 군이 널리 사용된다. 시골에서는 군이 한글교육에서부터 전염병 예방에 이르기까지 對民 活動을 하게 된다. 때로는 공작장에서 탄약생산이나 기계정비에까지 군이 동원되기도 한다. 軍의 노력동원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지휘관도 있다고하나 현재 북한의 산업 실태로 볼때 당연하다고 볼수있다.

인민군은 平和時 광범위의 대민지원활동(military civil action)을 이행한다. 본래 軍의 民間化는 모택동의 개념이었으나, 중국군이 중국에서 민간경제에 준 영향은 크지 못했다. (Harvey W.Nelson: 1981). 모택동은 군복무기간동안에 군대를 국가를 위한 노동자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人民軍과 勞動者는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상의 이유와 경제적 가치의 효용때문에 軍의 民間活動을 제약했다.

이에반해 북한은 인구의 부족과 협소한 지리적 조건때문에 軍의 民間活動을 비교적 活性化 하였다. 특히 북한의 예비군은, 건설업, 의료사업, 가축사육, 가축예방접종, 집단 협동농장 등에 많이 참여하였다. 平和時 軍이 북한의 經濟成長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는 분명치 않으나 김일성, 김정일의 연설은 경제건설에 있어서 軍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한국에 비해 軍事目的달성을 위한 產業發展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소련과 중국의 개혁, 韓國經濟의 발전 등으로 압력을 받아서 소비재 생산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나 國際的 平和의 분위기와 미소의 冷戰終熄등은 많은 軍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이같은 데탕뜨 분위기에서 많은 상비군을 유지하게 되어 북한은 상비군을 경제건설에 사용해야 할 것인데 문제는 軍은 부대운영을 위해 민간인 집단농장보다 훨씬 큰 규모의 땅을 사용하게 되는 등 경제적 효용성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욱이나 군의 경제참여는 勞動力 中心의 참여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군이 民間經濟와 혼합되어 있을때 전쟁이 발생하면 민간인 대피나 철수까지 군이 책임을 지게되기 때문에 전투력의 효율이 낮아진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平和時 군이 經濟活動에 참여하면 상대적으로 군의 훈련 시간이 줄어들며, 피곤한 군은 기율이 해이해지기 쉽다. 또한 군이 現代化 되면 될수록 군은 군의 특수장비교육훈련에 시간을 할당해야 한다.

이같은 맥락에서 전세계에서 일고 있는 화해 분위기, 전쟁을 통한 統一 가능성 감소, 인민군의 현대화 과정등을 참작하면 平和時 인민군을 능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북한은 군비축소를 해야 한다. 북한의 군비축소가말로 북한의 經濟成長을 돕고, 군의 효율성을 수반한다. 특히 平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을 줄여서 民間經濟에 환원해야 한다. 거대한 규모의 상비군 유지는 韓半島의 平和的 해결에 크나큰 걸림돌이다.

## VII.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 軍事政策의 이론과 실제를 논했다. 과연 북한의 軍事政策이 얼마나 주효한가는 전쟁으로 시험해보기 전에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한의 軍事力은 대단한 것이다. 전차, 장갑차, 대공미사일, 대공포, 전투기, 폭격기, 수송기, 잠수함, 어뢰정, 수륙양용정 등 엄청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북한 軍事政策理論의 반영으로 이를 보유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북한은 경제력을 낭비하고 있고 북한이 얼마나 이를 지속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軍事戰略은 정치의 한 수단이다. 특히 여타 공산국가나 북한은 軍事力과 정치의 分業化가 되어있지 않았다. 북한은 軍事力을 정치의 수단으로 늘 사용한다. 최근 북한은 다시 軍縮提議를 하고 있다. 3단계에 걸쳐서 10만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문제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기 앞서 장비나 화력을 먼저 줄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엄청난 화력이나 장비를 어찌 신속히 줄일 수 있을런지 의문이다. 또한 군축에 앞서서 북한의 군사 독트린을 바꿔야 한다. 현재의 군사독트린이나 軍事政策을 이행하려면 10만의 병력을 갖고는 도저히 어렵게 되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軍事力을 統一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나 다행인 것은 최근에 북한이 統一의 방법을 군사적인 면 보다는 政治的인 수단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 정치질서가 군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게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제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平和統一을 원한다면, 실질적인 증거로서 자체내의 軍備縮小를 시작해야 할것이다. 엄청난 군비를 유지하면서 平和統一을 제의하는것은 설득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구심만 생기게 한다. 이것이 北韓의 統一政策에서 보여지는 논리의 모순이고 또한 北韓의 政策수립에 수반되는 고민이라고 여겨진다.

## 參考文獻

### I. 著書 및 論文

1. 金日成, 김일성저작선집 (평양: 동방사, 1965)
2. 金日成, 인민군대를 강화하자 (평양: 인민출판사, 1974)
3. 金日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남조선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평양: 조선노동당, 1974)
4. 柳在甲, 소련, 중공, 북한의 작전술 발전경향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0)
5. Baik, Bong, Kim Il Sung, Vol. 1, 2, 3, (New York: A Guardian Book, 1970)
6. History of Revolutionary Activities of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 Sung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83)
7. Jon, Mun Sop, Reminiscences of the Anti-Japanese Guerillas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9)
8. Kang, Young Hoon and Yong Soon Yim, (ed),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1978)
9. Kim, Il Sung, Revolution and Socialist Construc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 1971)
10. Kim, Il Sung, Let us Embody More Thoroughly the Revolutionary Spirit of Independence, Self-Sustenance in All Fields of State Activities (n.n.: New world Liberation Front, 1970)
11. Kim, Il Sung, 저작선집 (평양: 조선노동당, 1974)
12. Kim Il Sung, Report on the Work of the Central Committee to the Fifth Congress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0)

13. kim, Il Sung, On the 20th Anniversary of Founding of the Korean People's Army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8)
14. Kim, Il Su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the Banner of Freedom and Independence for our people and the powerful Weapon of Buliding Socialism and Communism(Pyongyong: n.n. 1968)
15. Kim, Il Sung, Great Anti-Imperialist Revolutionary Cause of Asean and Latin American people is invincible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68)
16. Kim, Il Sung, Let us oppose the Revival of Japanese Militarism (n.n. 1970)
17. Mao, Tse-Tung, Take care of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Masses and Attend to the Methods of Works(New York: International Publishers, 1954)
18. Mao, Tse-Tung, Strategic Problems in Anti-Japanese Guerilla(Peking: Foreign Language Press, 1972)
19. Mukherjee, T.B.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deas of the Great President Kim Il Sung(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83)
20. Nelsen, Harvey W, The Chinese Military System(Boulder: Westview Press, 1981)
21.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Berkeley: Foreign Language Press, 1954)
22. Shuhachi Inoue, Modern Korea and Kim Jong Il (Tokyo: yuzankaku, 1984)

23. Sokolovsky, Soviet Military Strategy (New York : Crane, Russak & Company, Inc., 1975)
24. Yim, Yong soon, Two Korean's Reunification Policy and Strategy (Baltimore : University of Maryland, 1978)

## II. 定期刊行物 및 公文書

1. IISS, Military Balance, 1988-1989 (London : The IISS, 1989)
2. The Pyong Yang Times
3. Korea Today
4. 북조선무력부명령서 (1954)
5. 조선인민군 명령2호 (1954)
6. 韓國육군교육사령부, 공산권의 용병술 (서울 : 육군교육사, 1987)
7. 국제생활
8. 노동신문
9. 민주노선

# 第3章 北韓의 戰爭遂行 潛在力量에 대한 巨視的 分析

— 朴東煥 (美 North West大 教授)

I. 相對的 持久力과 戰爭의 勝敗 .....	57
II. 戰爭遂行 潛在力の 概念的 考察 .....	61
1. 構成要素의 多元性 .....	61
2. 構成要素間의 複合的 相關關係 .....	67
3. 宣傳과 實體의 乘離 .....	70
III. 軍事費支出을 통해 본 南北韓의 潛在力 比較 .....	72
1. 作用 - 反作用에 根據한 軍備競爭 模型 .....	73
2. Stock - Flow에 根據한 軍費支出 模型 .....	76
IV. 結 論 .....	78

## I. 相對的 持久力과 戰爭의 勝敗

韓半島에서 戰爭이 일어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겠지만, 萬若의 경우를 假想할 때, 제일 먼저 提起되는 疑問中の 하나는 과연 南韓과 北韓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이러한 假想의 戰爭이 6.25와 같은 長期消耗戰의 性格을 가질지 아니면 최근에 話題가 된 Larry Bond의 小說 「Red Phoenix」에서와 같이 不過 몇달안에 終結되는 速度戰이 될 지는 아무도 豫測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長期戰이나 速度戰이나에 관계없이, 重要的 것은 어느 쪽이 더 오래 견딜 수 있는가 하는 相對的 持久力 (Relative Staying Power)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全面戰의 경우 일단 싸움이 붙고 난 뒤엔 걸잡을 수 없는 速度로 擴戰되고 兩側은 모든 力量을 動員하여 相對的을 征服하려 하게 됨으로 結局에 가서는 이 相對的 持久力이 戰爭의 勝敗를 左右하는 核心的 變數로 作用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相對的 持久力은 바꾸어 말하면 敵對國間的 相對的 戰爭遂行 潛在力量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兩側의 戰爭遂行 潛在力을 正確히 가늠할 수만 있다면 戰爭이 일어 났을 경우, 어느쪽이 얼마만큼 이길지를 대체로 豫測할 수 있을 것이다. 戰爭遂行 潛在力이 이렇게 重要하지만 이를 測定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作業이 아닐 수 없다. 敵對國의 實際的 軍事力에 관해서도 客觀性이 缺如된 推測밖에 할수없는 경우가 많은것을 생각하면, 潛在力을 分析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쉽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1990年 여름 韓半島의 軍事問題를 研究하는 專門家들과 軍의 政策決定者들을 서울에서 만나 南北韓의 相對的 持久力에 관하여 인터뷰할 機會를 가졌었다. 인터뷰의 性格上 人爲的으로 뽑은 標本에 依存할 수 밖에 없었고

對話의 내용을 體系적으로 分析하지 않겠다는 前提下에 이루어진 단순한 背景說明에 不過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과의 深層對話에서 얻은 印象은 相對的 持久力 또는 戰爭遂行 潛在力量이 얼마나 分析하기 힘든 概念인가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했다.

『北韓의 戰爭遂行 潛在力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대한 이들 專門家들의 答변은 매우 多樣했다. 『글쎄, 참 어려운 質問이다』 『計算하기 어렵다』는 慎重論을 비롯하여 『겉보기 보다 별 것 아니다』 『아주 強하다』등 나름대로의 推定을 하는가 하면, 어떤이는 『攻擊能力이냐 아니면 防禦力量이냐?』 『在來戰이냐 아니면 制限核的을 말하느냐?』 또 『南北韓만의 싸움이냐 아니면 強大國이 介入하느냐?』등 質問者에게 戰爭의 具體的 脈絡을 指示토록 要求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이는 『戰爭遂行 潛在力이란 무엇을 意味하는가?』고 概念의 定義를 밝혀 달라고하기까지 하였다.

이 一連의 인터뷰를 統計적으로 內容 分析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專門家들과의 對話를 통해 넓게는 戰爭遂行 潛在力量이라는 概念에 관해, 좁게는 南北韓의 相對的 持久力에 관해 대체로 세가지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었다.

첫째는 戰爭遂行 潛在力量이란 多元적이고 複合적인 變數로서 單純하고 直線的인 分析의 對象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未來戰에서 어느 나라가 며칠 또는 몇주일을 버틸 수 있을까하는 豫測은 人命과 戰爭物質의 一日平均 消耗度에 근거하여 대충 헤아릴 수 있는 數値의 水準을 벗어 날 수 없다고 본다. 精神과 肉體와 物資가 渾然一體가 되어 치루는 總力戰에서 物資에만 근거한 接近方法은 相對的 持久力을 計算함에 있어서 하나의 必要條件이지, 絶對로 充分條件은 될 수 없음이 自明하다.

따라서 最近에 發刊된 國防白書(國防部, 1989)에서도 戰爭遂行 潛在力에 대해 아래와 같은 總論的 記述밖에는 할 수 없었음을 理解하게 된다.

『전쟁수행 잠재력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수행을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행정력 등을 망라한 총체적 국력으로서 통상 戰爭持續能力을 의미한다. 전쟁 잠재력 요소중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 경제력, 산업능력, 과학기술 수준을 중심으로 남북한을 비교해 보면

첫째, 人力자원측면에서 한국은 전체인구에서나 동원가용자원(남자 18~45세)에서 북한에 비해 2배 이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4대 軍事路線의 추구를 통한 '전민민의 무장화'를 이룩하여 자원의 군사화에서는 단연 우세한 입장에 있다. 특히 북한은 평시부터 직장 및 지역단위로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女子까지 동원가능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경제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비해 7배 규모의 국민총생산량을 확보하고 있다. 즉 1988년도 GNP는 한국이 1,451억 \$이고, 북한은 200억 \$이다. 이러한 남북의 경제력 격차는 年平均 경제성장율을 고려해 볼 때,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196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經濟 優先政策을 추진해 온 결과이다.

셋째, 산업능력면에서 불해도 한국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 자동차, 선박 등의 생산능력과 발전시설, 철도 및 고속도로건설 등의 諸 基幹産業에서 이미 북한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심화되어 갈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은 民間産業能力의 개발과 발전에 주력한 반면, 북한은 전체 산업능력중 군수산업 분야를 중점 육성한 결과로 戰時 戰力化 측면에서는 북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넷째, 軍事科學技術分野에서는 한국이 전반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항공, 기동장비, 통신, 전자 등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야포 및 유도무기, 잠수함, 化生武器 분야에서는 자체 생산 및 일부 모델을 모방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북한이 세계 3위의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數千門의 放射砲는 화학탄 발사에 이상적인 投發手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한국에 대한 중요한

군사위협요소가 되고 있다』(國防部, 1989: 184-185).

國防白書에 나타난 南北韓 潛在力量의 比較評價가 비록 正確한 것이겠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戰爭이 났을 때 南北韓中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를 豫測할 수는 없는 일이며 더구나 兩側이 각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가를 推算하는 것은 거의 不可能한 일이 아닐 수 없다.

韓國의 軍事專門家들의 두번째 共通된 見解는 戰爭遂行 潛在力이란 지극히 主觀的인 概念으로서 누가 내놓은 數値든지 커다란 誤謬를 內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假想 또는 實際의 敵對國을 混亂에 빠뜨리기 위해 彼我的力量에 관한 情報를 意圖적으로 操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느 나라에서든지 國內輿論을 特定 方向으로 誘導하기 위해 數値를 上向 또는 下向 調整하는 可能性마저 排除할 수 없다고 하니 戰爭遂行 潛在力을 客觀적으로 分析하려는 努力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切感하게 된다.

세째, 軍指導者들 중에는 戰爭遂行 潛在力을 하나의 總體的 變數로 보는데 懷疑를 느끼는 이들이 많고, 그대신 人力, 物資, 動員體制등을 따로 分離해서 比較하는 것을 選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發見했다. 다시 말해 軍의 實務者들사이에는 潛在力이라는 變數가 政策決定에 效用性이 적다고 보아 이 變數의 構成要因들을 하나씩 따로 取扱하려는 傾向이 強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戰爭遂行 潛在力은 하나의 概念으로서 너무도 複合的이고 信憑性이 적으며 또 政策決定에도 큰 도움을 안 주기 때문에 이를 使用할 學問的·實際的 價値가 없는 것일까? 本章은 『결코 그렇지 않고 또 그래서 안 된다』는 判斷과 命題위에서 戰爭遂行 潛在力量을 考察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戰爭遂行 潛在力이라는 概念이 여러면에서 非效率的이었음은 사실이지만 이는 그 概念 自體에 問題가 있어서라기 보다 이 概念을 使用하는데 正確한 意味를 賦與하지 않고 막연히 總體的 力量쯤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戰爭遂行 潛在力은 理論이나 實際에 있어서 大端히 重要な 概念임에 틀림 없으며, 計量化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깊은 研究가 蓄積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輕視 또는 看過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우선 여러가지 意味로 通用되는 戰爭遂行 潛在力の 概念的 向題點들을 體系的으로 整理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서 南北韓의 相對的 持久力이 어떻게 變化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變할 것인가 하는 趨勢를 南北韓間 軍備競爭의 行態變化를 追跡함으로써 分析하고자 한다.

## II. 戰爭遂行 潛在力の 概念的 考察

戰爭遂行 潛在力量이 하나의 概念으로서 定着하지 못한데는 크게 보아 세 가지 理由가 있다. 첫째는 潛在力の 構成要素가 多様하여 어느 것을 包含시키고 어느 것을 排除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 둘째는 構成要素들 사이의 關係가 複合的이어서 그 相互作用을 分析하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세째는 宣傳的 次元에서 본 潛在力과 實體와는 아주 相異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이제 이 세가지 問題點을 하나씩 檢討해 보자.

### 가. 構成要素의 多元性

戰爭遂行 潛在力の 構成要素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潛在力の 意味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潛在力の 意味를 確立하지 못했기 때문에 學問的·實際的 混亂이 若起되었고 그 意味를 分明히 하려는 것이 本章의 意圖이므로 여기서 論理的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潛在力을 嚴格히 定義하는 일은 保留하고, 觀念的 水準에서 戰爭遂

行 潛在力은 대체로 이런 것을 뜻한다는 큰 範圍를 設定한 뒤 그 테두리 안에서 潛在力에 대한 分析을 시작해야 할것이라고 믿는다. <그림 1>이 이러한 테두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敵對國間의 對決關係를 力量面에서 본 일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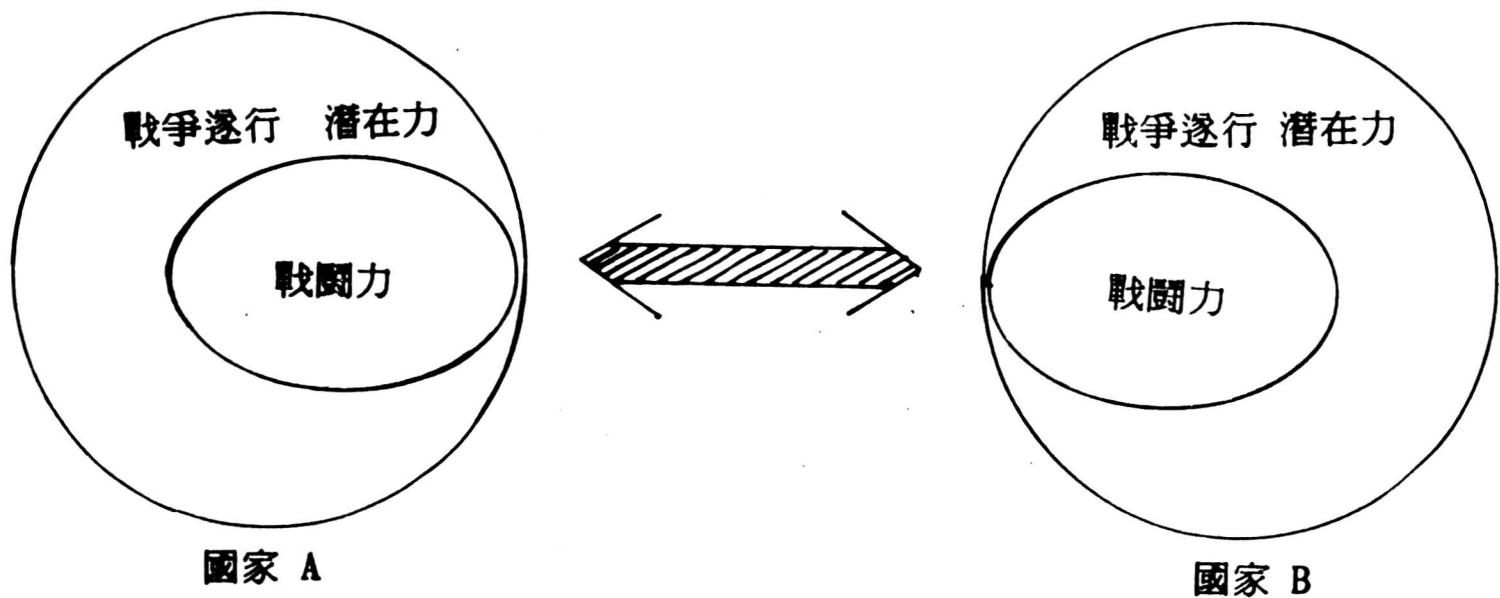


그림 1. 力量面에서 본 對決關係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戰爭은 一次的으로는 兩國의 戰鬥力の 對決이지만 二次的으로는 戰爭遂行 潛在力の 크기에 따라 그 結果가 左右된다고 할 수 있다. 戰鬥力은 戰爭遂行 潛在力の 一部로서, 싸움이 시작된 후에는 戰爭遂行 顯在力이 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text{戰爭遂行 潛在力} = \text{戰鬥力} + a)$$

라는 等式이 成立된다. 여기서 戰爭遂行 潛在力の 核을 이루는 戰鬥力の 構成要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 보기로하자. 金俊逢(1987)에 의하면, 이 戰略을 具現하는데 適合한 軍構造 및 指揮體制, 戰術敎理, 兵力 및 編成, 裝備와 築城, 軍需支援能力 및 體制, 精神戰力을 위한 敎育訓練, 氣象·地形등의 自然條件, 保安·情報, 有能한 幹部와 軍隊의 質등이 자주 열거된다고 한다. 이들중 대표적인 要素 몇을 골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1. 戰略

戰爭을 어떻게 치루느냐를 決定하는 것이 戰略概念이며 이것이 없는 軍隊는 핸들 없는 自動車와 같아서 無用之物에 不過하다. 健全한 戰略은 未來에 일어날 戰爭의 形態를 豫想하고, 그 未來戰에 最善의 對應을 할 수 있도록 體制와 力量을 整備하며, 戰爭勃發후에는 戰鬪의 主導權을 掌握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할것을 要求한다.

韓國으로서는 가장 警戒해야 할 것이 北韓의 先制攻擊이므로, 韓國의 戰略은 敵의 奇襲을 許容하지 않는 것을 至上目標로 해야 한다. 또 敵의 奇襲攻擊이 臨迫하여 戰爭이 不可避해 질 때, 我側이 先制攻擊을 敢行할 수 있는 能力을 保有하는 것이 重要하다.

이러한 豫防戰爭遂行能力을 갖게 되면 그 自體가 敵의 先制攻擊을 막을 수 있는 抑制의 機能을 發揮할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빠른 時日안에 自主國防을 達成하여야 하며, 強大國들에 둘러싸여있는 立地條件을 勘案할 때, 어떠한 敵도 韓國을 집어 삼킬 수 없도록 有事時에 가시로 온 몸을 감싸는 이른바 「고슴도치 戰略」을 採擇하는 것도 좋은 方案의 하나로 생각된다.

## 2. 軍構造 및 指揮體制

일단 定立된 戰略概念을 實戰에 옮기기 위해서는 能率的인 軍構造와 指揮體制가 要求되는데 이때 考慮해야 할 主要事項은 地理的 條件, 國民性, 指導通信技術水準 및 敵軍의 構成등이다. 特히 現代戰에서는 어떤 軍隊가 相對國의 同種의 軍과 對抗하는 것이 아니고 陸海空 立體戰 또는 總力戰의 樣相을 띠게 될 것이므로, 3軍竝立體制 보다 合同軍이나 統合軍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찌기 統合軍制를 選擇한 北韓에 對應하여 韓國이 뒤늦게나마

合同軍 쪽으로 옮겨가고 있음은 多幸한 일이다.

軍構造에서 또하나 重要的 것은 戰鬪部隊와 支援部隊의 比率인데 美國式 모델에서는 共產國家들에 比해 支援部隊의 構成比率이 훨씬 높다. 美國軍隊는 巧妙한 戰略이나 戰術보다는 「物量攻勢」에 의해 敵을 밀어 부치는 作戰을 爲主로 싸워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美國같은 大國力의 뒷받침을 못 받는 韓國으로서, 그것도 戰鬪部隊 中心으로 編成된 北韓의 軍隊와 對峙한 상황에서, 美國式 모델을 고집하는 것은 問題가 아닐수 없다.

### 3. 戰術敎理

戰略概念이 세워지고 이를 具現하기 위한 軍構造와 指揮體制가 確定되면 實際로 各 戰場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의 戰術敎理를 定立해야 한다. 이때 가장 核心的인 要素는 卓越한 戰術敎理를 開發하고 實踐에 옮길 수 있는 軍事엘리트를 養成하는 것이다. 政治將校가 軍事將校를 조종하는 北韓의 경우, 非專門家가 專門家보다 上位에 자리 잡음으로서 戰術的 側面에서 作戰의 效率性을 떨어뜨릴 可能性이 높다. 文民化로의 발걸음을 시작한 韓國에 있어서도, 軍의 專門性을 提高하여 「직업적사명감」에 투철한 軍指揮官을 많이 輩出해야 한다고 생각된다(安秉浩, 1990).

### 4. 兵力 및 編成

戰術과 裝備가 아무리 現代化하여도 戰鬪의 主役은 언제나 人間이므로, 병력과 그 編成이 戰鬪力 發揮의 核心要素가 된다. 우선 軍隊의 規模는 人口, 國民의 年齡別 構成 및 軍需支援을 擔當할 수 있는 國富와 正比例한다고 할 수 있다. 일단 適正數의 兵力이 擴充되면 그다음 效率的인 動員計劃을 樹立해야 한다. 모든 國家가 常備軍과 動員豫備軍, 그리고 平時編成과 戰時編成을 適切히 調整함으로써 未來戰에 對應하게 되는데, 韓國의



立場에서 특히 留意해야할 事項은 人口의 3분의 1以上이 密集되 있는 首都圈이 休戰線에서 40km밖에 안떨어져 있다는 것과 北의 先制攻擊이 있을 경우 이는 「速度戰」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兵力의 數와 動員體制에 못지 않게 重要的 것이 兵力의 質과 部隊戰鬥力이다. 첨단무기의 사용과 機動力의 增加로, 現代戰에서는 小部隊單位作戰의 重要性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에 軍人個人의 能力과 部隊라는 集團의 凝集力이 戰鬥의 勝敗를 평가하는 열쇠가 되었다. 특히 同族이 銃口를 마주 대고 있는 韓半島의 경우 部隊單位의 團結力이 異民族間의 싸움에서보다 훨씬 더 決定的 役割을 하게 되는 것은 再論의 餘地가 없다.

## 5. 裝備 및 築城

다른 모든 條件이 비슷하다면, 보다 더 優秀한 裝備를 가진 軍隊가 이길 것이라는 判斷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戰鬥에서 裝備는 必須的이다. 軍의 現代化라면 제일 먼저 裝備의 現代化를 意味하게 된 것이 世界的인 趨勢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重要的 것이 裝備의 土着化이다. 아랍과 이스라엘間의 수차례 戰爭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스라엘軍의 裝備는 어느 나라에서 導入한 것이든지 이미 完全히 이스라엘化 되어 있었지만 아랍軍의 裝備는 大部分이 아랍化되지 못한 때문이었음을 注目할 必要가 있다.

北의 攻擊에 對備하여 防禦의 자세를 維持하고 있는 南韓의 立場에서는 裝備 못지 않게 築城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萬里長城이나 마지노線같이 방대하기만한 沮止線은 無謀한 것이고 地形 및 氣象을 精巧히 利用하여 防者가 時間을 벌거나 敵에게 一定地域의 使用을 拒否함으로써 敵을 殺傷地帶로 몰아 넣는 役割을 할 때 築城은 그 效率性を 發揮하게 된다. 最近 거의 모든 軍基地를 要塞化한 北韓이 休戰線 南쪽의 탱크遮斷壁



을 마치 東西獨間の 障壁인 양 問題삼는 것은 웃지못할 넌센스이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南韓의 築城이 成功的임을 反證하는 것이기도 하다.

## 6. 軍需支援能力 및 體制

軍需의 規模는 戰爭規模, 參戰國 軍隊의 量과 質, 戰爭期間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現代戰은 高度의 消耗戰이므로 短期戰이 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이 나온다. 北韓軍은 短期速決戰에 根據한 軍需體制를 樹立해 놓은지 오래되며 심지어 航空機에도 非常 脫出裝置대신 爆彈 積載量을 增加시키거나 機體의 輕量化로 航速거리를 延長시킨다고 한다. 지금까지 美國軍 軍需體制를 模倣해 온 韓國軍도 北에 比해 越等히 큰 軍需能力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韓國型 未來戰에 對處할 수 있도록 軍需體制를 改善해 나가야 하겠다.

## 7. 教育訓練

軍隊文化가 制度主義(Institutionalism)로 부터 職業主義(Occupationalism)로 變遷하고 있는 것이 全世界的인 傾向이며 (Moskos, 1988), 韓國軍도 결코 例外일 수가 없다. 一例로 上命을 無條件 服從하던 風土가 合理的이거나 本人에게 有利한 命令을 選好하는 쪽으로 變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다. 그러나 이러한 變化에 잘못 對應하면 國家가 要求할 때 人命을 殺傷하고 財産을 破壞해야 하는 軍이 그 本然의 任務를 제대로 遂行하지 못하는 結果를 招來할 수도 있다.

따라서 個人爲主의 市場原理에 立脚한 職業主義가 軍隊文化에 導入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지만, 이 現象에 能動的으로 對應하여 職業主義의 利己的인 要素들을 最小限으로 抑制하고 오히려 軍人個個人의 自己發展欲求를 誘因으로 삼아 制度主義와의 共存體制를 樹立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길만이 「主體思想」으로 武裝된 北韓軍에 맞서서 올바른 軍紀와 士氣를 維持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教育訓練의 方向이라고 본다. 특히 共產圈을 휩쓰는 自由化의 바람이 언젠가는 北韓社會에도 밀어 닥쳐 唯一思想의 虛構性이 들어 날 것으로 期待되는데, 이 때를 對備해서라도 韓國軍의 精神武裝을 現代化할 것이 要求된다.

以上 例示한 7개의 構成要素만 보아도 戰鬪力이 얼마나 多樣한 因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複合體인가를 쉽게 알 수 있다. 有形·無形의 要素를 包含할 뿐아니라 軍全體에 관련된 要因에서 부터 兵力個人의 資質까지 總網羅한 것이 戰鬪力이다. 이 戰鬪力에 「플러스  $\alpha$ 」한 것이 戰爭遂行 潛在力이므로 潛在力이란 概念은 진실로 하나의 多元體가 아닐 수 없다. 「 $\alpha$ 」라는 범주에 內包되는 것은 顯在的 戰鬪力을 除外하고 總體力 國力을 나타내는 모든 重要的 變數들임을 想定할 때, 戰爭遂行 潛在力을 體系化하고 計量化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을 理解하지 않을 수 없다.

#### 나. 構成要素間的 複合的 相關關係

戰爭遂行 潛在力을 分析하는데 要素들의 多元性보다 한층 더 큰 어려움을 주는 것이 構成要素間的 複合的인 相互作用이다. 潛在力の 總體를 決定하는 것이 要素들이지만, 이들사이의 相互作用이 때로는 加減(더하기, 빼기) 形態를 취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乘除(곱하기·나누기)의 關係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國力을 재는데 있어서 가감보다 곱하기가 더욱 重要하다는 데 대해 日本 京都大의 가쓰다 기찌따로教授는 다음과 같이 主張하고 있다.

『經濟力이 바로 國力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經濟大國이라는 것만으로는 “나무를 쌓아 놓은 집”에 不過하다. 따라서 經濟力外에 防衛力이 必要하다. 그 위에 다시 國民의 氣力, 精神力이 不可缺한 要素인 것이다. 단지 「國

力=經濟力+防衛力+精神力」이라는 數式으로는 아직 不完全하다. 나아가 「國力=經濟力×防衛力×精神力」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記號인 이상, 어느 한 가지 要素가 「○」이면 國力は 곧바로 「제로」가 되고 만다』 (京鄉訊問, 1982年 11月 19日).

韓國에도 널리 알려진 Ray S. Cline (1980)의 「感知된 國力指數」 (Perceived Power Index : Pp)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모두 使用하여 만든 總體的 國力の 指標인데

$$Pp = \text{能力(Capabilities)} \times \text{公約 (Commitment)}$$

의 形態를 취하고 있다. 여기서 Pp의 要因은

$$\text{Capabilites} = (C + E + M) \text{ 와}$$

$$\text{Commitment} = (S + W) \text{로 構成되어 있으며}$$

Capabilities의 세 因子는

$$C = \text{Critical Mass} = \text{人口} + \text{領土},$$

$$E = \text{Economic Capacity} = \text{國民總收入} + \text{5個分野의 生産(에너지, 重要的한 非에너지 鑛物, 製造業, 食糧 및 貿易)}$$

$$M = \text{Military Capability} = \text{戰略的 均衡} + \text{戰鬪力} + \text{勞力} \text{이다.}$$

Commitment의 두 因子는

$$S = \text{National Strategy Coefficient} \text{ 이고}$$

$$W = \text{National Will Coefficient} = (1)\text{國家統合 (National Integration)} + (2)\text{國家의 指導力量(Strength of National Leadership)} + (3)\text{戰略의 國益에의 聯關度(Relevance of Strategy to National Interest)} \text{이다.}$$

따라서

$$Pp = (C + E + M) (S + W)$$

가 되는데 Cline은 다섯개의 構成因子에다 그 因子가 가질 수 있는 最大值를 設定한 뒤 世界各國이 그 因子에 갖는 스코어를 自身の 判斷에 근거하여 賦與하였다.

Cline의 指標에 있어서와 같이 主觀的 判斷을 내리기를 꺼리는 學者들은 具體的고 客觀的인 要素들만을 使用하여 總體的 國力을 測定하려 勞力하였다. 一例로 Wilhelm Fucks(1960)는 國力(M)을 人口(P)와 에너지 및 鋼鐵生産(Z)에 의거하여 算出하는 9個의 公式을 만들었는데 그중 몇가지를 보면.

$$M = P^2z, \text{ 또는 } P^{3/2}z, \text{ 또는 } P^{1/2}z, \text{ 또는 } Pz^{1/3} \text{ 등이다.}$$

이와 비슷한 指標로는 F. Clifford German(1960)의

$$G = \text{國力} = N(L + P + I + M) \text{ 이 있는데}$$

$$N = \text{Nuclear Capability}$$

$$L = \text{Land}$$

$$P = \text{Population}$$

$$I = \text{Industrial Base}$$

$$M = \text{Military Size}$$

German 指標의 特異性은 N을 두개의 범주로 나눠 核武器保有國엔 「2」 非保有國엔 「1」의 스코어를 賦與함으로써 核保有國의 相對的 力量을 높인 점이다.

이밖에도 總體的 國力을 測定하려 만들어진 指標들은 不知其數로서, 總體的 國力이 끊임없이 學問的 挑戰의 對象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여러 종류의 國力指標가 있으므로 해서 오는 混亂이 결코 적지 않았음도 事實이다. 그러나 한가지 多幸스러운 것은 이들 指標들 사이의 相關關係가 相當히 높다는 發見이다. 다시말해 어느 指標를 採擇하느냐에 關係없이 國家들 사이의 相對的 地位가 비교적 安定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점을 體系的으로 보여주기 위해 Richard J. stoll과 Micael D. Ward

(1989)는 8個의 代表的 國力指數를 選擇하여 各 指數에 근거한 國力の 順位表들을 總體的으로 比較하였다. 國力の 크기에 따라 매겨진 各 國家의 順位를 Rank Correlation을 使用하여 두개씩 比較檢討한 바에 따르면, 總 28個 [  $8 \times (8-1) / 2$  ] 指數雙의 平均 相關係數는 0.821이나 되었고 가장 낮은 係數가 0.601인 反面 最高値는 無慮 0.935이었다. Stoll과 Ward의 研究 結果는 매우 意味있는 것으로서, 各 構成要素들의 複合的 相互作用에도 不拘하고 國力總量을 나타내는 指數를 使用하는 경우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國家別 順位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強하다는 一次的 判定이 可能함을 示唆한다.

#### 다. 宣傳과 實體의 乖離

戰爭遂行 潛在力을 分析하는데 世제로 어려운 點은 宣傳的 次元에서 各國이 發表하는 數値와 實體와의 사이에는 큰 隔差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韓國이 聖域으로 여기는 對北韓 戰力 70%線을 例로 들어 보자. 北의 攻擊이 있을 때 北쪽 軍事力의 70퍼센트를 保有하고 있으면 防禦가 可能하다는 計算에서 나온 이 數値의 軍事學的 根據를 論하자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關心은 이 70퍼센트線에 언제 到達할 것인가에 대한 政府의 豫測이다.

1979年初 韓國政府 關係者들은 1985年경에는 南韓의 軍事力이 北의 70퍼센트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러다가 1985년이되자 이들은 1990年代初에는 꼭 70퍼센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1990年 여름을 맞아 이 豫定日은 2000年代로 밀려 나고 말았다. 물론 70퍼센트線 到達日字가 자꾸 遲延된 데는 그 나름대로 理由가 없지 않다. 우선 攻擊보다 防禦를 爲主로 해야 하는 南韓의 視角에서는 防禦를 위한 準備는 아무리 많이 해도 不足한 느낌이 들게되는 法이다. 6.25뿐 아니라 그후에 계속돼온 北의 國內外 테러 行爲에 南의 被害意識이 커지지 않을 수 없었음은 누구도 否認할 수 없다.

더구나 南韓보다 10年이나 일찍 시작한 軍事力增強計劃에 힘입어 最小까지도 北의 軍事力 增強速度는 南의 그것을 上廻하는 정도였지 않는가?

事實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戰力指數에 근거한 「70퍼센트線 到達日字」가 자꾸 延期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원래 戰力指數는 多様な 武器體系와 質的인 差異를 勘案하여 部隊의 戰鬪能力을 相對的으로 評價하기 위해 만든 指標로서(吳寬治, 1989) 어느 程度의 客觀性은 維持할 수 있어야 한다. 더구나 1970年代 中盤부터 南의 年間 軍事費 支出이 北을 능가해 왔음을 볼 때 南北의 軍事力 比較에 좀 더 科學的이고 說得力 있는 接近方法이 要求되지 않나 생각된다.

戰鬪力과 戰爭遂行潛在力の 評價에 主觀的 要素가 加味되는 것은 被害意識에 사로 잡힌 南韓뿐이 아니다. 北韓은 軍事力에 관해서는 宜言的 次元의 聲明만을 주로 내보냈을 뿐, 아예 具體的인 資料를 提示해 본 적이 드물다.

이렇게 南北韓이 雙方의 相對的 戰力에 관해 正確한 情報를 갖지 못할 때 相互間 不信의 골은 더욱 깊어 지게 마련이며, 이 不信은 언젠가는 시작 돼야 할 軍備統制와 縮小를 위한 協商을 어렵게 만드는 根本原因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兩側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重要한 課題中の 하나는 「戰鬪力 +  $\alpha$ 」인 戰鬪遂行 潛在力을 計測하는 데, 主觀的 要素들은 되도록 줄이고 그 대신 客觀的이고 信憑性있는 資料를 提供하고 使用하는 風土를 造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霧圍氣만 생기면 潛在力을 어떤 公式을 써서 計算하는가는 크게 問題될 바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될 때 南北韓軍事力の 統合的 評價는 『戰爭遂行 潛在力面에서는 韓國이 越等히 優勢하지만, 動員軍事力面에서는 南北韓이 대체로 對等하고, 常備軍事力面에서는 北韓이 壓倒的으로 優勢한 것으로 判斷된다』(國防部, 1989 : 185)는 식의 記述을 벗어 날수 있을 것이다.



### Ⅲ. 軍事費支出을 통해 본 南北韓의 潛在力 比較

南北韓의 戰爭遂行 潛在力에 關係 概念整理가 안돼 있을 뿐 아니라 信憑性있는 客觀的 資料가 缺如된 現시점에서 兩側의 潛在力을 相對的 持久力의 觀點에서 檢討하는 方法은 없을까?

이에 對한 答은 이른 바 「代理接近法」(Surrogate Apporach)에서 찾을 수 있는데, 正確한 計測이 어려운 本來의 概念을 대신할 수 있는 變數를 찾아 그 變數의 變化패턴을 考察하는 方法을 말한다. 이때 「代理」로 쓰이는 變數의 代表性이 높아야 合은 再論할 必要가 없는데, 그러면 南北韓의 戰爭遂行 潛在力을 適切히 代表할 수 있는 變數는 무엇일까? 本章에서는 그러한 變數로 軍事費支出을 擇했는데 이는 두 가지 理由에서이다.

첫번째 理由는 理論的인 特性을 띠며 한마디로 하자면 年間 支出되는 軍事費는 一國의 戰爭遂行 潛在力의 總量과 正比例한다는 命題에 根據한다. 軍事費 支出의 決定要因이 多樣하고 複合的이며 또 時間에 따라 變하겠지만, 일단 決定된 軍事費는 그 國家의 防衛에 對한 意志와 能力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國家의 安全을 保障하기 위해 이 정도의 희생은 견디겠다는 合意가 導出되고 그 合意를 나타내는 가장 代表的인 徵表가 軍事費라고 믿어진다. 두번째 理由는 經驗的인 것인데, 軍事費와 國力을 나타내는 指標들 사이에는 統計的으로 아주높은 相關關係가 存在한다는 事實이다 (Rummel, 1972)

그러면 南北韓 軍事費 支出의 變化를 追跡하여 戰爭遂行 潛在力을 類推하는 方法으로는 무엇이 適合할까? 여러가지 試圖가 可能하겠지만 여기서는 軍事支出에 對한 두 종류의 模型을 考察함으로써 南北의 相對的 持久力을 比較檢討하고자 한다.

## 가. 作用一反作用에 根據한 軍備競爭 模型

1953年 休戰協定 以來 韓半島는 半戰爭·半平和의 狀態를 維持해 왔으며 南北韓은 歷史上 그 類例를 찾아 보기 힘든 軍備競爭을 치루어 왔다. 1980年代末 부터 시작한 冷戰終熄과 共產圈의 體制變化에도 不拘하고 두 개의 韓國사이에는 엄청난 긴장이 남아 있음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 世界的인 軍縮의 무드를 逆行하여 南北韓은 裝備와 築城에 있어서 軍事力을 增強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韓半島는 世界를 휩쓰는 自由와 開放의 물결이 미치는 못하는 死角地帶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南北韓間의 對決狀態는 하나의 力學關係이고 이 力學關係를 分析하기 위하여 T.W. Park (1980, 1982, 1986)은 兩國間의 軍事均衡을 軍備競爭의 側面에서 考察하였다. 이미 指摘한 바와 같이 軍事費가 戰爭遂行 總力量을 代表한다는 前提아래 이 研究들이 遂行되었음은 物論이다.

Richardson式 軍備競爭 模型을 韓半島에 適用시킨 이 研究의 結果로 南北韓間의 軍備競爭은 몇가지 特定한 類型에 따라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이 發見되었는데, 周知하다시피 Richardson式 模型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刺戟」(Stimulus)에 의해 作動되는 形態를 취하고 있다. 첫째, 敵對國들은 外部로부터의 危脅에 適應하여 自國의 軍備를 增加시킨다고 想定되며 이 危脅要素는 相對國의 軍費支出 水準에 의해 測定된다고 본다. 둘째의 假說은 軍備支出이 自國의 經濟에 주는 負擔에 관한것으로서, 相對國 軍費의 水準이 自國의 軍費를 올리게 하는 誘因으로 作用하지만 自國軍備의 水準은 未來의 軍備追加支出에 하나의 制約이 된다는 것이다. 이 두번째의 變數는 보통 疲勞要素라고 불리운다. Richardson 模型의 세번째 變數는 敵對國이 서로에

대하여 갖는 不滿 또는 嫌惡感(Grievances)으로서 軍費競爭을 始動시키는 機制役割을 하는 것으로 假定된다. 이 세 決定要因으로 構成되는 「作用一反作用」의 軍備競爭 模型은 보통 아래와 같은 微分方程式으로 表現된다

$$dx/dt = ky - ax + g \quad (1)$$

$$dy/dt = lx - by + h \quad (2)$$

여기서  $t$ 는 時間을 나타내며  $x$ 와  $y$ 는 각기 X國과 Y國의 軍事費 支出 水準을 表示한다.  $k$ 와  $l$ 은 防衛係數라고 부를수 있는데 敵國 總 軍事費의 每單位에 相應해서 올리는 自國의 軍事費 增加率을 意味한다. 이와 反對로  $a$ 와  $b$ 는 疲勞係數로서 自國 軍事費로 부터오는 經濟的 負擔率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g$ 와  $h$ 는 軍備競爭의 始發點에서 測定된 兩國의 相對에 대한 不滿을 表示하는 常數이다. 이 두 方程式을 풀이하면, 軍費의 增加率은 敵國의 軍費 水準(危脅要素)과 正(플러스)의 函數關係, 自國의 軍費 水準(負擔要素)과는 負(마이너스)의 關係, 그리고 不滿要素와는 正(플러스)의 關係를 갖는다는 것이다.

本來의 Richardson 模型(方程式 1과2)도 重要하지만 韓半島의 現實에는 이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二次微分方程式을 使用하는게 좀더 妥當할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위의 研究에선 이 두가지 模型들을 함께 分析하였다. 왜냐하면 南北韓의 政策決定者들에게는 現年度의 軍費支出 水準 뿐만 아니라 敵國의 軍費支出 增加率도 아울러 考慮돼야 될 事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危脅의 側面에서 볼 때, 比較的 적은 軍費를 가진 나라가 갑자기 大規模 投資를 하는 경우가 軍費過多支出이 낮은 增加率을 보이는 경우보다 더욱 警戒해야 할 對象이 되는 것은 自명한 일이 아닌가? 本來의 Richardson 模型에다 增加率의 變數를 더해서 나온 것이 아래의 加速·減速 模型이다.

$$d^2x/dt^2 = ky + m dy/dt - ax - c dx/dt + g \quad (3)$$

$$d^2y/dt^2 = lx + n dx/dt - by - d dy/dt + h \quad (4)$$

여기서  $d^2x/dt^2$  와  $d^2y/dt^2$ 는 각기 X國과 Y國의 軍備增加率의 變化速度를 나타내므로 加速 또는 減速 模型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m과 n은 兩國이 相對方의 軍費增加率에 對處하는 危脅係數이고 c와 d는 自國의 軍費增加率에서 起因하는 制約係數이다. k와 l, a와 b 및 g와 h는 方程式 1과 2에서와 똑같은 意味를 지닌다.

이 네개의 方程式으로 構成된 模型을 統計處理가 可能하도록 變形시킨 後, 1949 - 1983年 사이의 南北韓 軍費 支出에 適用한 結果, 南韓은 軍費의 水準에 (自國이나 敵國이나를 莫論하고) 敏感한 反應을 보이는 反面, 北韓은 軍費의 增加率(특히 自國 軍費增加率이 갖는 制動效果)에 銳敏하게 對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南北韓의 軍費競爭 機制가 다른 것은 兩國의 政策決定者들이 서로 相異한 戰略的 思考方式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韓國의 視角에서 보면, 分斷 以來 北의 危脅은 常存해 왔고 北의 越等히 큰 軍事力은 南쪽 사람들에 不安의 根據가 되어온 것이다. 相對的 劣勢에 놓인 韓國에 있어서는 防衛政策을 樹立하는데 北의 軍事力 그 自體가 가장 큰 威脅的 要素로 作用하게 되며 北韓 軍事力의 變化率은 二次的 重要性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北韓의 軍費競爭 行態는 주로 軍費의 變化率에 左右되는데 이는 두 가지 理由 때문이라고 본다. 첫째, 相對的으로 優勢한 軍事力의 所有國은 相對的으로 劣勢인 敵國의 總軍事力엔 그다지 큰 關心을 보일 必要가 없을 것이나, 敵國이 戰力 增強을 시작하면 이를 나타내는 軍費의 增加率에 敏感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에 對應해서 自國의 軍費 增加率을 調整할 것으로 期持된다. 둘째, 北韓에서 나오는 統計는 水準을 나타내는 數字는 거의 없고 그 대신 前年度에 對比 몇 퍼센트나 「超過達成」했는가만을 誇示하는 경우가 많다. 增加率에 焦點을 맞추고 움직이는 北韓의 社會的 風土에서 軍費가 결코 例外가 될 수 없음은 自明하다. 이러

한 南北韓間의 軍費競爭 趨勢는 南韓이 北韓보다 越等히 優勢한 軍事力을 갖게 될 때 까지 계속될 것으로 展望된다. 南韓이 優勢해진 뒤에는, 兩側의 行態가 맞바뀌어 北은 南의 全體 軍事力에, 南은 北의 軍費 增加率에 敏感하게 될지도 모른다.

#### 나. Stock-Flow에 根據한 軍費支出 模型

Richardson式 軍費競爭 模型은 軍事費의 水準을 높이고 낮추는 作用一反作用의 「機械的」 過程을 爲主로 하고 있어서 이것만으로 敵對國間의 軍事競爭을 說明하기에는 不足한 점이 없지 않다. 이를 補完하려고 考案된 것이 軍事費로 購買한 國防資產스토크(Defense Capital Stock)를 重要視하는 「Stock-Flow」모델로서, 蓄積된 國防資產과 이의 決定要因을 分析하기 위해 軍事費 水準뿐 아니라 政治·經濟 및 國際的 威脅등을 包含시킨 複合的 模型이다.

Stock-Flow 模型을 韓半島 狀況에 適用한 最初의 體系的 研究가 Ward and Park(1988)에 의해 遂行되었는데, 同 研究는 韓半島內의 軍費支出과 武器蓄積에 따른 重要的 軍事的·非軍事的 結果들을 計量化하고 몇몇 既存 研究(Ward, 1984; Ward and Mahajan, 1984; Ward and Mintz, 1988)에서 發展된 政治經濟的 接近方法에 따라 여러 變數들을 論理的인 理論의 틀 속에 整理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틀은 一連의 數學的 모델들로 表現되고 Continuous Time Econometric 方法(Bergstrom, 1983)을 使用하여 統計處理되었다.

Ward and Park (1987)의 數理 模型 自體는 非專門家에게는 大端히 難解함으로 여기서 소개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의 模型을 南北韓關係에 適用한 結果 (1) 모든 係數들은, 두개를 除外하고는, 豫想된 대로 符號와 크기를 가졌고 (2) 모델에서 다시 創出된 軍費關聯 數値는 實際의 資料와 크게 差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發見하였음은 意義있는 일이다.

內容面에서는 國防資產 購買와 豫算配分사이의 聯關을 論理的으로 糾明한 것 以外에, 同 研究는 軍事均衡을 調查하는 데 있어서 國際水準의 政治的



危脅의 重要性을 摘示하였고 國內의 政治的·經濟的 要因들이 軍費支出을 制限한다는 것도 밝혀냈다. 同 模型이 이처럼 높은 理論的·經驗的 說明力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根據한 政策實驗(Simulation)도 韓半島 軍事狀況에 대한 未來의 시나리오에 強한 示峻力을 갖는다고 하겠다.

1983年の 軍費를 베이스로하여 國際的 國內的 變數들을 1985年 부터 조금씩 變化시킨 Simulation의 結果는 特히 우리의 關心을 끈다. 여기서 擇한 變化의 方向은 北韓의 持續的인 經濟成長, 國際的 危脅의 減少, 그리고 南韓內의 국방비지출에 대한 政治的 制約 深化 등이다. 이 實驗에서 가장 두드러진 結果는 南韓의 經濟成長이 軍費支出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增加시킨다는 것이다. 北韓 經濟가 전혀 成長하지 않고 軍事部門에 投與하는 社會資源에 變化가 없다고 假定하더라도, 南韓 經濟成長의 一次的 效果만으로도 1994년까지 南韓의 軍費支出을 90億弗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北韓의 軍費支出은 60億弗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南韓의 政策決定者들이 軍事部門에 쓸 수 있는 GNP의 比率이 약 5퍼센트까지 낮아지면, 그리 큰 幅은 아닐지라도, 南北韓 兩側의 軍費支出이 조금 下向 調整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軍費支出에 대한 國內의 制約이, 經濟成長이나 國際的 危脅의 減少와 並行하지 않을 경우, 南韓에는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지만 北韓에는 덜 深刻한 結果를 招來한다. 따라서 Simulation의 끝 部分으로 갈수록, 南韓은 北韓의 軍事力 水準에 뒤지게 되고 그 隔差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南韓政府가 軍費支出計劃을 늘리려고 하게 될것이다.

마지막으로 韓半島内外에서 危脅의 水準이 낮아지면 南北韓 兩國의 軍費支出이 천천히 減少하는 傾向을 보일 것이며 이 때 減少의 幅은 北韓보다 南韓의 경우가 훨씬 클 것으로 展望되었다.

지금까지 Richardson式 模型과 Stock-Flow 模型을 통해 南北韓間의 軍事競

爭을 살펴 보았다. 두 모델·모두에서 軍事費支出을 決定하는 가장 重要的 機制는 「國防과 福祉사이의 反比例」 關係로 나타났다. 南北韓 兩國에는 國內經濟와의 關係에 비추어 政治적으로 受容할 수 있는 國防費 支出의 水準이 있다고 믿어진다. 南韓의 경우 이 水準은 GNP의 6퍼센트인 反面 北韓은 이보다 약 4배의 資源을 政府가 任意로 軍事部門에 投資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北韓은 南韓의 軍事力에 뒤지지 않기 위해 總經濟力의 1/5정도로 계속 軍에 投資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水準의 軍費를 南北이 계속 支出한다는 假定을 하면, 韓半島의 緊張은 減少될 기미가 안 보이며 兩側은 팽팽한 軍事對決狀態를 持續해 나갈 것이다. 軍費支出이 戰爭에 對備하는 能力과 意志를 함께 나타낸다는 것을 前提로 할 때, 軍費支出을 通해 投影되는 南北韓의 戰爭遂行 潛在力도 莫上莫下의 줄다리기를 계속할 것이 틀림없다.

#### IV. 結 論

「戰爭遂行 潛在力 = 戰鬪力 +  $\alpha$ 」라는 公式으로부터 시작한 本章은 戰爭遂行 潛在力이 概念的으로나 實際的으로나 얼마나 어려운 分析의 對象인가를 보여 주었다. 특히 一國의 潛在力을 따로 獨立시켜 擧論하는 것은 별 意味가 없고, 特定國에 對한 相對的 持久力이라는 觀點에서만 效用性이 있음을 論證하려 하였다. 이 相對的 持久力 自體도 어떤 尺度에 의해 一律적으로 測定할 수는 없고 단지 對決關係에 놓여있는 兩側의 力量을 서로 比較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脈絡에서 볼 때 南北韓의 相對的 持久力은 어떠한가? 常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人力과 經濟力 및 科學技術面에서 優勢한 南韓이 北韓보다 높은 戰爭遂行 潛在力量을 가지고 있다고 쉽게 斷定할 수 있는가? 아니면 軍費支出의 趨勢에서 나타났듯이 兩側은 엇비슷한 戰爭力量을 갖고 있는가? 이 質問들에 對한 解答은 未來에 일어날 戰爭의 性格과 戰爭 시작후 얼마나 많은 潛在力量을 顯在力量으로 轉換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만약 韓半島에서 豫想可能한 戰爭이 6.25와 같은 長期消耗戰이고 兩國의 軍需支援能力이 그런대로 維持될 수 있는 形態의 것이라면 많은 可用資源을 가진 南韓의 潛在力이 더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豫見하는 바와 같이, 未來戰이 速戰速決의 全面戰일 경우 南韓은 民需産業을 軍需로 轉換할 時間的 餘裕를 갖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都市化된 首都圈의 人口 密集現象은 戰時 動員體制의 稼動을 妨害하는 障礙要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現時點에서 내릴 수 있는 結論은 自明해 진다. 즉 戰爭에 對備하는 能力과 意志의 表象인 軍事費 支出을 놓고 볼 때 南北韓은 거의 對等한 位置에 있으며 이러한 軍事均衡속에 兩國은 安定된 對決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南北韓關係가 어떤 모습으로 變할 지라도, 統一이라는 最終目標에 이르기까지는, 軍事力의 均衡은 非軍事部門에서 解氷과 協調를 可能케 하는 礎石으로 남아 있을 것이 分明하다.

## 參考文獻

- 國防部, 1989, 國防白書 1989.
- 金俊逢, 1987, 韓國軍 少數精銳化의 集團力學的 研究, 서울:日海研究所 安保  
研究報告書 87-01.
- 安秉浩, 1990, 「軍 위상 확립의 길:새 位相定立에 대한 認識의 출발」,  
육군, 90년 여름호, pp.77-84.
- 吳寬治, 1989, 「남북한 군사력 비교」, 서울:韓國國防研究院 國防學術討論會  
發表 論文.
- Bergstrom, A.R. 1983. "Gaussian Estimation of Structural Parameters  
in Higher Order Continuous Time Dynamic Models", Econometrica.  
Vol. 51, pp. 177-52.
- Cline, Ray S. 1980. World Power Assessment: A Calculus of Strategic  
Drift. Boulder: Westview.
- Rummel, R.J. 1972, The Dimensions of Nations. Beverly Hills: Sage.
- Stoll, Richard J. and M.D. Ward (eds), 1989, Power in World  
Politics, Boulder: Lynne Rienner.
- Ward, Michael D. 1984. "Differential Paths to Parity: A Study of  
the Contemporary Arms R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8, pp. 297/317.
- Ward, Michael D. and A.K. Mahajan, 1984, "Defense Expenditures, Sec-  
urity Threats, and Governmental Deficit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28, No. 3, pp.382-419.
- Ward, Michael D. and A. Mintz, 1988, "Dynamics of Military spending  
in Israel",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1, pp.86-105.

- Ward Michael D. and K.Y. Park. 1988, "Dynamics of National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 Paper Presented at the Sejong Institute, Seoul.
- Fucks, Wilhelm, 1965, Formeln zur Macht : Prognosen uber Volker, Wirtschaft Potentiale, Germany : Verlags-Anstalt.
- German, F. Clifford, 1960, "A Tentative Evaluation of World Powe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4, pp.138-144.
- Moskos, Charles C, and F.R, Wood(eds), 1988, The Military : More than Just Job? Washington : Pergamon-Brassey's.
- Park, Tong Whan, 1986, "Political Economy of the Arms Race in Korea : Queries, Evidence, and Insights", Asian Survey, Vol. 26, No.8, pp. 839-850.
- Park, Tong Whan, 1982, "Arms Race Between the Two Koreas : An Empirical Estimation",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 No. 1, pp.70-89.
- Park, Tong Whan, 1980, "The Korean Arms Race : Implica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Northeast Asia", Asian Survey, Vol. 20, No.6, pp.648-660.

# 第4章 南北韓의 理想的인 人力 Modeling에 의한 軍縮人力規模 分析

- 朴在夏 (國防研究院 首席研究員)

I. 序 論 .....	85
II. 南北韓 軍事力 比較 .....	87
1. 常備軍事力 .....	88
2. 動員軍事力 .....	89
3. 戰爭遂行 潛在力の 比較 .....	90
III. 南北韓 軍事力 競爭 40年 .....	91
1. 南北韓 常備人力 競爭 .....	91
2. 南北韓 豫備人力 競爭 .....	93
3. 南北韓 軍事投資費의 競爭 .....	94
IV. 軍事力規模 Modeling .....	95
1. 基本概念 .....	95
2. 關聯 變數 分析 .....	97
3. 標本國家의 抽出 .....	97
4. 回歸 모델링 .....	100
V. 南北韓 緊張緩和의 適正 軍事力規模 .....	102
1. 安保威脅의 減少에 따른 常備人力規模의 變化 .....	102
2. 武器體系 水準에 따른 모델의 感度分析 .....	104
VI. 結 論 .....	108

※ 本稿는 筆者의 所屬機關의 公式 立場이 아니라 筆者個人的 見解임.

## I. 序 論

本 論文은 현재 남북한이 처해 있는 軍事環境을 분석하고, 특히 軍縮 모델링에 의하여 남북한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適正軍事力 規模를 決定하는 데 그 目的이 있다.

軍事力은 한 나라의 國家利益을 보호하는 데 있어 밑받침이 된다. 한 나라의 국가이익 중 가장 중요한 이익은 安保利益으로서 國民의 生存權 保障이며,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바로 戰爭을 抑制하고 平和와 安定을 維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타 국가와 빚어질 갈등 속에서 自衛 또는 自己保護를 위해 타 국가를 적극적으로 說得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軍事力이 존재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변함없이 적용된다. 클라우제비츠가 일찌기 주장하였듯이 軍事力은 결국 國家政策의 最後 手段인 것이다. 100년전 舊韓末 일본의 한반도 강점. 40년전 북한의 6.25남침 등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예증하고 있는데,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열세한 국가 및 국민들의 평화와 자유가 강대국에 의해 얼마나 처절하게 유린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軍事力은 國民의 生存權을 保障하는 最小의 必修條件이 된다.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세계는 미소의 이데올로기 대결에 의한 冷戰體制에서 신데땅뜨 體制로 가고 있다. 100년전의 마르크스 공산주의 이론은 이제 더 이상 대안적 진리로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으며, 세계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國家 運營보다는 自國의 經濟利益을 중심으로 한 國家 運營이라는 方向으로 그 歷史를 選擇하게 되었다.

19세기 낙관주의 철학자들<sup>1)</sup>은 經濟利益을 중시하는 産業社會는 戰爭止揚의 社會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물질주의가 팽배하면 역으로 이데올

로기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 바, 物質主義에 대한 격렬한 反發이나 反動이 나타날 가능성, 즉 이상적으로 치장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열망으로 표현되어 目的達成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이 세계를 파괴할지 모를 가능성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즉, 역사의 진행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현재와 같이 신데깡트 체제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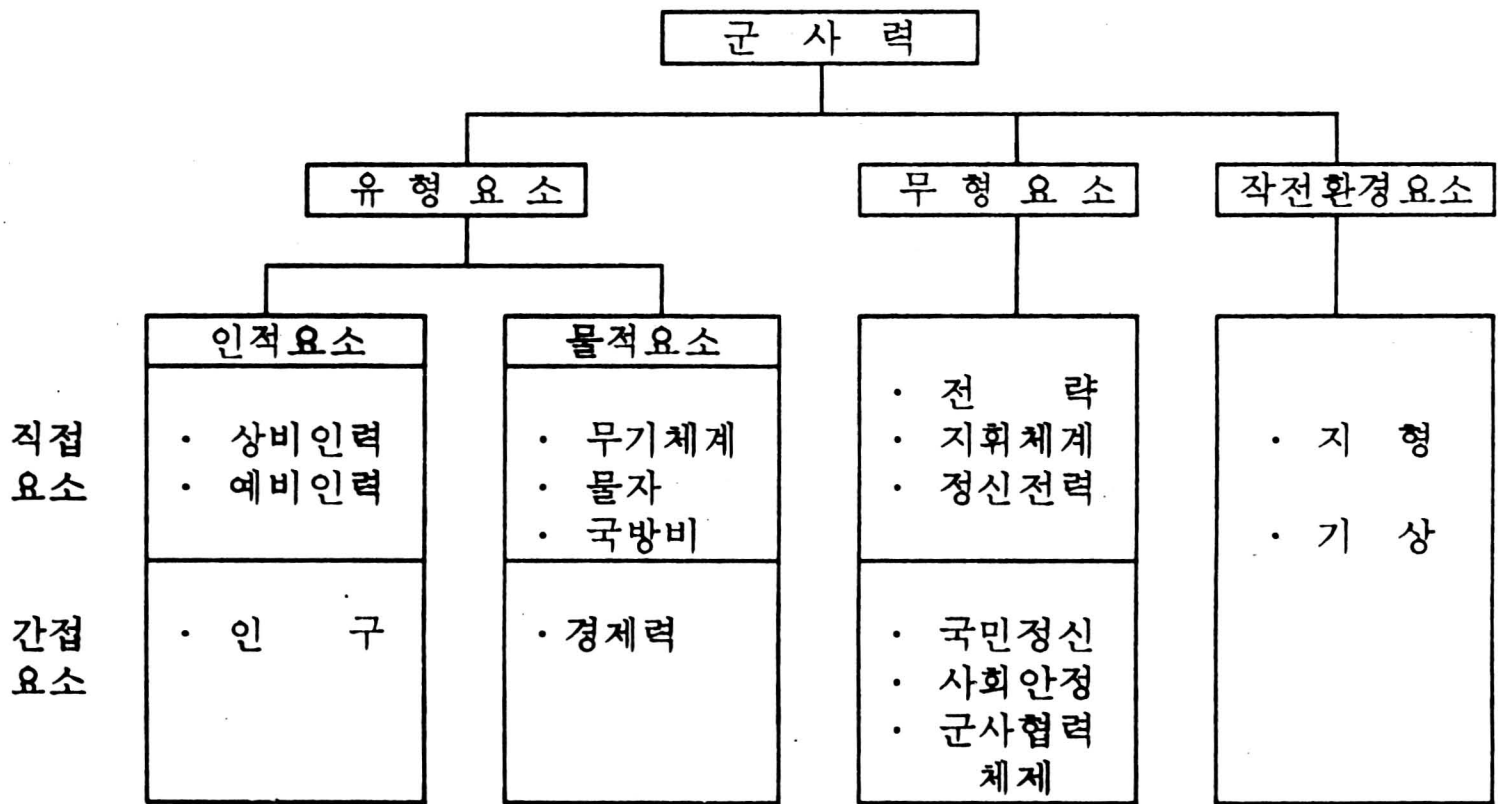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대국이었던 蘇聯과 中共이 資本主義 國家들과 經濟的으로 協力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南韓과도 關係改善을 원하고 있으며, 과거의 冷戰體制와 共產主義를 清算하는 이 세계적인 신데깡트의 흐름으로 인하여, 北韓은 독자적으로 냉전체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이 바로 南北韓의 軍縮으로 連結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앞으로 南北韓 軍事力의 少數精銳化는 필연적 과제로 부상할 수 밖에 없다.

비록 군축이 아니더라도 오늘날의 상황하에서는 어느 나라든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가 가능한 수준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적 군사력 건설 보다는 質的 軍事力 建設을 선호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이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남북한 긴장완화에 대비, 지금까지의 軍事力 現代化 政策을 계속하면서 少數精銳化 政策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 II. 南北韓 軍事力 比較

軍縮에 관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 우선 남북한간의 軍事力을 比較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모델링을 위한 基本 變數를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군사력은 有形要素와 無形要素 그리고 군사력이 사용되고 있는 作戰環境에 대한 適應力의 總體的인 要素의 結合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有形要素는 人力, 武器體系, 支援體系가 결합된 軍隊組織을 의미하고, 無形要素란 軍 간부의 統率力, 戰略, 戰術, 訓練, 精神力 및 士氣 등이 복합되어 軍대조직의 有效性 즉 戰鬥力 發揮 程度를 결정짓는 要素이며, 作戰環境은 지형, 기상 등 軍대의 상대적 조건을 제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시 有形要素와 無形要素는 直接要素와 間接要素로 나눌 수 있



〈그림 2-1〉 군사력 구성요소

는 바 直接要素는 전쟁 중 직접 운용되는 요소로서 人的要素에 常備 및 豫備人力, 物的 要素에 武器體系, 物資, 國防費, 無形要素에 戰略, 指揮體系, 將兵의 精神戰力을 들 수 있으며 間接要素로는 人的 要素 중 그 나



라의 人口, 物的 要素 중 그 나라의 經濟力, 無形要素 중 國民精神, 社會安定, 軍事協力 體制 등이 될 수 있다. 군사력을 비교할 때 無形要素와 作戰環境要素는 정량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주로 有形要素만 비교하게 된다.

軍事力을 수준별로 구분해 보면, 常備軍事力, 動員軍事力, 戰爭潛在力으로 대별될 수 있다. 常備軍事力은 적의 위협에 대비하여 配置되어 있거나 또는 投入 가능한 상태로 確保되어 있는 現在 戰力으로 즉각 사용 가능한 군사력을 말한다. 動員軍事力은 動員令 宣布日로부터 수일 이내에 동원되어 투입 가능한 군사력을 말한다. 戰爭遂行 潛在力은 전쟁 발발 이후 전쟁 지속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인력, 경제력, 과학기술, 행정력 등을 망라한 國力의 水準을 의미한다. 이상의 세 가지 수준의 南北韓 軍事力을 量과 質의 側面에서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常備軍事力

北韓은 常備軍事力에 있어서 攻擊用 武器體系, 즉 지상전을 위한 전차, 해전을 위한 전투함, 잠수함, 공중전을 위한 전술기가 남한에 비하여 단연 우세하기 때문에 그들의 전략이 방어가 아니라 攻擊 爲主의 先制奇襲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비인력의 訓練度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기습 가능하도록 服務期間을 남한보다 3배 이상 늘려 훈련시키고 있다.

< 표 2-1 >

상비군사력 비교

	남	북	비 교
병 력	65만	104만	1 : 2.2
사단(여단)	48개	55개	1 : 1.2
■	1500대	3500대	1 : 2.3
■	4000개	9000개	1 : 2.3
■	170척	460척	1 : 2.7
■	0	24척	0 : 24
■	480대	830개	1 : 1.7
훈련도(복무기간)	2.5 - 3년	7 - 10년	1 : 2.8~3.3
군사비(투자비)	GNP 5%(23억불)	GNP 24%(22억불)	1(1) : 5(1)

※ 자료 : 1989년 국방백서/TIME JULY 2, 1990, pp. 2

2. 動員軍事力

動員軍事力에 있어서 남한은 북한에 비하여 동원인력에 대한 평시 훈련 시간은 열세하지만 數的으로는 단연 優勢하다. 이것은 南韓은 先制 奇襲攻 擊 爲主의 戰略이 아니라 防禦 爲主의 戰略으로 構策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평시에 즉각 작전 가능한 상비인력 배치에 역점을 두는 것보다는 北韓의 攻擊을 받은 以後 防禦를 위하여 動員할 수 있는 豫備戰力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物資資源動員에서는 한국이 量的·質的 측면에서 모두 우세하다. 즉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보유대수 면에서 한국이 북한 대비 약5배로 우세하다.

< 표 2-2 >

남북한 동원 및 예비인력

단위 : 만명

구 분		남	북	비 교
동 원 사 단		14개	26개	1 : 1.9
예비 인력	동원인력	226.6	119.0	2 : 1
	예비인력	792.0	324.4	2.5 : 1

※ 자료 : Military Balance 89-90

3. 戰爭遂行 潛在力의 比較

전쟁사에서 보여주듯이 전쟁을 일으키는 측은 항상 단기에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나 전황에 따라 장기전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長期戰에 승리하려면 반드시 戰爭遂行 潛在力이 있어야 하는 바 북한은 남한보다 이러한 점에서 열세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도 南韓은 平時 戰爭抑制를 目的으로 防禦爲主의 戰略을 構策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3 >

남북한 전쟁수행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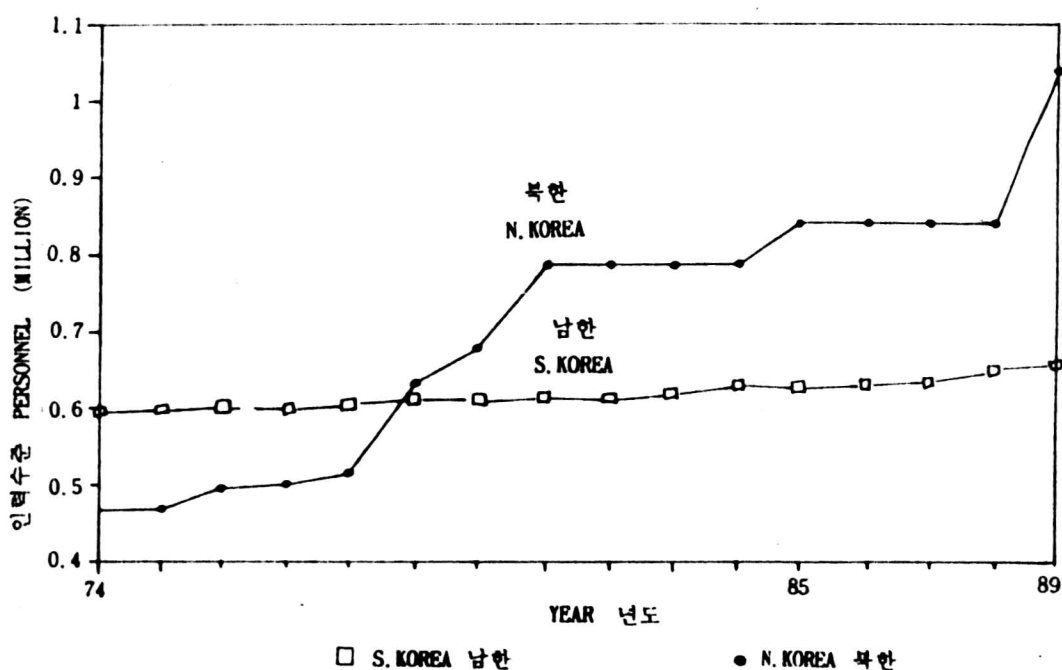
구 분		남	북	비 교
G N P		1451억불	200억불	7.3 : 1
인 구		4천3백만명	2천3백만명	1.9 : 1
노동력 비율	산업	27%	30%	0.9 : 1
	서비스	52%	43%	1.2 : 1
	농업	21%	21%	1 : 1
수 출		607억불	24억불	25 : 1
수 입		518억불	31억불	16.7 : 1

※ 자료 : TIME July, pp. 32, 1990

### Ⅲ. 南北韓 軍事力 競爭 40年

#### 1. 南北韓 常備人力 競爭

適正 軍事力은 1차적으로 적의 위협에 따라 상대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0년간 북한의 상비인력은 줄곧 증강 일로에 있었다. 60년대 북한은 40만을 유지하면서 우세한 화력과 기동력, 武器體系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력이 열세하였기 때문에 量 爲主의 軍事力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북한보다 20만이 많은 60만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南韓의 60-70년대 줄기찬 經濟成長으로 常備軍事力을 양적 증가보다는 質的 提高(武器體系 現代化) 方向으로 發展시켰으며, 이에 비해 경제력이 열세한 北韓은 量的으로 人力을 增加시킬(90년 현재 104만)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南北韓의 끊임없는 軍備競爭 實例이다.



〈 그림 3-1 〉 남북한 상비인력 경쟁

출처 : 한국-국방부, 「국방통계연보」, 1961-1990  
 북한-ISS, The Military Balance, 1972-1990

만일 남북한 軍縮會談이 성사된다면 이러한 끊임없는 군비경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느 規模의 人力 水準으로 減縮해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人力의 質과 量, 武器體系의 質과 量, 國防費의 規模,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두 국가간의 安保威脅度<sup>3)</sup>에 따라 다를 것이다.

南韓의 常備人力 水準은 정원과 마찬가지로 전력증강사업 실시 이후 연평균 3,554명씩 增加하였으며, 北韓의 常備人力 水準은 1979년과 1989년에 대폭 增加하였는데, 이것은 徵集年齡과 現役 服務期間의 延長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北韓의 現역 복무기간은 1973년부터 해군과 공군이 4년이었으나 現역 복무기간을 연장하였고, 1974년부터 육군이 5년, 1976년부터 해군이 5년으로 現역 복무기간을 연장하였고, 1979년부터 징집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춤으로써 現역 人力수준이 남한을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85년부터는 해군이 다시 5년 내지 10년으로, 1989년부터 육군이 5년 내지 8년으로 現역 복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現役 人力 水準은 現在 100萬 명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상을 살펴볼 때, 北韓이 경제적 낙후에도 불구하고 現역 복무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現役 人力水準을 높이는 것이나 南北의 人力水準이 漸增하는 것은 서로 대치하고 있는 相對國의 人力規模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판단된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남북한이 나아간다면 2000년에 가서 한국은 120만, 북한은 160만을 상회하는 상비인력이 될 것이다. 이때 군사비지출은 이것의 유지를 위하여 물론 새로운 新規投資를 감안할 때 남한의 경우 GNP의 6%, 북한의 경우 GNP의 24%이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도한 군비지출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향한 경이적인 經濟成長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남북한이 상호 위협을

느끼지 않기 위해 신뢰구축과 함께 平和條約 締結의 필요성이 절실히  
느끼게 된다.

## 2. 南北韓 豫備人力 競爭

남한이 70년 중반부터 武器體系를 現代化하고 民防衛隊를 編成하자 북한  
은 80년대 들어 노동적위대의 연령을 45세에서 60세로 늘려 예비전력의  
증가를 꾀하였으나 아직도 수적으로 남한에 비하여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시간면에서는 북한이 단연 우세하다. 남한은 1990년 1월  
豫備軍基準 編成年齡을 35세에서 33세로 낮추어 수적으로 북한에 비하여  
우세한 예비인력을 다소 줄이는 데 노력하였다.

< 표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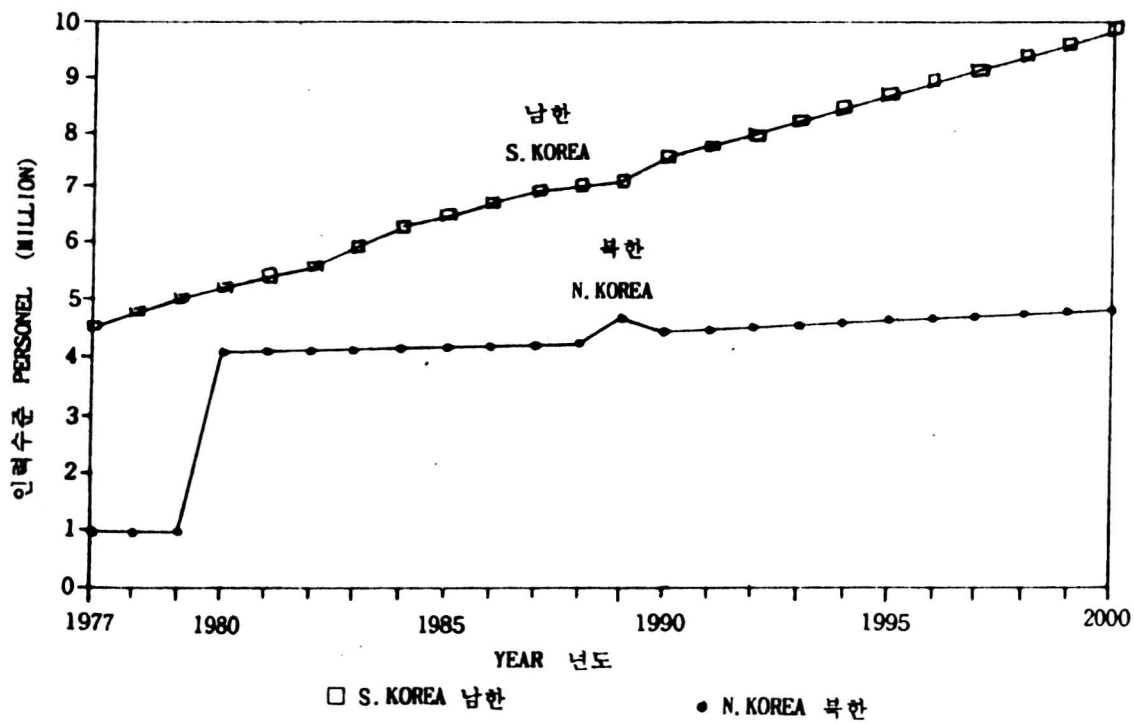
남북한 예비인력

단위 : 만명

년 도	동원사단			예비전력							
	남 한	북 한	남한/ 북한	동원인력			예비인력			기 타	
	(개)	(개)	(%)	남한 제1 전투군	북한 교도대 (사단)	남한 / 북한 (%)	남한 지역 전투군	북한 노동 적위대	남한 / 북한 (%)	남한 민방위	북한 붉은 청년 근위대
77	12	23	52	150.6	97.0 (30)	155	155.0	105.2	143	360.2	
80	12	23	52	166.6	101.2 (30)	165	176.5	308.4	57	424.2	107.0
83	12	23	52	186.6	105.0 (30)	178	220.9	308.4	72	495.2	
86	12	23	52	210.6	111.0 (54)	190	251.4	323.4	76	512.3	
89	14	23	54	226.6	119.0 (54)	190	206.7	323.4	79	537.3	81.0

※ Military Balance '77~89 참조

남북한 豫備人力에 관하여 과연 2000년까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면 南韓의 경우 2000년어가서 1000만을 육박하고 北韓의 경우 약 500만을 육박하게 된다. 이것은 현재 豫備人力의 比率, 즉 南韓 對 北韓 1.5:1이 2:1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는 2배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남한의 인구증가율이 현재의 1.1%에서 0.8%로 떨어지더라도 북한의 인구가 남한의 인구에 비하여 2:1이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남한의 예비인력이 북한에 비하여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그림 3-2 〉 남북한 예비인력 경쟁

### 3. 南北韓 軍事 投資費의 競爭

軍事投資費란 戰力增強(주로 武器體系)을 위하여 投資되는 國防費로서 통상 국방비의 30%이상을 차지한다. 投資費는 常備人力 維持와 密接한 聯關을 가지고 있다. 즉 새로운 무기체계를 획득하게 될 경우 이의 운용을 위한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증가하면 상비인력이 증가한다.”



남한은 그간의 경제성장과 전력증강 사업으로 90년대 초반에는 투자비 누계에 있어서 지난 40년동안 북한이 무기체계획득을 위하여 투자한 누계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0년대 초반(91-92)에 北韓은 軍縮協商에 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며 이 시기를 놓치면 투자비 누계에 있어서 韓國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 군비협상에 더욱 어려운 조건이 주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2 〉 남북한 군사투자비 누계치(1950-2000)

단위 : 해당년도의 미화 백만불

연 도	남 한	북 한
1950	2	4
1950	31	42
1960	67	143
1965	93	807
1970	186	2,557
1975	810	5,966
1980	5,941	12,538
1985	12,580	15,895
1990	24,070	26,260
1995	44,100	39,370
2000	77,080	55,750

\* 자료 : KID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 No.2, Winter, 1989, p. 167

#### IV. 軍事力 規模 Modeling

##### 1. 基本 概念

南北이 軍事力 競爭을 止揚하기 위해서는 우선 相互 信賴 構策이 되어

야 하며, 이 신뢰구축이 되면 軍縮 協商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그 대상은 정량화가 가능한 군사력 즉, 有形要素의 常備軍事力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軍縮對象은 특히 相互 奇襲攻擊 戰略을 遂行하는 데 必要한 常備人力과 武器體系(전차, 전술기, 전투함, 잠수함)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在來式 戰力の 減縮對象은 人力이다. 왜냐하면 人力은 바로 攻擊用 武器體系 運用人力과 直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軍縮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常備人力規模(軍事力 規模)가 된다고 하겠다.

常備人力規模(軍事力 規模)를 결정하는 모델링은 두가지로 집약된다. 첫째는 解釋的 모델링으로서 人力規模를 決定하는 變數들을 하나의 解釋的 關係式(Analytic function)으로 만들어 常備人力規模를 從屬變數로 놓으면서 산출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Wargame Simulation 방법으로 실제 常備人力에 投入되는 戰爭狀況을 假想하는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여 戰爭目的을 달성하는 防禦水準 또는 戰爭 終結時間에 따라서 常備人力 規模를 發見하는 방법이다.

여기에서 두번째 방법의 Simulation Modeling은 함수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변수들을 집합하여 상호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극히 주관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常備人力規模를 決定하는 方法論은 主觀的인 要素를 排除할 수 있고 客觀性을 提高시킬 수 있는 前者의 解釋的 方法論이 되어야 할 것이다.

## 2. 關聯 變數 分析

適正 常備人力에 관한 關係식을 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변수는 제2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사력을 구성하고 있는 有形要素 즉 상비인력, 인구 등의 人的 變數와 國內총생산(GDP), 국방비, 무기체계 수준 등의 物的 變數, 그리고 안보위협도 및 상비인력의 질 등의 無形 變數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모델 추정에 직접적으로 이용되는 변수는 나중에 분석하기로 하고, 세계국가를 상대로 國內總生産(GDP)과 安保威脅度라는 두 變數間의 關係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상관관계(Correlation)를 발견할 수 있다.<sup>5)</sup>

(상관관계)	國內총생산(GDP)	안보위협도(WARSTATE)
國內총생산(GDP)	1.0000	.0365
안보위협도(WARSTATE)	.0365	1.0000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安保威脅도와 國內總生産(GDP)의 두 變數 間에는 相關關係가 0.0365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 두 변수가 어떤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그룹핑 변수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들 간의 낮은 상관관계는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그 이유는 만일 두 변수 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면 두 변수 중의 하나는 비교 對象國家를 선정하는 데 별로 기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3. 標本 國家의 抽出

解釋的 모델링을 이용, 南北韓의 常備人力 規模를 발견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 첫번째는 지난 40년간 남한의 常備人力規模의 變化를 觀察함으로써 상비인력 관계식을 유도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현재 최소한의 방어제도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中·先進國으로부터 상비인력 관계식을 구하는 방법인 바, 첫번째 방법은 남북한의 끊임없는 군비경쟁을 유도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를 지양하고 후자의 방식으로 남북한의 適正 常備人力 규모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국가를 선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세계 모든 국가를 비교 대상국가로 삼는 것이고, 두번째 방식은 우리 나라와 어떤 의미에서든지 類似한 與件을 갖는 國家만을 比較 對象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두 가지 방식은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질 것이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석적 모델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된 연구 방법으로 回歸 分析을 이용하게 되므로 표본이 되는 비교 대상 국가들간의 동질성(homogeneity)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유사한 여건을 갖는 국가를 선정하여 비교하기로 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類似한 與件'을 갖는 국가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연구 목적상 남북한과 '類似한 國防環境'을 갖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유사한 국방환경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들을 검토하기로 한다. 國防環境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인을 安保的인 要素와 經濟的인 要素의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하기로 한다. 먼저 經濟的인 要素로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國民總生産(GNP)과 國內總生産(GDP)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共產主義 國家도 비교 대상에 포함되는 까닭에 國內總生産을 決定 要因으로 하는 것이 국민총생산을 고려하는 경우보다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安保的인 要素로 安保威脅度 (WARSTATE)란 指標를 생각하기로 한다. 안보위협도란 그 나라의 안보위협 상태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平和 狀態의 1부터 테러 및 休戰狀態 4, 局地戰狀態 6, 全面的인 世界戰爭 狀態를 나타내는 9까지의 指數로 설정되어 있다.<sup>6)</sup>

南北韓 현재 休戰狀態下에서 130만을 휴전선 중심으로 배치하였기 때문에 상호의 安保威脅도를 4로 볼 수 있다. 과연 남북한은 안보위협도 4에 걸 맞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가? 이것을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軍事力規模 決定에 관한 관계모델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의 안보위협도와 유사한 標本國家를 찾아 회귀모델링을 필요가 있다. 우선, 세계의 114개 국가 중 안보위협도가 4인 8개의 국가를 선별 하면 다음과 같다.

< 표 4-1 > 표본국가의 선발 (안보위협도 = 4)

구 분	인구 (백만명)	상비인력 규모 (천명)	상비인력의 質 (100 기준)	GDP (십억불)	국방비 (백만불)	무기체 계수준 (9 기준)	안보 위협도 (9 기준)
베 트 남	57.0	900	21	11.0	2,200	3	4
캄보디아	6.0	25	10	0.7	60	1	4
이스라엘	4.0	488	48	20.6	6,461	8	4
레 바논	3.2	35	8	3.5	576	3	4
리 비 아	3.2	73	4	33.0	709	3	4
소 련	272.0	3800	26	1,450.0	214,000	6	4
니카라구아	2.8	49	11	2.7	125	2	4
남아프리카	29.0	82	42	49.4	2,769	6	4
모잠비크	10.0	28	1	2.8	200	1	4
남 한**	41.0	62.2	22	68.4	517.3	4	4
북 한**	19.0	785	15	18.8	1916	3	4

\* 자료 : A Quick and Dirty Guide to War, 1985,

1, James E. Dunnigan and Austin Bay

#### 4. 回歸 모델링 (Regression Function Modeling)

본 절에서는 國防費의 經濟的 運用 側面에서 “입력(INPUT) = 출력(OUTPUT)”이라는 生産函數(Production Function)의 기본 이론을 적용하여 모델을 추정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입력이 되는 요소와 입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력 요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방문제에 있어서 入力 要素로는 國防費(LMILBUDG)를 들 수 있다. 국방비가 투자되어야만 국방 인력에 대한 급여 지급 및 유지가 가능하고, 무기등의 군장비가 획득,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國防費 외에도 국방의 입력 요소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성원 및 국가적 차원의 배려 등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무형적인 변수는 제외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그리고 國防의 出力 要素로는 常備人力規模(ACTMAN), 常備人力의 質(MANQUAL), 武器體系 水準(MEQUIP)등을 고려한다. 여기서 상비인력수준과 함은 상비인력의 양적 지표인 상비인력 숫자를 의미하고, 상비인력의 질이라 함은 상비인력의 질적 지표를 나타내는 변수이다. 또한 무기체계 수준은 무기체계의 질적 수준과 양적 수준을 동시에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이제 국방비를 종속변수로 하고 통계패키지(SPSS)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國防費 決定모델을 추정하면 종합 상관관계 계수가 .92673인 다음의 식(관계식 1)을 얻을 수 있다.

상관계수 :	LMILBUDG	LACTMAN	MEQUIP	MANQUAL
국방비 (LAILBUDG)	1.000	.903	.791	.601
상비인력 (LACTMAN)	.903	1.000	.651	.542
무기체계수준 (MEQUIP)	.791	.651	1.000	.906
상비인력수준 (MANQUAL)	.601	.542	.906	1.000



<모델 추정>

R Square = .92673

F = 21.08116          Signif F = .0029

\*\*\*\*\* MULTIPLE REGRESSION \*\*\*\*\*

Equation Number 1    Dependent Variable..    LMILBUDG

----- Variables in the Equation -----					
Variable	B	SE B	Beta	T	Sig T
MANQUAL	-.07055	.04278	-.47732	-1.649	.1600
LACTMAN	.88296	.22461	.63367	3.931	.0111
MEQUIP	.81863	.32328	.81117	2.532	.0524
(Constant)	1.11888	.87954		1.272	.2593

LMILBUDG = 1.1189 - .0706 MANQUAL + .8830 LACTMAN + .8186 MEQUIP

i.e.  $ACTMAN = \exp\left[\frac{1}{.8830} \left\{ -1.1189 + LMILBUDG + .0706 MANQUAL - .8186 MEQUIP \right\}\right] \dots\dots$  (관계식 1)

상비인력규모 =  $\exp\left[\frac{1}{.8830} \left\{ -1.1189 + \text{국방비총액 (백만불)} + \text{상비인력수준 (만)} - .8186 \text{ 무기체계수준} \right\}\right]$

※ 단어의 첫자 L 은 LOG를 의미 : LACTMAN = LOG (ACTMAN)

위의 상비인력규모 결정모델(관계식 1)에 우리 나라의 자료를 대입하여 適正 現役規模를 도출하면 64.3만명이 된다. 이것은 90년의 상비인력규모 (65만) 보다 약간 적은 규모이나 거의 비슷하다.

## V. 南北韓 緊張緩和와 軍事力 規模

### 1. 安保威脅의 減少에 따른 常備人力規模의 變化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면 과연 어느 정도의 상비인력규모가 적정할까? 본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여건과 비슷한 중진국 및 선진국을 겨냥하여 國內總生産이 500억불 내지 5500억불인 국가를 선발하고, 安保環境에 있어서도 남북한과 유사하면서 최소한의 방위체제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국가, 즉 安保威脅度의 指數가 전체 범위 1~9중 2~3인 국가를 선발하기로 한다. 이상의 기준으로 비교 대상국가를 선발하면 다음과 같다.

〈 표 5-1 〉 비교 대상국가의 추출

구 분	인구 (백만명)	상비인력 (천명)	상비인력의 質	GDP (십억불)	국방비 (백만불)	무기체 계수준	安保 威脅度
중 국	1,059	3,988	16	360.0	22,800	3	3
인도네시아	161	81	10	84.3	2,926	2	3
인 디 아	730	1,120	27	160.6	5,556	3	2
프 랑 스	54	493	42	537.4	21,381	7	2
영 국	56	321	51	473.4	25,168	7	2
터 키	49	569	19	52.8	2,300	3	2
폴 랜 드	37	340	20	120.5	6,254	4	2
유 고	23	240	18	61.8	1,774	3	2
스 페 인	38	347	12	177.5	4,929	3	2
네덜란드	14	103	18	137.0	4,556	7	2
브 라 질	131	277	8	288.1	1,838	3	2
나이지리아	85	133	15	55.3	1,800	3	2

\* 자료 : A Quick and Dirty Guide to War, 1985,

James E. Dunnigan and Austin Bay

이들 10개 국가를 대상으로 회귀함수를 이용, 常備人力規模(ACTMAN), 國防費(MILBUDG), 人力水準(MANQUAL), 武器體系水準(MEQUIP)의 관계식을 통계 패키지(SPSS)를 이용, 회귀(Regression)하여 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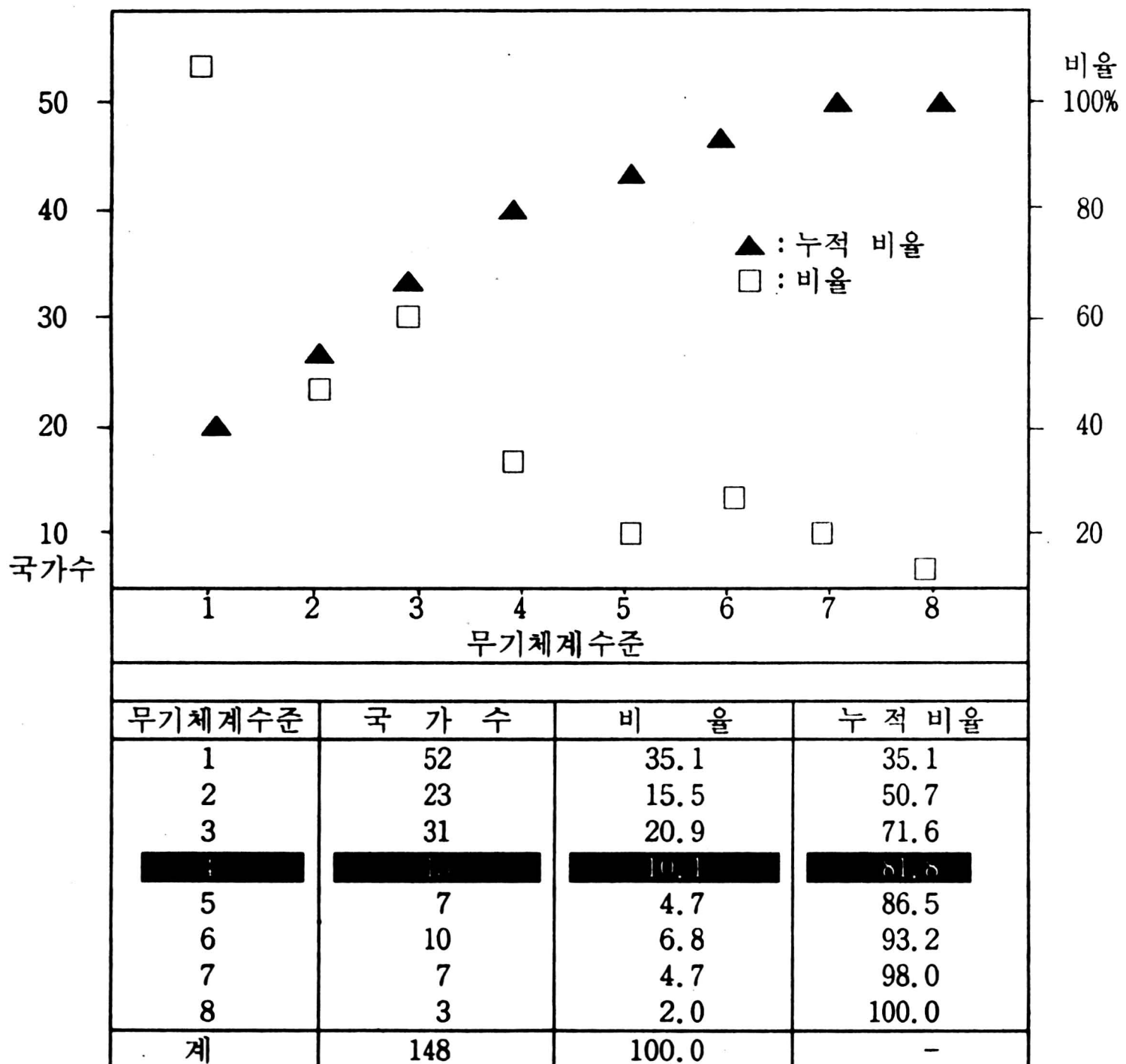
R- Square = .85187					
F = 15.33585		Signif F = .0011			
Equation Number 1 Dependent Variable.. LMILBUDG					
Variables in the Equation					
Variable	B	SE B	Beta	T	Sig T
MANQUAL	.01254	.01804	.16114	.695	.5066
LACTMAN	.70100	.16517	.67154	4.244	.0028
MEQUIP	.34786	.12868	.64395	2.703	.0269
(Constant)	2.71354	1.11479		2.434	.0409
LMILBUDG = 2.7135 + .0125 MANQUAL + .7010 LACTMAN + .3479 MEQUIP ..... (관계식 2)					
i.e. ACTMAN = exp [ $\frac{1}{.7010}$ { -2.7135 + LMILBUDG + .0125 MANQUAL - .3479 MEQUIP } ] ..... (관계식 3)					
상비인력규모 = exp [ $\frac{1}{.7010}$ { -2.7135 + LOG(국방비) - .0125 인력의 질적수준 - .3479 무기체계수준 } ] - .3479 MEQUIP } ] ..... (관계식 3)					

위의 國防費 決定式(관계식 2)을 정리하여 適正 常備人力水準 決定式으로 변화하면 다음의 식(관계식 3)과 같이 되며, 여기에 우리나라의 자료를 대입시켜 정리하면 현재('90)상비인력수준의 58%에 해당하는 38만 3천명의 適正 常備人力規模가 도출된다.

## 2. 武器體系 水準에 따른 모델의 感度 分析

여기서는 適正 常備人力規模 決定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서 무기체계 수준을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를 고정시키고, 武器體系 水準의 變化에 따른 適正 常備人力規模의 增感을 관찰하는 모델의 感度分析(Sensitivity Analysis)을 해보기로 한다. 우선 세계 각국의 武器體系 水準의 통계에서 < 표 5-2 >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 표 5-2 > 세계 국가와 무기체계 수준



무기체계수준이 1인 나라의 수는 세계의 148개국중 51개 국가로서 전체의 3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체계 수준 6이상의 국가 비율은 전체의 6.8%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武器體系 水準이 높을수록 常備人力規模의 相對度數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무기체계수준을 높이면 그만큼 상비인력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南韓의 武器體系水準은 상위 20%에 속하는 4로 나타나 있다.

이제 무기체계 규모 변화에 따른 모델의 感度分析을 하기 위하여 앞의 關係式 2, 3에 나타나 있는 안보위협도에 따른 적정 상비인력규모 결정식에서, 다른 변수는 고정시키고 武器體系 規模 變數만의 式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5-3 〉 무기체계 규모에 따른 적정 상비인력규모 결정식

안보위협도	적정 상비인력규모 결정식
4 ( 현재상태 )	$\text{상비인력} = \exp\left[\frac{1}{.8830} \{ 8.9843 - .8186 \text{ 무기체계수준} \}\right]$ <p style="text-align: right;">..... (관계식 5)</p>
2 ( 긴장완화 )	$\text{상비인력} = \exp\left[\frac{1}{.7010} \{ 5.5615 - .3479 \text{ 무기체계수준} \}\right]$ <p style="text-align: right;">..... (관계식 4)</p>

따라서 武器體系 각 수준의 安保威脅度別 남북한 적정 상비인력규모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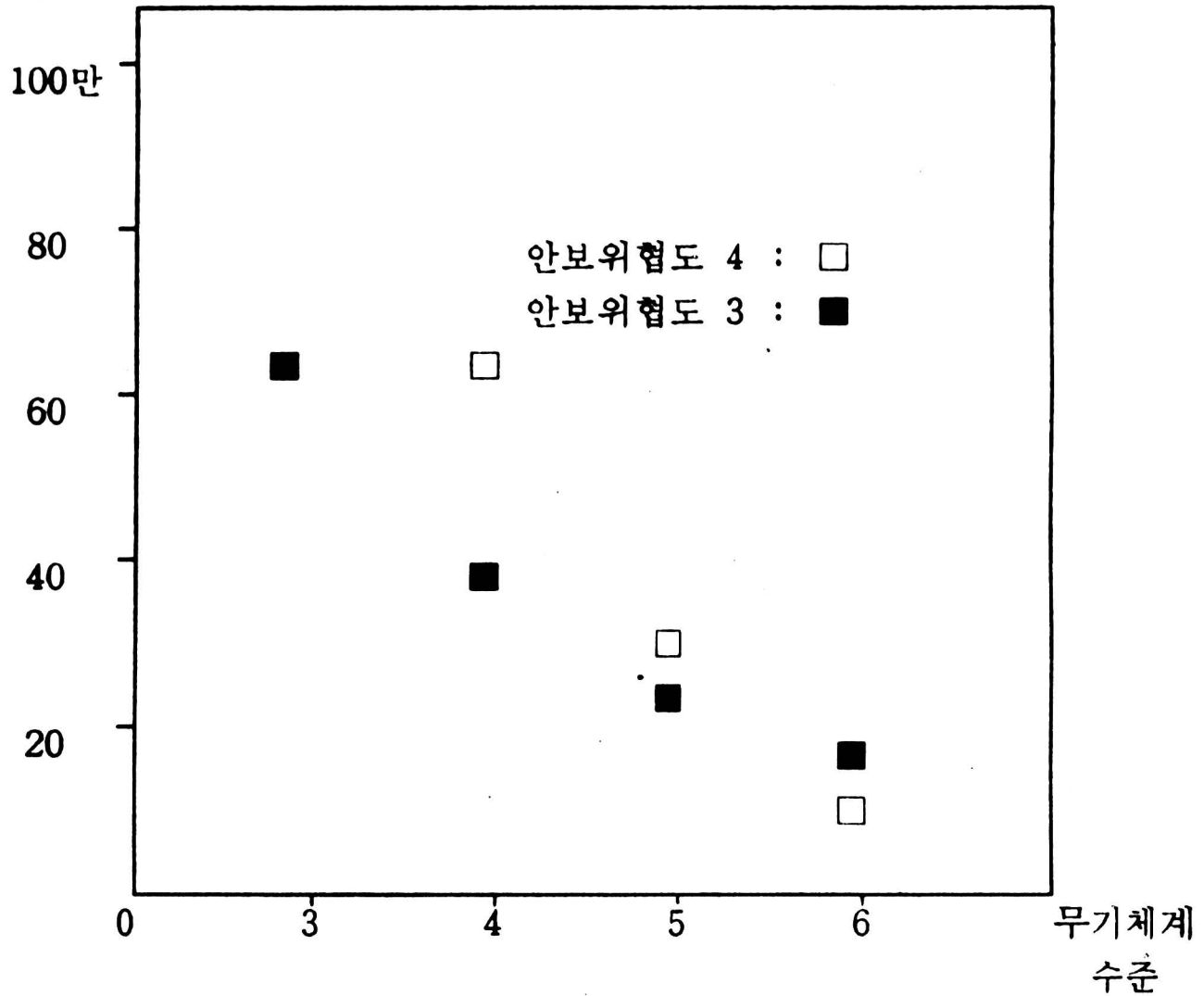
< 표 5-4 >

무기체계 수준과 적정 상비인력규모

무기체계수준	적정 상비인력 규모	
	안보위협도 = 4 ( 현재상태 )	안보위협도 = 2 ( 긴장완화 )
3	162.5 만명	62.9 만명
4 ( 현재수준 )	████████████████████	████████████████████
5 ( 영국수준 )	25.4	23.3
6 ( 프랑스수준 )	10.1	14.1
7 ( 독일수준 )	4.0	8.6

남한은 현재 한반도의 冷戰狀況(안보위협도 4)下에서 적정한 규모(64.3만)을 유지하고 있으나 북한은 그들이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104만을 유지, 남한보다 50만이나 많은 병력(104만)을 유지하고 있다. 軍縮與件(안보위협도 2)이 개선되어 減軍한다면 현재의 무기체계 수준 하에서 남북한은 38만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상비인력규모



< 그림 5-1 > 무기체계 규모 및 안보위협도에 따른 상비인력규모의 변화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남한의 武器體系 水準을 현재의 4에서 5로 한단계 향상시킨다고 가정하면, 適正 常備人力 規模는 安保威脅度에 따라 38.3만명과 64.3만명에서 각각 23.3만명과 25.4만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武器體系 水準이 向上되면 될수록 常備人力을 裝備로써 代替하게 되는 합리적인 결과를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기체계의 향상(고도정밀화 : Precision Guidance Munition)과 함께 상비인력을 점차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 VI. 結 論

南北韓의 國內總生産(GDP) 및 안보위협도, 무기체계 수준, 인력의 질적 수준 측면에서 국방환경이 비슷한 국가들을 추출하여 常備兵力規模에 관한 解釋的 函數로부터 軍事力 規模를 산정해 볼 때, 南韓의 軍事力 規模는 현재의 65萬이 適正하며, 북한은 남한보다 50만이나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을 본 연구를 통하여 얻게 된다. 북한의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국가전략이 對南經濟(GNP 24%, 군사비 지출) 체제에 의하여 막강한 常備兵力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92년이 되면 지난 40년간의 南北韓 軍事裝備投資費 累計에 있어 남한이 북한을 앞서게 되므로 현재 북한의 무력남침 전략은 무위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과, 또한 92년 이후 남북한 軍備競爭에 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남한이 우세해 진다는 것을 북한에게 설득시킴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남북한의 1차 軍縮協商에서 상호방어 목표에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하여 南韓은 現在 水準을 維持하고 北韓이 104만에서 65만으로 減縮할 것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이에 응할 경우, 제2단계로 남북한이 平和條約(安保狀態 2)을 맺고 65만에서 다시 38만으로 줄일 것을 협상한다. 제3단계로 상호경제가 성장되어 무기체계 수준이 향상되면 38만에서 23만으로 줄일 것을 협상한다. 이렇게 될 때 兩國 國防費 對 國民總生産의 比率은 현저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안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안이 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병력의 감축에 따른 제반요소, 즉 장비, 무기체계, 失業率등의 細部的인 協商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이미 지난 30여년 동안 유럽의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국들 간의 재래식 군비협상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군축에 대비, 남한은 숫자 위주의 전력증강 향상이 아니라 武器體

系 및 裝備現代化, 人力 水準 向上 등 질적인 측면에서 전력증강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지금까지 解釋的 모델링으로 각국의 常備人力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앞으로 그 대상을 예비병력(특히 동원예비군)을 포함하는 全體 國防人力으로 확대하는 진정한 국방인력모델의 추정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의 예비군 개념과는 달리 상비인력과 흡사한 형태로 豫備軍을 維持하고 있는 유럽 나토 국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많은 발전의 여지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으로 시뮬레이션 및 戰力指數 比較 등을 중심으로 하는 南北韓 軍事環境 比較에 의한 適正 軍事力規模를 도출하는 문제도 병행하여 연구되어야 한다.

## 第 4 章 < 註 >

- 1) 영국의 제렘(Jerem), 벤담(Bentham), 스펜서(Herbert Spencer), 프랑스의 콩트(Auguste Comte), 생시몽(Saint Simon)
- 2) 하워드(Michael Howard)가 1988년 10월 15일 日海研究所에서 강의한 내용 “War and Social Change” pp. 13-14
- 3) 國防白書(89) pp.175
- 4) 제4차 한미국방세미나 발표논문(1989. 11. 박재하) “생산합수에 의한 적정현역 규모 연구” pp.6에서 현역정원 =  $5951523 + 258 \times$  투자비
- 5) 전게서, pp. 8
- 6) 워게임에서 주로 사용하는 지수(Dunnigan : 1984)인 安保威脅度는 한 국가가 위협을 느끼는 수준으로서 통상 1에서 9까지 그 수준을 표시하고 있다. 수준 1의 경우는 완전한 평화상태, 수준 2는 평화상태이나 상호긴장하는 상태, 수준 3은 평화상태이나 상호 외교적 마찰을 가지고 있는 상태, 수준 4는 휴전상태이나 상호테러가 계속되는 상태, 수준 5는 휴전상태이나 상호 소극적·무력도발 상태, 수준 6은 소극적 국제전 상태, 수준 7은 적극적인 국제전 상태, 수준 8은 세계대전 바로 직전 상태, 수준 9는 세계대전 상태임.
- 7) 國防體制를 하나의 대기업으로 볼 때 국방비는 대기업의 총수입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때 국방비는 상비인력(생산인력)과 무기체계(생산 장비 및 시설)에 의하여 생산된 총매출액이 된다.

## 參考文獻

- A Quick and Dirty Guide to War, 1985, James E. Dunnigan and Austin Bay.
- Defense Manpower, 1980, National Defense University Stanley L. Falk, E. M. Gershater, Glenn L. Simpon.
- The Military Balance, 1987-1988, IISS.

## 第5章 南北韓의 軍備統制 接近方法과 類型別 評價

— 宋大晟 (國防部 政博)

I. 問題의 提起 .....	115
II. 軍備統制 類型 .....	116
III. 韓半島 軍備統制 接近方法 .....	120
1. Reagan型 軍備統制 .....	124
2. Gorbacher型 軍備統制 .....	125
3. 盧泰愚型 軍備統制 .....	126
4. 金日成型 軍備統制 .....	127
IV. 韓半島 軍備統制方法 類型別 評價 .....	128
1. 韓半島 平和裝置에 대한 寄與度 .....	128
2. 韓半島 統一에 대한 寄與度 .....	132
3. 國際輿論 支持度 .....	134
4. 國內輿論 支持度 .....	135
5. 實際 實施 可能性 .....	137
V. 結 論 .....	141

## I. 問題의 提起

지금 한반도 軍備統制問題는 南北韓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부상되고 있다. 그 진의야 어디에 있는 南北韓 사이에는 1948년 이후 지금까지 때로는 어느 일방이 때로는 쌍방이 함께 南北韓 軍備統制問題에 관련된 각종 제의들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남북분단 이후 27개의 각종 軍備統制에 해당되는 제의들을 240여회 해 오면서, 지금이야 말로 南北韓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과제로서 남북한 軍縮問題를 선택하여, 수차례 대남성명에서, 국제학술회의에서<sup>1)</sup>, 남북한 고위급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남북한 軍備統制問題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한편 韓國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北韓의 각종 한반도 軍備統制에 관련된 제의들을 한갓 대남 적화통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평화전술로 인식하면서 무관심내지 무반응으로 일관하였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초반부터 北韓의 軍備統制에 관련된 제의들에 대해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南韓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반도 軍備統制問題를 다루고 있다. 특히 향후 南北交流 및 對話, 統一을 위해 남북한이 해야 할 구체적인 공동노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가 남북한 軍備統制問題라고 인식하고 있다<sup>2)</sup>.

지금 남북한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 실시하든 軍備統制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상호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平和裝置를 위해, 남북한 통일을 위한 하나의 실질적인 노력으로서 남북한 사이에 軍縮實施는 하나의 필수적인 일이라고 남북한 공히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남북한 사이에 軍備統制를 실시할 수 있을까? 그 가능한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한반도에서 실시 가능한 몇몇 군비통

제방안들을 소개하고 그 각각의 유형들을 評價分析하고자 한다.

## Ⅱ. 軍備統制 類型

軍備統制란 전쟁이 발생될 확률과 무력사용행위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가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각종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sup>3)</sup>. 軍備統制의 일반적인 유형으로서는 그 軍備統制의 대상이 무엇이나, 軍備統制의 주체가 되는 나라들이 쌍방이나 혹은 여러나라나, 부분 감축이나 전면감축이나 등에 따라서 여러가지 種類로 분류할 수 있다<sup>4)</sup>.

本稿에서는 한반도 軍備統制라는 명제와 관련 우선 남북한 사이에 합의여하를 중심으로, 또 신뢰구축하에 군비통제를 실시할 것이냐 아니면 군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뢰구축을 형성할 것이냐 하는 논제중심으로 몇가지 유형을 분류한 후 다음장에서 한반도에서 접근가능한 軍備統制類型들을 분류하고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우선 남북한 사이에 군비통제는 상호합의 군비통제와 상호무합의 군비통제 두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相互合意 군비통제란 남북한 사이에 군비통제를 하되 어떻게 하겠다는 상호 사전 합의단계를 거쳐 그 구체적인 군비통제방안을 확정 한 후에 실시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軍備統制의 경우는 相互協議하고 토론하여 우선 합의사항들을 확정 한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남북한 사이에 군비통제문제가 거론되고, 남북이 각각 군비통제 방안들을 제기하고, 南北韓 軍事 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본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토론하고 합의하여 군축을 실시하자는 유형은 상호합의 軍備統制 형태다.



그러나 軍備統制가 이와같이 상호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비록 상호합의는 보지 못하더라도, 즉 쌍방의 승의없이 어느 일방의 노력에 의해 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의 감소, 혹은 무력사용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군비통제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를 相互無合意 軍備統制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駐韓美軍의 철수문제등은 남북한 사이에 相互合意 軍비통제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相互無合意 軍備統制 사항으로 취급되어짐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 北韓의 경우 國際核安全協定에 가입여부는 남북한간 상호합의하여 실시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北韓자신이 알아서 즉, 상호합의 없이 실시함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러한 경우 이것은 相互無合意 軍備統制라고 할 수 있다.

한편 軍備統制를 실시하되 어떤 우선순위 하에서 실시하느냐에 따라 먼저 신뢰구축부터 형성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군비통제를 단행하자는 소위 先信後縮型과 먼저 군비통제부터 단행하고 다음으로 신뢰구축을 형성하자는 소위 先縮後信型 두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군비통제사를 볼 때 대개의 경우 先信後縮의 유형이 상례화되어 있으나 先縮後信의 경우도 가끔 있다. 군비통제 혹은 군축실시에 있어서 핵심되는 내용은 사실상 군비통제를 실시하는 당사국끼리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先이든 後든 일단 군비통제/군축을 실시하려는 당사국들끼리 상호신뢰구축만 형성이 되면 실제 군비통제/군축을 실시함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랜세월동안 갈등, 반목, 적대의식을 보유하고 특히 전쟁을 치룬 경험까지 갖고 있는 두나라가 서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상호 노력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한반도에서 어떤 유형의 軍備統制가 실시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는 이상에

서 언급한 4가지 유형중심으로 가능성있는 몇가지 종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이 상호합의하여 실시할 것이냐 혹은 합의없이 실시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두가지 類型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먼저 신뢰구축이냐 혹은 군비통제 실천이냐에 따라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이들 각각을 동시에 고려해 볼 때<도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 4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도표 1> 韓半島에서 고려될 수 있는 軍備統制 類型

區分	相互無合意 軍備統制	相互合意 軍備統制
先 信 後 縮	A	B
先 縮 後 信	C	D

A의 경우는 우선 남북한 사이에 軍備統制에 대해 하등의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에게 신뢰부터 구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며, 이러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한반도 평화 혹은 통일을 고려하면서 일방 혹은 쌍방이 스스로 군축 혹은 軍備統制를 실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가 실현이 된다면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理想的인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한반도의 경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B의 경우는 남북한 사이에 상호합의하에 우선 信賴構築부터 형성하고, 그 다음 실질적인 군축 혹은 군비통제문제를 실천에 옮기자는 현재의 노대통령의 軍備統制방안이 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모델을 소위 유럽식 군비통제모델<sup>5)</sup>이라고 하며, 지금까지 軍備統制史에서 가장 흔히 유행

해 온 제일 順理的인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C의 경우는 상호간에 軍備統制에 대한 하등의 합의없이 어느 일방 혹은 쌍방이 우선 일방적으로 군축 혹은 군비통제를 실시함으로써 相互信賴를 구축하고 계속해서 실질적인 軍備統制를 실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는 Gorbachev소련대통령이 집권 이후 동구권에서 일방적으로 감축, 철군을 한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하등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소련국내에서 군수산업의 민수산업 전환 등 Perestroika 추진과정상 추진되고 있는 실질적인 감축노력 등 Gorbachev가 취하고 있는 일방적인 감군, 감축 노력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軍備統制의 경우 본 C의 경우를 취해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D의 경우, 남북한 사이에 상호합의하에 軍備統制/軍縮을 실시하되, 신뢰구축보다는 우선 실제 군비통제/군축을 실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신뢰구축을 하자는 방안으로서, 지금 北韓이 주장하고 있는 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상 실제 軍縮을 실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진정한 신뢰구축이 남북한 사이에 조성된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는 우선 軍備統制/軍縮을 실시하려는 진정한 목적이 진실로 한반도에 평화장치에 기여하기 위함인지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실시하려는 것인지가 제일 문제점이다. 이러한 제의도 그것이 진정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함이라면 실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군축 내지 軍備統制史에서 신뢰구축없이 軍縮부터 실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상에서 일별해 본 몇몇 군비통제 유형을 중심으로 다음 III장에서 한반도 軍備統制接近方法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Ⅲ. 韓半島 軍備統制 接近方法

韓半島에서 실시될 수 있는 軍備統制 接近方法을 소개하기에 앞서 한반도 軍축/군비통제 실시를 위한 몇몇 기본전제조건부터 이야기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정착과 통일에 軍비통제/군축이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에서 軍비통제 혹은 軍축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軍備統制 혹은 軍축실시가 韓半島 평화정착 혹은 통일에 역기능인 역할을 한다면 그러한 軍비통제 혹은 軍축은 절대로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일은 통일을 하되 어떤 식의 통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점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尊嚴性과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로 달려가는 통일 즉 共產化統一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는 통일이다. 평화장치도 마찬가지다. 강한 통제 즉 독재의 철권과 폭압에 의해 사회의 각종 저항력과 生動力이 말살되고 그 결과로서 조용한 평화가 유지되는 소위 인간다운 삶을 상실한 가운데 확보하는 平和裝置는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평화장치가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북한이 갈등 혹은 전쟁지향 보다는 평화지향에 도움을 주고, 인간다운 존귀한 가치들이 고귀하게 지켜질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통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韓半島 軍備統制/軍縮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남북한 공히 상호공존을 인정하고, 절대로 상대방의 괴멸을 획책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반도 軍備統制/軍縮問題는 다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軍축을 통해서 괴멸을 획책한다든가 멸망으로 몰고 갈 저의를 갖고서 軍備統制/軍縮에 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北韓이 현재까지 고수하고 있는 대남적화전략의 포기가 韓半島 軍縮 실시의

大前提條件이다<sup>6)</sup>. 아직까지 北韓에서 북한통일정책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북조선 로동당 강령 및 규약이<sup>7)</sup>, 최고통치권자 김일성, 그 후계자 김정일의 意識構造가, 당 공식기구의 견해가, 언론 논조가, 해외주재 외교관들의 선전내용이, 주민들에 대한 일상교육내용이, 외국학자들을 동원해 내놓은 성명서내용이, 國際學術討論大會에서 북한학자들의 주장내용이<sup>8)</sup>, 155Mile 휴전선 상에서 전개하고 있는 대남심리전 내용 자체가<sup>9)</sup>, 南北高位級會談에서 표출된 북한측 대표단 및 수행원, 기자들의 의식구조 및 행동들이<sup>10)</sup> 모두 어느것 하나 대남적화의를 포기하거나 추호도 약화시키지 않고 있는 현재, 북한의 자세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韓半島 軍備統制 問題를 논할 자세가 아니다. 한마디로 “가슴에 비수를 품고서 상대방보고는 칼을 버리라”는 현재 북한의 주장은 논리적인 면에서도 모순일뿐 아니라 참된 의미에서 군축을 하겠다는 자세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한마디로 북한이 어떤 종류의 對南赤化戰術을 구사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가 韓半島 軍縮의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내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남북한간에 진정한 軍備統制問題가 논의되어지고, 실제 軍備統制/軍縮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北韓이 고집스럽게 고수하고 있는 대남적화의를 포기해야 한다. 이 대남적화위의 拋棄없이 수천 번 한반도평화를 논하고, 군대를 줄일 것을 주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그럴싸한 내용의 군축제의를 해와도 그것은 하나의 속임수요, 대외적인 선전이며, 한갓 僞裝 平和攻勢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北韓의 대남적화위의 포기가 분명히 보장되지 않는 한 단 한자루의 소총도, 단 한명의 군인도 함부로 감축해서는 안된다. 지금 미·소간에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군비감축도 정확히 따지고 보면 미국이나 소련이 자국의 生存權 및 國防安保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예를 들면 유럽주둔군 등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지 자국의 국방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사력을 감축하지는 않는다. 미·소간에 군축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을 망각하고, 하등의 전쟁방지장치도 강구함이 없이 지나친 理想에만 쫓겨 군축을 실시해서는 안된다.

둘째, 韓半島 軍縮/軍備統制를 실시하기 위하여 南北韓은 비진실된 태도를 버리고, 진실되고 신뢰성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쌍방간에 날조되고 비진실된 내용으로 상호비난하고 비방하는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sup>11)</sup>. 軍備統制/軍縮問題 실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전제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서로 상대방을 불신하면서 軍備統制/軍縮에 대해서 어떤 합의를 보려한다든가 가령 어떤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쌍방간 신뢰성이 없는 경우 실제 군축을 실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면 지금 남북한간에는 “南北韓 상호불가침”의 필요성을 금번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서로 주장하고 있다. 일단 상호불가침이 선언된 후에 상호 그 선언내용이 여하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는데 그것이 지켜진다는 하등의 보장이 없을 때, 즉, 북한의 불가침선언이 지켜진다는 하등의 신뢰성이 없을 때 선언된 내용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된다.

남북분단이후 北韓의 지금까지 240여회의 軍縮提議 중 88%는 실제 軍縮을 실시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선전을 하기 위한 군축제 의들이었다. 韓國 또한 지금까지 총 60여회 군축제 의중 77%는 북한의 입장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제의들을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sup>12)</sup> 이와같은 태도로서 軍備統制/軍縮協商에 임하는 경우 실제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韓半島 軍備統制/軍縮實施에 있어 꼭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남북한간에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일이다.

셋째, 韓半島 軍縮/軍備統制協商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어느 한쪽이 군축/군비통제협상을 이용하여 절대이익을 획득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남북한은 군비통제/군축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만큼 자기도 상대방의 요구사항들을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남북한 중 어느 일방이 자기는 추호도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손해볼 것을 강요한다면 그러한 軍縮/軍備統制 노력은 시작부터 실패함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에서 軍備統制/軍縮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협상자세를 갖추고 군축협상에 임해야 한다. 남북한 중 어느 한쪽이 일반 상식선에서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사고와 행동을 갖고 군축에 임하는 경우 그러한 軍縮/軍備統制協商은 실제로 성공을 거두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냉철한 理性을 갖고 상호 토의하고, 합의사항을 도출하고, 그 합의사항들을 실천에 옮길려고 노력하여도 可視的이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군축/군비통제의 협상인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으로는 절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가 없다.

남북한 軍備統制/軍縮協商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는 Rand Corporation의 연구원 Kevin Lewis도 “협상자세의 기강”(Disciplin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up>13)</sup>. 물론 체제와 이념, 사회문화, 각종 價値觀面에서 상당한 이질성을 보유하고 있는 남북한간에 무엇이 합리적이고, 무엇이 이성적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호간 엄청난 차이가 있음은 솔직한 현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합리적이고 理性的인 思考와 行動이란 국제무대에서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사고와 행동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지금까지 韓半島에 적용될 수 있는 軍備統制유형을 소개하기에 앞서 韓半島에서 軍備統制/軍縮實施를 위해 꼭 지켜져야 할 기본 전제조건 4가지를 이야기하였다. 그러면 한반도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軍備統制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는가? 본고에서는 최근 세계군축사에서 경험,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표출되고 있는 남북한의 제의내용 등을 참고로 하면서 한반도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軍備統制/軍縮 유형을 Reagan型, Gorbachev型, 盧泰愚型, 金日成型 4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 1. Reagan型 軍備統制 : 군축강요를 위한 더 강한 군비경쟁

남북한 사이에 軍備統制/軍縮問題에 있어 합의사항 도출 및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어느 일방이 군비경쟁을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 및 실제 行動表現으로서 타방의 군비경쟁의지를 포기케 하는 것이다.

1981년 미국 Reagan대통령이 집권하자 對蘇 軍縮協商에 임하는 기본자세로서 국력 및 경제력면에서 蘇聯에 비해 월등한 미국이 경제력면에서 상대적으로 대단히 취약한 소련을 상대로 “군비증강에 돈을 쓸려면 쓰고, 新武器 開發競争을 하려면 얼마든지 해보자”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재임기간 중 초기 몇년간 더욱 세차게 對蘇 군비경쟁을 전개한 결과 경제적으로 각종 脆弱點을 보유하고 있었던 소련경제는 전반적으로 더욱 악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85년에 집권한 소련의 Gorbachev는 더이상 소련이 미국과 軍備競争을 계속하면서 경제력을 소모하는 경우 소련경제는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들지 않을 수 없다고 진단하였다<sup>14)</sup>. 이러한 소련의 재력을 고갈시키는 Reagan대통령의 군비경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행동은 결국 Gorbachev 대통령의 소위 新思考政策을 도출케 하였고, 유럽에서 과감한 소련의 철군, 감군을 실천케 하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다. 뿐만 아니라 미·소간 INF협정 조인 등 실질적인 東西軍縮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sup>15)</sup>

韓半島 軍備統制/軍縮實施에 있어 Reagan型 軍備統制란 북한이 지금까지 처럼 韓半島 軍縮/軍備統制問題를 끝내 정치적인 선전거리로만 이용하면서,

진실된 軍縮/軍備統制意思가 없을 경우, 韓國은 북한이 진실된 군축실시의 의지를 갖고서 협상에 임하고, 실제 합의된 사항들 혹은 합의에 관계없이 실제 군축을 實施할 때까지 계속적인 군비증강을 하는 것이다.

즉, 한국이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경제력의 強点を 이용 북한이 군비경쟁을 계속할 경우, 北韓經濟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지고 군비확보에 있어서도 남한보다 우위를 결코 점할 수 없다는 북한 스스로의 自覺에 의해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진실된 태도로 南北 軍備統制 協商에 임하든가 혹은 북한 스스로 솔선하여 軍縮을 실시토록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Reagan型 軍備統制方法은 남북한간 어떤 합의를 보지 않더라도 韓國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유형이다.

## 2. Gorbachev型 軍備統制 : 군축에 대한 확고한 誠意表示를 위한 일방적 감축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法은 한마디로 남북한 중 어느 一方이 협상을 통한 토론 내지 합의에 관계치 않고 일방적으로 軍縮實施를 단행함으로써 타방이 이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한 후 화답의 형식으로 대응감축을 실시하고 이와같은 상호화답 형식의 군축실시가 增幅現象으로 발전되어 한반도 軍備統制/軍縮實施가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美·蘇간에 군축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Gorbachev가 우선 일방적으로 먼저 군축실시를 단행함으로써 세계여론을 Gorbachev의 군축실시를 적극 지지하고 그것은 미국의 Reagan 및 Bush 대통령에 대해 相應하는 군축을 미국도 실시해야 한다는 압력의 카드로서 작용되어지고, 이러한 압력 카드에 의해서 미국도 결국 진지하게 군축협상에 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케 했었다. 이와같은 Gorbachev가 취하였던 一方的인 군축실시를 남북한 중

어느 일방이 취하여 보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북한에게 이러한 일방적인 군축실시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각종 입장에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韓國이 우선 일방적으로 韓半島에서 군축을 단행하여 보는 것이다. Gorbachev형 군비통제 역시 남북한간 相互合意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 盧泰愚型 軍備統制 : 先信後縮型

盧泰愚型 軍備統制 방안은 우선 신뢰구축을 조성하고 확고한 신뢰구축의 바탕위에서 남북한의 군비를 감축하자는 先信後縮型 모델이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 3단계 조치로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政治的인 신뢰구축을 조성하자는 내용이다. 서로 상대방의 體制를 認定하고, 존중한다든가 상호 중상·비방 중지 및 내정 불간섭, 상대방을 적대시 하거나 파괴, 전복하려는 행위를 일체중지하자는 등 10개 항목에 달하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우선 軍縮/軍備統制의 실행조건인 신뢰구축부터 먼저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제2단계에서는 남북한 사이에 軍事的인 신뢰구축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군사정보의 교환과 相互 通信維持, 중요 군사활동의 공개, 기습공격이나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 핵 및 생화학무기의 개발, 제조, 사용금지 및 핵시설 감시 허용, 현장 검증을 통한 확인, 南北 共同軍事委員會 설치운영 등 군사적인 차원에서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에서는 政治·軍事的 信賴가 조성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된 바탕위에서 단계적으로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適正規模의 상호균형 戰力의 유지를 목표로 감축하되 최종 수준은 통일 후 민족국가의

位相을 고려, 相互合意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盧泰愚型 軍備統制 방식은 어디까지나 남북한 간에 상호 합의하고 도출한 결론에 따라 실천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4. 金日成型 軍備統制 : 先縮後信型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은 1990. 5. 31 북한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에서 결의한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의 내용<sup>16)</sup>으로서 우선 남북한간에 군축을 실천한 후에 相互信賴構築을 형성하자는 先縮後信型으로서 포괄적이고 급진적인 방안이다. 그 핵심내용은 ① 美·北韓 평화협정체결, ② 남북한 불가침선언, ③ 군사적 신뢰구축, ④ 남북무력축감, ⑤ 외국무력 철수, ⑥ 군축과 그뒤의 평화보장 등을 담고 있다.

남북한 신뢰조성 방안으로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하고, 비무장지대를 平和地帶化하며, 우발적 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무력의 감축안으로서는 무력을 단계적으로 (1단계 : 30만 명선, 2단계 : 20만명선, 3단계 : 10만명 아래수준) 감축하고, 軍事裝備의 질적更新을 금지하며, 군축정형 호상통보, 검증실시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무력의 철수안으로서는 조선반도를 非核地帶로 만들고, 조선반도에서 我國軍隊의 철수를 위해서 공동노력을 한다는 것이다.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DMZ내에 中立國 감시군을 배치하고, 군비통제와 군사상 분쟁문제 해결을 위해 北南軍事共同委員會를 구성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은 북한이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외국무력을 철수하고, 북한이 유리한 고지를 지키면서 군비통제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역시 남북한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상, 토론, 합의를 거쳐 실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Reagan型이나 Gorbachev型은 상호합의없이 단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軍備統制/軍縮實施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案이라면, 盧泰愚型이나 金日成型은 상호합의를 전제로 하는 案이라고 할 수 있다.

#### IV. 韓半島 軍備統制方法 類型別 評價

이상에서 제시한 4가지 軍備統制方法들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할까? 즉,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평가하여야만 할 것인가?

韓半島에서 군비통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그 근본 목적은 우선 韓半島에 갈등이나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平和裝置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각 유형들은 韓半島 평화장치에 기여할 수 있는지 有無에 대해서 분석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들은 韓半島 統一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또한 각 類型들은 국내외적으로 어떤 지지를 얻을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군비통제방안은 실제로 實施可能性이 있는 방안인지 전혀 실시가 불가능한 방안인지도 분석평가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군비통제방안에 대해 ① 한반도 평화장치에의 寄與度 여부, ② 한반도 통일달성에의 기여도 여부, ③ 국제적인 輿論支持度, ④ 국내여론 지지도, ⑤ 실제실시 가능성 여부 등 5가지 기준에 입각 평가하고자 한다.

##### 1. 韓半島 平和裝置에 대한 寄與度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과 본래의 속성만을 따질

때 한반도 平和裝置에 기여할 수 있다. 국제정치의 객관적 현실은 어디까지나 힘과 힘의 대결이며, 특히 지금까지 공산주의자들의 速成중에 하나는 강자에게는 약하고, 힘이 약할때는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는 속성이 있으며 평화니 동족애니 하는 많은 멋있는 단어들을 고도의 政治心理戰을 위한 수사로서 사용한 역사적 사례들이 많다. 따라서 韓國이 경제력 우위 확보라는 유리한 고지를 충분히 활용, 힘을 바탕으로, 오직 실력으로 北韓의 대남적화회의의를 무산시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을 최종 항복케 하는 것은 오직 힘밖에 없다.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이 서독의 강한 국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강한 국력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셈이다. 北韓으로 하여금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대남적화 의지를 포기케 하기 위하여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韓國이 강한 국력을 보유하고 추호도 동요됨이 없어 北韓 스스로 그 赤化意志를 포기케 하는 일이다. 韓國은 北韓이 끝내 대남적화 전략전술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 북한의 財力이 철저히 소모되도록 강한 군비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北韓이 南北韓 국력을 비교할 경우 도저히 그들의 도전의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서 北韓의 적화획책을 무산시키는 Reagan型 軍備統制는 韓半島 平和裝置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北韓이 지나치게 좌절하여 오히려 전쟁을 도발케되는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도 戰爭을 해보았자 國力 및 戰力面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켜주어야 하며, 이렇게 될 때 本案은 실질적으로 한반도 평화장치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의 경우 남북한 어느 쪽이든 먼저 군축을 실시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우 먼저 자진하여 宣傳的인



차원이든 실제 군축을 위함이든 군축을 실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北韓이 자진하여 먼저 軍縮을 실시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그 목적이 어디 있든 간에 만약 北韓이 먼저 자진하여 軍縮을 실시한다면 그것에 상응하여 남한이 성의를 표시하는 軍縮을 실시하고 다시 이에 상응하는 군축을 실시하며 이러한 서로의 相應現象이 증폭되어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평화를 열망하면서 군축을 실시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한반도 평화장치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적어도 지금 상태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따라서 北韓이 자진하여 먼저 군축실시를 기대하기 보다 韓國이 아량을 갖고 일방적으로 먼저 군축실시를 해 보는 것이 결국 韓半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이라고 할 수 있다. 南韓의 일방적인 군축실시에 대하여 북한이 신뢰성을 갖고서 상응하는 성의를 보이면서 실질적인 군축을 실시할 경우 韓半島 平和裝置에 크게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韓國의 일방적인 군축실시에 대하여 北韓이 전혀 도외시하거나 상응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韓半島 平和裝置에 하등 기여할 수가 없다.

만약 韓國의 일방적인 군축실시를 北韓이 北韓자체의 군사력 우위 확보를 위한 好機로 해석하고, 대남 무력적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획책한다면 한반도 평화장치라기 보다는 한반도 평화파괴에 더욱 기여할 한반도 軍備統制方案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일방이 단행하는 軍縮行爲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느냐의 여부가 한반도 平和裝置에 기여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내용이다.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은 남북한 사이에 정치적·군사적인 신뢰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합의가 남북한 사이에 실질적으로 실천되어질 경우 한반도 平和裝置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本 軍備統制案이 실질적으로 한반도 平和裝置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北韓이 추구해오고 있는 대남 공



산화통일 의지/대남적화 의지를 포기하는 것이 대전제조건이며, 北韓의 대남적화의지 포기 없이는 본 군축안은 한반도 평화장치에 기여할 수 없다. 만일, 北韓이 비진실된 태도로서 임하는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합의를 진실된 것으로 오판, 실제로 一方만 군축을 실시하는 경우 본 군비통제방안은 한반도 평화장치에 기여는 커녕 오히려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다.

本 軍備統制方案이 한반도 평화장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대전제조건은 北韓이 진실된 태도를 갖고서 정치적·군사적 信賴構築에 임하는 일이다.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은 한마디로 실제 眞實性을 갖고 실천되기를 원하는 案이라면 한반도 平和裝置에 기여할 수 있다. 즉, 北韓이 진정으로 대남적화전략전술을 포기하고, 진정한 동족화합 통일을 목표로 本 案을 제시한다면 本 案은 한반도 平和裝置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南北高位級會談時 북한이 표출시키고 있는 각종 제의들, 북한대표들, 수행원들, 기자들이 서울에 입경하여 활동하는 樣態를 볼때 北韓은 아직 추호도 對南赤化意志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우선 회담의제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그러하다.

北韓이 제의하고 있는 會談의 3原則 中 ③項 “회담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項을 北韓 스스로가 제의하면서, 동시에 정치 군사적 긴급문제로서 ③項에 “문익환, 임수경 등 방북인사 석방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대표들은 방북구속자에게 선물까지 전달토록 주고 갔다. 방북구속자 문제를 거론하는 그 자체가 그들이 제의하고 있는 회담의 분위기를 흐리게 하거나 회담의 진전에 저촉되는 일임은 북한 스스로가 더 잘 알면서도 對南心理戰 차원에서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그들의 면회를 요구했던 것이다. 즉, 북한이 의도한 목적은 남한에서

활약하고 있는 親北革命鬭爭者, 그 중에서 특히 金日成의 품안에 안겨본 소위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반파쇼 애국투사”들은 北韓이 救世主 노릇을 하면서 끝까지 구하여 준다는 실천적인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내에 있는 共產化顛覆勢力, 金日成 崇拜者들에게 더 한층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다. 방북 구속자 석방문제를 거론할수록 北은 人道主義者로서 이미지가 부각되고, 남한은 인권을 탄압하고 통일열망자들을 구속한다는 이미지가 부각됨을 北韓은 계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 平和裝置를 걱정하고, 통일문제를 열망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동족화합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기존 대남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南北高位級會談을 그 수단으로서 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북구속자 석방제의문제 뿐 아니라 한국총리를 끝내 “총리”로서 정식으로 호칭하지 않는 문제, 한국의 UN單獨加入 저지를 정치·군사적 긴급문제로 취급하려고 하는 북한의 노력은 『한반도에서 유일정통성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는 어디까지나 북한이며, 美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소위 남조선을 해방해야 한다』는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논리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北韓이 이와같이 대남적화의지를 포기치 않고 있는 한 本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은 한반도 통일장치에 하등 기여할 수 없고, 오히려 또다른 제2한국전쟁 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군비통제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韓半島 統一에 대한 寄與度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은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대결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北韓이 실질적인 軍備統制/軍縮에 임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통일에 기여

할 수 있다. 통일을 하되 북한에서 획책하고 있는 공산화통일이 아니고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만일 북한이 군비경쟁을 포기하지 않고 장기간 대결하는 경우 한반도 통일은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통일후 수많은 죽음과 잔인한 범죄문화 창출이 담보되는 공산화통일보다는 인간이 존엄성이 지켜지는 자유민주 자본주의체제 수호가 보장되는 자유민주화통일이 확실히 보장되기를 원한다면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을 적용할 수도 있다.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은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실시하는 군축에 대해 北韓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韓國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군축에 대해 北韓에서 상응하게 성의를 보이면서 實質的인 軍縮을 실시하는 경우 남북한 통일에 기여할 수가 있다. 그러나 韓國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군축실시를 北韓에서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않고, 韓國 국민들에게 군축실시의 既定事實化를 국민의 가치관으로 확산되도록 실천하고, 한국만이 계속해서 군축실시를 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한다면 한국측은 결국 일방적인 군축실시를 포기하면서,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선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本 軍備統制方案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없는 군비통제방안이 될 것이다.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은 북한의 진실성 여부,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합의 및 實踐여부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 여부를 결정한다.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불가침협정 체결,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형성, 실질적인 남북한 사이에 군비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있는 본 군비통제방안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基本 前題條件은 북한의 대남적 화의지의 포기다. 북한이 실질적으로 대남적 화의지를 포기하고 본 군비통제방안이 실천에 옮겨지는 경우 한반도 통일에 기여함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만일 北韓이 적화통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欺瞞的인 태도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 합의사항들에 동의하고, 남한은 그러한 기만적인 태도를 진실된 것으로 誤判, 실제로 군축실시를 단행하는 경우 본 군비통제방안은 북한의 공산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은 對南赤化意志 및 그 戰略戰術을 진정으로 포기할 경우 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추호도 대남적 화의지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군비통제방안을 실천하려고 함은 결국 對南赤化統一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것 外 별다른 의미가 없다. 美·北韓間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불가침선언,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 무력감축, 외국무력 철수 등 제반사항들을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다루어질 문제이며, 이러한 전제가 없는 한 북한의 공산화통일에 지대하게 기여할 수 있는 군비통제 방안일 뿐이다.

### 3. 國際輿論 支持度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의 실제 목적은 군비축소를 위한 限時的인 군비경쟁 일지라도 군비축소가 아닌 군비경쟁이기에 국제적인 지지를 얻기는 힘들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상, 공산주의자들은 결국 힘으로 밖에 다스릴 수 없다는 점을 정확히 弘報할 경우 국제적인 여론이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것이다. 군비증강을 하되 증강하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남북군비통제 회담을 중단하는 형식이 실질적으로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의 실시를 의미할 수도 있다. 대화와 교류를 위해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라면 韓國이 설사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실시하더라도 국제적인 여론은 비판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은 한마디로 적극적인 국제적 지지를 얻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하는 일방적인 군축실시는 평화애호, 평화지향 정책으로

평가받으면서 국제적인 지지를 획득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 오해하면 실제 軍縮實施를 위함이 아니고 국제적인 전시효과를 위함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은 일종의 유럽식 군축모델로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안으로 실제 軍縮을 실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확실한 장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北韓과 협상을 통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할 경우, 本 方案도 실제로 군축실시를 위함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비판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北韓의 軍備統制問題에서 제일 관심사항인 주한 미군 철수문제를 한미간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本 軍備統制方案은 국제적인 여론면에서 약간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먼저 軍縮부터 실시하고 상호신뢰구축을 조성하자는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은 世界軍縮史의 경험을 참고로 분석해 볼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어렵다. 신뢰조성없이 군축실시란 실제 非現實的이기 때문이다. 本 軍備統制方案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제의내용들이 실제로 軍縮實施를 위함이고, 민족 화합, 평화통일을 위함이라면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

#### 4. 國內輿論 支持度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에 대해서 한국내에 있는 保守勢力, 自由民主體制 守護信念 소지자, 공산주의자들의 속성 및 그들의 전략·전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한편, 한국내에 있는 共產化 顛覆勢力, 運動圈學生, 左翼勢力들은 대단히 비판적일 것이다. 그들은 비록 限時的이지만 군비경쟁으로 몰아치는 남한의 정책에 대해 전쟁지향적이라고 맹비난을 할 것이다.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남북관계가 교류 및 긴장완화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결상태로 전개됨에 대해서 불안해 할

것이다.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에 대해 국내의 保守勢力, 自由民主體制 守護勢力은 한마디로 한국측의 일방적인 군비축소에 대해서 불안감 표출 및 비판적인 자세를 표출할 것이다. 한편, 국내의 體制抵抗勢力, 體制顛覆勢力, 運動團學生, 左翼勢力 등은 韓國측의 일방적인 감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南韓의 일방적인 軍縮에 대해 향후 군사력은 필요없고 마치 남북한 사이에는 진정한 평화가 온 것으로 착각하고 지나치게 통일의 환상에 젖을 가능성이 있다.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에 대해 남한내의 保守主義者, 自由民主體制 守護信念 소지자, 共產主義者들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국민들은 本 方案이 실질적으로 실시되기 위하여는 남북한 사이에 확고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이 기본 전제조건인데, 北韓이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을 쉽게 합의하지 않든가 혹은 합의하더라도 그것이 위장적일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낄 것이며, 실제 실천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한편 韓國내의 體制抵抗勢力, 共產化 顛覆勢力들은 北韓이 제시하는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을 지지하면서, 韓國에서 제의하는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에 대해서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北韓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가운데,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장치에 기여하고, 교류 및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에 대해 남한내의 保守勢力, 自由民主體制 守護勢力, 共產主義者들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은 北韓이 주장하는 先軍縮 實現 後信賴構築주장을 북한의 대남적 화통일을 위한 하나의 위장책략으로 인식하면서 수용하기를 적극 거부할 것이다. 한편 남한내의 體制抵抗勢力, 共產化 顛覆勢力들은 北韓의 포괄적이고 급진적인 군축제의를 적극적으로 지지



내지 환영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北韓의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군축안을 우선 軍縮을 실시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 국민들은 北韓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대남적 화통일의 일환책으로 제시하는 군비통제방안에 대해 그저 군대를 줄인다는 사실만을 환영하면서 군사력을 줄이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문제냐 하는 認識을 갖고서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 5. 實際 實施 可能性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은 북방정책을 추진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남북간에 대결보다는 교류, 화해를 그리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목표로 삼고 頂上會談이 성사되기를 갈망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제6공화국 정부는 수용하기 힘든 軍備統制方案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위급회담이 철저히 결렬되고,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가능성,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제6공화국도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거의 기대하기 힘든 가능성이다.

만일 남북한 통일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共產主義者들은 어디까지나 힘으로 다스려야 되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대남적 화통일 의지를 추호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 분석해 볼 경우, 그리고 한국사회의 평화와 자유민주체제 절대수호라는 입장에서 고찰할 경우, 本 方案은 남한입장에서 채택해 볼만한 방안이다.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은 남북한 사이에 실제로 신뢰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군축실시를 위한 여하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이 남북한 군축실시에 어떤 돌파구 마련을 위해



실시해 볼 수 있는 방안이나 실제로 실시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방안이다. 왜냐하면 신뢰구축없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하려고 할 때 한국내의 自由民主體制 守護勢力, 그리고 軍部の 강한 반발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내의 保守勢力 및 軍部는 신뢰구축이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군축을 단행한다는 것은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이 내포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기 보다는 우선 利敵行爲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의 경우 우선 북한과 합의를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북한이 先軍縮 後信賴構築 주장 및 대남적화의를 끝내 포기하지 않는 금번 고위급 제1차 서울회담에서 제시한 소위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방안”<sup>17)</sup> 등 諸 제의들을 고수하는 한 남북한간에 本案의 내용대로 합의를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합의를 보기 위하여 北韓에서 제의하고 있는 제반 제의사항들을 수용하면 그것은 이미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은 아니다

특히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내용을 고집하고 있는 한, 이러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는 本案이 한반도 軍備統制方案으로서 북한과 구체적인 합의를 보고, 실제 실천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대남적화통일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본 軍備統制方案이 실시되기는 힘들 것이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은 정치적, 군사적인 신뢰구축 없이 포괄적이고 급진적인 軍縮부터 하자는 내용에 대해 남한측은 쉽게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남침에 대한 경험, 그 이후 끈질기게 시도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적화기도 등으로 北韓에 대해 불신의 度가 높을대로 높은 남한측은 신뢰구축 없이 軍縮부터 실시하자는 北韓의 제의를 대남적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할 것이다.

韓國이 공산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겠다는 자세로 전환하지 않는 한 本 方案은 한국에 수용되기 힘들 것이며, 실제 실시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의 한반도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 軍備統制 유형을 5가지 기준 - 韓半島 平和裝置에 대한 기여도, 韓半島 統一에 대한 기여도, 國際輿論 支持度, 國內輿論 지지도, 實際 實施可能性 -에 의해 分析해 보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가 北韓의 對南赤化意志의 포기 여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軍備統制方案들은 ① 北韓이 대남적화목표를 고수할 경우, ② 北韓이 대남적화목표를 포기할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만 한다. 이 두가지 경우를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이 대남적화목표를 즉 한국에 대해 공산화통일을 목표로 삼고 현재와 같이 부단히 노력하는 한 한국측 입장에서는 Gorbchev型, 盧泰愚型, 金日成型 3가지 軍備統制方案들은 실시될 수가 없는 방안이며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단, 공산화통일도 수용하겠다는 자세일 경우에는 어느 방안이든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北韓이 끝내 대남적화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이 자유자본민주체제를 수호하고 공산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이 목표일 경우에는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이 실제 실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만일, 북한이 현재 고수하고 있는 대남적화통일목표를 실제로 포기하고, 이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한다면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은 적용할 수가 없다.

○ : 긍정적(1)    △ : 중간(0)    × : 부정적(-1)

北韓이 對南赤化目標을 고수할 경우							北韓이 對南赤化目標을 포기할 경우								
軍備統制案	評	한	한	국	국	실	總	軍備統制案	評	한	한	국	국	실	總
	價	반	반	제	내	제			價	반	반	제	내	제	
	화	도	도	여	여	실	합		화	도	도	여	여	실	합
	장	여	통	론	론	시			장	여	일	지	지	가	
	치	평	기	지	지	가			치	화	기	지	지	능	
		화	여	지	지	성				장	여	도	도	성	
Reagan 型	○	○	△	△	○	3		Reagan 型	×	×	×	×	△	-4	
Gorbachev型	×	×	○	△	×	-2		Gorbachev型	○	○	○	△	○	4	
盧泰愚 型	△	△	△	△	×	-1		盧泰愚 型	○	○	△	△	○	3	
金日成 型	×	×	△	△	×	-3		金日成 型	○	○	△	△	△	2	

다른 말로 표현하면, 北韓이 실제로 대남적화의를 포기하고 민족의 화합통일을 원한다면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을 제외한 다른 3가지 유형 - Gorbachev型, 盧泰愚型, 金日成型 - 어느 것이나 한반도 군비통제방안으로 선택하더라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 특히 南韓이 솔선하여 먼저 실제 軍縮을 실시하는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은 國內外的으로 강한 지지획득은 물론 한반도 평화장치에 기여할 뿐 아니라 한반도 통일과업달성을 가속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韓半島에서 어떤 유형의 군비통제유형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남북한 사이에 군비통제를 위한 어떤 합의점을 찾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모든 문제의 결정은 北韓이 진정으로 對南赤化戰略戰術을 포기하는가 포기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북한이 대남적화전전략전술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재 남북이 제외하고 있는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도,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도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 V. 結 論

韓半島 軍備統制問題는 지금 남북한은 그 구체적인 軍備統制方案들을 제의하면서 본격적인 회담을 시작하고 있고, 세계적인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지금 韓半島 軍備統制問題를 고려할 때 남북한이 상호합의하여서 실시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상호합의없이 단독으로 실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우선 信賴構築 後에 軍縮을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軍縮을 실시한 後에 信賴構築을 할 것인가 하는 두가지 고려사항이 있다. 이러한 두가지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고찰할 때 한반도에는 4가지 軍備統制類型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 北韓이 군비통제/군축실시에 있어 지금까지처럼 계속 정치적인 선전거리로만 이용하면서, 실제로는 군축의 의사가 없을 경우, 韓國은 北韓이 진실된 軍縮實施의 의지를 갖고서 협상에 임하거나, 실제 합의된 사항들 혹은 합의에 관계없이 실제로 군축을 실시할 때까지 限時的으로 軍備競爭을 실시하는, 즉 북한의 진실된 군축실시 카드를 받아낼 때까지 군비경쟁으로 몰고가는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이 있다. 본 Reagan型 軍備統制方案은 북한이 대남적화의를 끝내 고수할 때는, 한반도 평화장치, 한반도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韓國이 국력/경제력의 우세라는 유리한 카드를 갖고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現實的인 한반도 군비통제방안이다. 그러나 北韓이 진실로 대남적화의를 포기할 경우에는 본 方案은 한반도 평화장치, 통일에도 기여할 수 없는 실제로 한반도에 적용하기 어려운 군비통제방안이다.

둘째, 한국이 南北韓 합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군축실시를 단행하고,

이에 대한 相應措置로서 북한이 군축을 실시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호신뢰가 구축되어 상용조치 增幅措置가 야기되어 실질적인 남북한 군비통제를 실시케 하는 Gorbachev型 軍備統制方案이다.

本 方案은 북한이 대남적화의를 끝까지 고수할 경우 국내외적인 여론은 평화지향적이고, 세계사의 흐름에 부합되는 군비통제방안이라고 지지를 받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실천되어질 가능성이 없으며, 韓半島 平和에도, 하등 기여할 수 없는 방안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적화의를 拋棄하는 경우에는 本 軍備統制方案은 가장 적합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으로서 평가되어질 수 있다.

셋째, 우선 南北韓 사이에 정치적, 군사적 신뢰구축을 형성하고 이러한 신뢰구축의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군비를 감축하자는 방안, 현재 남한이 제의하고 있는 盧泰愚型 軍備統制方案이다. 本 方案은 북한이 끝까지 대남적화의를 고수하면서 한반도를 공산화통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실제로 한반도에 적용되어지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우선 協商過程에서 남북한이 합의를 보기가 어렵고 설사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공산화통일을 원하지 않는 한 실제로 실천되어지기가 어려운 방안이다.

그러나 北韓이 대남적화의를 실제로 포기하는 한 本 軍備統制方案은 한반도 통일에도 평화장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適用可能한 군비통제방안이다.

마지막으로, 南北韓間에 우선 군축을 실시하고 그리고 신뢰구축을 형성하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이 북한이 제의하고 있는 金日成型 軍備統制方案이다.

本 方案은 북한의 속성, 공산주의자들의 본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남적화의를 고수하면서 本 方案을 제시할 경우 이것은 한국을 共產化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에 공산화통일을 반대하는 한국에 의해 절대로 수용되어질 수 없는 방안이다. 만약에 북한이 대남적화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남한이 그대로 本 方案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韓國이 공산화통일이 되어도 좋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에 限해 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만약 北韓이 진정으로 對南赤化意志를 포기하고 민족화합통일을 원하는 차원에서 本 方案을 제시한다면 本 方案도 한반도 군비통제방안으로 실천할 수도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대남적화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本 方案은 한반도 평화장치에도,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도 기여 할 수도 있는 방안이다.

韓半島에 적용되어질 수 있는 4가지 유형의 군비통제방안들을 분석평가한 總結論은 어떤 유형의 군비통제방안이 한반도에 적용되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실천되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짓는 가장 核心的인 과제는 北韓이 對南赤化意志를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 第5章 <註>

1. 南北韓 學者들이 한반도 군축문제를 놓고 공개 혹은 비공개적으로 국제적인 학술토론회를 가진 것은 1990년 접어들면서 3번이나 된다.

그 첫번째 모임이 1990. 5. 17 - 19 미국 Washington D.C. 소재 Institute for Sino-Soviet Studies(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에서, 그 두번째가 1990. 7. 5 - 8 美 Stanford대학 국제안보·군비통제연구소 주최 학술회의에서, 그 세번째는 1990. 8. 2 - 5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세아연구소·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주최 제3차 朝鮮學 국제학술토론회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학술회의는 향후 더욱 더 빈번히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2. 그 동안 南北韓 當局이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해서 표현한 관심을 정리해보면 우선 남한의 경우 ① 국방부 [배달민족 軍縮案] 마련(1985. 6. 20), ② 전두환대통령 “실천적인 軍縮案 연구” 지시(1985. 9.), ③ 합참의장 직속으로 軍備統制室 창설(1989. 1. 16), ④ 외무부장관 청와대 업무보고時, 대북군비통제문제 언급(1990. 3. 5), ⑤ 국무총리 주재 남북관계 대책회의, 남북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황의 능동대처 입장에서 남북한간 군비통제문제 前向的 검토 방침(1990. 5. 3), ⑥ 안보정책실무대책안회의, 북한의 [朝鮮半島 平和를 위한 軍縮案] 적극 검토(1990. 6. 7), ⑦ 국무총리, 군비통제문제 철저 대비 지시(1990. 6. 11) 등이다.

한편, 북한은 ① 김일성 신년사를 이용 朝·美평화협정 체결,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주장(1986. 1. 1), ② 조선인민최고사령부 “남조선·미국·북조선 군사당국자 회담 제의(1986. 6. 17), ③ 조선반도 비핵지대화·평화지대 창설 제의(1986. 6. 23), ④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多國的 軍縮協商] 제의 관련 성명(1987. 7. 23), ⑤ 북한 최고인민회의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案)” 제의(1988. 7. 20), ⑥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1990. 5. 31) 등이다.

1990. 6. 26국회 本會議에서 한국의 이상훈 국방부장관은 “군축문제가 가까운 장래에 남북대화의 핵심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군축관련 政策들을 개발하기 위한 特別委員會를 설치해 놓았다고 언급했음.

한반도 군축문제에 관련 국내학자들이 발표한 글은 1989년에 약 50편, 1990년 6월말 현재 약 35편이 되고 있음.

3. Herman Kahn, On Thermonuclear War, 2nd ed., New York : The Free Press, 1960, p. 226-227.
4. 군축의 종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다. 군비의 量이나 質이냐에 따라서 量的軍備縮小(병력 및 무기의 數를 줄이는 것), 質的軍備縮小(戰力の 質을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것), 군축을 실시하는 대상국에 따라서 一方的 軍縮(다른 나라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없이 한 국가가 단독으로 행하는 군축), 雙務的 軍縮(二個國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각각의 군비를 줄여나가는 것), 多變的 軍縮(二個國 이상이 合意에 의해 군축을 실시하는 것) 등 여러 측면에서 분류할 수 있다.
5. 유럽型 군비통제 모델은 ①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창설하고 미국·캐나다 포함한 유럽 35개국이 1975년 『헬싱키 협약』을 체결 정치, 경제, 사회, 안보의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체적으로 망라 실천하는 정치적 신뢰구축 조성, ② 1986년 『스톡홀름 협약』 체결에 의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성, ③ 군사력 감축 3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모델

입.

6. 安乘俊, “北韓 軍縮提案의 內容과 問題點” (외교안보연구원, 한반도 군비통제의 방향 세미나 발표논문, 1990. 8. 31), p.6.
7. 북한 조선노동당의 강령은 1946. 8.에 채택된 것이 제4차 당대회(1961. 9.), 제5차 당대회(1970. 11.), 제6차 당대회(1980. 10.)를 통해 거듭 수정된 것이며, 1974년 이후 북한사람들의 필휴 필독서로 되어있는 당중앙위원회 발행「黨의 唯一思想體系確立의 10大原則」에서 前文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수행함에 있고, 최고목적은 전사회를 주체사상화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함에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공산화를 궁극적 목표로 고수하고 있다.
8. 일례로 1990. 8. 2-5 일본 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아세아 연구소 및 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 주최 제3차 조선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조선과학자협회 김철명 (“90년대 조선통일의 전망과 우리의 과제”), 同協會 박문희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당면과제”), 군축 및 평화연구소 실장 리형철 (“조국통일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 등이 발표한 논문들은 ① 북한의 대남적화를 위한 철저한 政治心理戰 내용, ② 남한 통일정책 비방, ③ 북한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선전, ④ 변질시킨 역사적 사실과 현실의 왜곡, 국제적 선전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음.
9. 1990. 8. 24-8. 30 1주일간 155miles휴전선 상에서 북한은 ① 남북한 자유왕래 가로막는 콘크리트장벽 제거, ② 국가보안법 폐지, ③ 주한 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52,419회 확성기를 통한 방송, 37,377매 전단 살포 등을 통해 대남적화 심리전을 전개 하였음.
10. 남북고위급 제1차 서울회담時 북한대표들이 말한 내용들을 예의분

석하여 보면 북한이 여전히 대남적화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회담원칙 3개항 中 第①項 “7.4 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원칙(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하며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는 그 숨은 뜻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自主는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며, 平和統一은 무력통일이 아닌 남한내의 체제전복세력/공산화 전복세력과 연계, 소위 『平和的 前途』에 의해 공산적화통일을, 그리고 민족대단결이란 諸革命勢力 間의 단결을 의미하고 있음은 이미 북한연구 전문가들 사이에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의 조국통일 3大原則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北에서 온 기자들은 회담의 주체인 정부당국보다 재야 및 운동권에 더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全大協, 全民聯 騷擾時에 『한건 올렸다』고 하면서 열심히 취재하는 등 宣傳次元의 任務遂行에 더욱 열성적이었음.

11. 예를 들면 1990. 4. 4 駐東獨 북한대사관 근무 문화담당참사 강대길은 “남한정부가 155mile 休戰線上에 구축해 놓은 장벽은 독일장벽이 문제가 안될 정도로 하도 그 두께가 두꺼워 장벽 위를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며 본인이 직접 목격하였다”, “북조선에서 남조선의 모든 T.V.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 관람할 수 있다”, “북조선에서 학교교과서는 일체 남조선을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되어 있지 않다”등의 날조되고 비진실된 내용을 필자에게 강변하고 있었음. 이런 비진실된 태도를 버리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군축 실시의 전제조건임.
12. 송대성, “합리적인 한반도 군축방안”, 외교(한국 외교협회, 제11호, 1989. 9), p.22-23.
13. Kevin Lewis, “Arms Control Prospects for Northeast Asia : what lessons from recent development elsewhere?,”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War, to be held in

Seoul 14 - 16 June 1990, p. 11.

14. Ibid., p.5.
15. 西獨의 전독문제연구소 부소장 Dr. Gunter Buch도 1990. 4. 5 필자와 대담에서 “동구권 변화 및 소련이 군축실시를 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Reagan대통령의 군비경쟁 노력 때문이었다”라고 주장하였음.
16. 북한은 1990. 5. 31 중앙인민위·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를 개최하고 “남북불가침선언과 군축협상”을 골자로 하는 [朝鮮半島의 평화를 위한 軍縮提案] 핵심내용은 ① 남북신뢰조성(군사훈련, 군사연습 중지, 제한 및 사전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우발적 충돌과 확산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강구), ② 남북무력감축(軍縮案이 합의된 때 부터 3-4년간 각각 30만 - 20만 - 10만 수준으로 3단계 감축;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군축정형의 상호통보 및 현지시찰을 통한 검증), ③ 외국무력 철수(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공동노력; 외국군대 철수를 위한 공동노력), ④ 군축과 그 이후 平和保障(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 및 비무장지대내 중립국 감시군배치; 3자회담 이전이라도 남북협상을 통한 불가침선언 채택과 군축합의)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17. 北韓이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제시한 소위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 방안”은 ① 상호비방 중지, ② 민족적 단합, 통일에 배치되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제거, ③ 상대방을 소개하는 出版의 자유와 상대방의 思想을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함, ④ 북과 남을 갈라 놓고 있는 물리적 장벽 제거, ⑤ 각 정당·단체·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 ⑥ 국제장치무대에 북과 남이 공동으로 進出·協力 등으로 되어있다. 각 項이 내포하고 있는 숨은 의미를 북한의 대남적 화의지 차원에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특히 ③項 상대방을 소개하는 출판의 자유와 상대방의 사상을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이야기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소개하는 일, 남한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諸提議들을 붙때 대 남적화의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

# 第6章 北韓의 軍事問題關聯 提議 評價 및 展望

— 全寅永 (서울大 教授)

I. 序 論 .....	153
II. 北韓의 軍備減縮 提案 .....	156
1. 休戰後 北韓의 軍縮提案 .....	156
2. 1960 年代 北韓의 軍縮提案 .....	159
3. 1970 年代 北韓의 軍縮提案 .....	162
4. 1980 年代 北韓의 軍縮提案 .....	165
5. 1990 年代 北韓의 軍縮提案 .....	170
6. 總理會談에서 提示된 北韓의 軍備統制案 .....	174
III.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	177
1. 1950 年代와 1960年代 韓國의 軍備統制提案 .....	177
2. 1970 年代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	181
3. 1980 年代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	184
4. 總理會談時 提示된 韓國의 軍備統制案 .....	187
IV. 南北韓 軍事問題關聯 提案 比較 評價 .....	190
1. 北韓의 軍備統制 提案 評價 .....	190
2.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評價 .....	192
V. 結 論 .....	196

## I. 序 論

東·西和解와 協力の 새로운 데탕트 시대를 맞이하여, 南·北韓은 각각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응하며 새로운 國益을 정의하고 模索하기에 바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 45년동안 거의 對決과 競爭으로 일관하여 온 南·北韓은 對内外 環境의 變化로 인하여 기존의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환경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추구하여야 하는 機會와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南·北韓의 政策變化 또는 轉換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것은 쌍방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서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40여년 동안 南北韓간에 군사적 대결상태가 지속되어 온 결과, 韓半島는 불행히도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되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의 하나가 되고 말았다.

만일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고 그러한 危機의 管理에 실패한다면, 한민족은 다시금 비극적인 과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南北韓이 민족적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고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安定시키기 위해서는, 서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理解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진지한 協商을 통해 공통 이익을 발견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軍事的 緊張狀態의 緩和는 우리모두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사인 동시에 민족의 염원인 통일의 실현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軍事的 緊張과 대결상태를 방치한다면, 생존과 경제발전은 중대한 결함과 취약점을 지니며, 통일은 더욱 생각하기 힘들어진다.

獨逸統一은, 南北韓이 우선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緩和하고, 인적·물적



交流協力の 폭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독일통일은 우리의 부러움과 찬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우리 모두의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기도 한다. 아무리 변명을 해도 한민족은 화해와 협력보다는 對決과 경쟁에 치중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本 論文의 목적은 우리의 가장 절박한 과제인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거나 解消하기 위해서 南·北韓이 그동안 어떠한 제안들을 제시하였으며, 어떠한 환경하에서 어떠한 제의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나왔었는가를 검토·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양측의 軍備統制提案들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南·北韓軍事會談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 教訓, 문제점 및 시사점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정권수립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이 모두 합해 300여회의 군비통제제안을 했으나, 거의 선전적 또는 정치적 저의가 있는 것으로 認知되거나 評價되기가 일쑤여서, 협상을 통한 진전이나 해결은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北韓은 기회있을 때마다 美軍撤收와 남·북한의 군사력감축을 제의하곤 했는데, 이에 대하여 南韓은 최근까지 한반도 적화통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안으로 파악하며 무시하거나 拒否하는 반응을 보여왔었다.<sup>1)</sup>

그러나, 이제는 南·北韓의 대내외 상황이 크게 변하여, 쌍방모두가 과거보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과거처럼 즉각적인 주한미군 철수나 남북한 군사력의 감축을 요구하지 않는 전술적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남한도 軍備統制를 더이상 금기시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과 마주앉아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적극적 자세로 전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軍備統制는 유럽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긴 세월이 필요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南·北韓처럼 오랜세월동안 대결을 지속해온 경우에는 불신도가 높아 군비통제협상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對決과 協力이 항상 함께 병존해 왔음에도, 軍備統制가 실효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임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南·北韓의 軍備統制를 위한 접근방법은 명백한 차이점을 보여준다.北韓이 美軍撤收와 남·북한의 군사력을 10만명 수준으로 과감하게 줄이는 방법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온데 비하여, 南韓은 '운용적 군비통제'인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을 중시하는 접근방법을 택해왔다.<sup>2)</sup> 군비통제현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것은 군비축소이며, 다음이 신뢰구축방안(CBMS or CSBMS)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南·北韓의 제안을 보면, 북한은 곧바로 撤收와 減縮을 단행하는 정치·군사적 해결입장을 견지해 왔고, 남한은 남·북한간의 불신과 적대감을 감안하여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이러한 입장차이와 우선순위상의 차이는 지난 9월과 10월에 열렸던 2회의 南·北韓總理會談에서 재확인 되었었다.

南·北韓의 軍備統制 제안들을 비교분석하여 객관적 評價를 내릴 수 있다면, 남·북한간의 軍事會談에서 입장차이를 줄이거나 타협점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제안의 評價를 위해서는 휴전후 양측이 제시한 軍備統制 또는 군비감축안들을 먼저 검토하여야 하겠다.

## II. 北韓의 軍備減縮 提案

### 1. 休戰後 北韓의 軍縮提案

北韓은 휴전후 오늘날까지 일관되게 美軍의 撤收를 요구하고 南·北韓 兵力을 10萬線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하여 왔다. 북한의 제안은 신뢰조성 등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력을 감축하자는 것으로서, 不信과 敵對感이 팽배한 남·북한관계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공군이 철수한 1958년 이후, 북한은 美軍의 撤收를 강력히 主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1954년의 제네바會議에서 最近의 南·北韓 總理會談에 이르기까지, 10만으로의 兵力減縮을 기회있을 때마다 제안하여 왔었다. 이러한 북한의 軍備統制에 對한 主張은 '運用的 軍備統制'(Operational arms Control)와 대조를 이루는 '構造的 軍備統制'에 속하는 것이다.

北韓의 전후 軍備減縮提案은 제네바회담에서 비롯된다. 북한의 外相 南日은 1954년 4월 27일 제네바에서 모든 외국군대는 6개월 이내에 조선영토에서 철수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그는 6월 15일의 수정안을 통하여 南·北韓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쌍방지역에 10만을 넘지 않는 제한된 군대를 배치할 것과, 전쟁상태의 점차적 해소 및 쌍방군대의 平和時 태세 전환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고자 제안했다.

이러한 구조적 軍備統制 提案과 더불어, 남·북한간의 친선도모를 조성하기 위하여 통상, 회계, 청산, 親善交流, 인민의 이동자유, 문화 및 과학 교류 등의 '경제 및 文化交流'를 발전시키고 수립하기 위하여 합의된 방안을 수행하는 '전조선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였다.<sup>3)</sup> 제네바회담시

북한의 제안이 '구조적 軍備統制'와 '운용적 軍備統制'를 모두 다루고 있음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만, 그 당시의 정치·군사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치·선전적 의도가 짙은 실현성이 희박한 제안이었다고 評價할 수 있다.

다음 해인 1955년 3월 11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선언을 통하여, 韓·美간의 군사조약을 배격하고, 조선의 내정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며, 조선에서의 平和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외국군대를 조선지역으로부터 조속히 철수시키며, 南·北朝鮮의 군대를 10만이하로 각각 축소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 해 8월 15일 金日成은 8.15 10주년 기념사에서, (1) 평화보장을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고, (2) 全 外國군대를 철수하며, (3) 南·北韓간 무력불행사 협정을 締結하고, (4) 쌍방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하며, (5) 南·北韓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북한외상은 11월 16일 제10차 유엔총회에서의 韓國문제토의와 관련한 성명에서, 일체의 외국군대가 총선거 이전에 동시 철수할 것, 조선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南·北韓의 병력을 최저로 축소할 것을 주장했다.“

1956년 4월 28일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발표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라는 宣言에도 군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 선언은, (1) 南北韓당국이 상대방에게 반대할 여하한 武力行使도 할 수 없으며, (2) 조선통일에 관한 모든 문제를 平和的 方法으로 해결할 의무를 지며, (3) 군사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그것을 평화적 건설에 돌리기 위하여 南·北朝鮮의 군대를 최대한 축소하여야 하고, (4) 美國과 中國義勇軍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는 조선에서 철거하여야 하며, (5) 조선내정에 대한 외국인의 간섭을 불허하여야 하고, (6) 외국과의 군사동맹에 유인되어서는 안 되며, '韓·美相互防衛條約'과 기타 예속적 불평등 조약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동선언은 南·北韓간의 부자연스러운 장벽의 제거와 남·북한 인민간의 상호접촉과 협상이 실현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인민간의 상호왕래, 편지교환, 그리고 경제·문화·과학·예술·체육교류를 통하여 南·北韓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상호이해의 條件과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서 北韓은 왕래하는 인사에 대한 신변의 안전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했으며, 조선통일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하기 위한, 南·北韓 국회 정부 혹은 사회단체 대표에 의하여 구성될 常設委員會를 조직할 것도 제안했다.<sup>5)</sup> 이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군비축소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으며, 부차적으로 신뢰구축조치를 제시했고, 이러한 군비통제 제안을 統一問題와 긴밀히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1956년 11월 7일 북한의 最高人民會議가 南韓의 민의원과 사회인사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일체의 외국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南·北韓군비축소회의 개최를 지지할 것과 휴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을 위해 투쟁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록 宣傳性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미 1956년에 북한이 軍備縮小會議를 제안했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57년에 와서도 北韓은 외국군의 철수와 남·북한 병력의 10만 수준 감축을 거듭 주장했다. 金日成은 1957년 9월 20일에 행한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1차연설에서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南·北韓 병력을 각각 10만으로 축소할 것을 제의했다. 同年 12월 5일의 중앙위원회 확대전원회의에서도, 그는 美軍의 철수와, 南·北韓 병력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축소, 그리고 자유왕래, 郵便通信의 교환 및 각종물품의 교역을 제안했다.<sup>6)</sup>

한편, 北韓은 1957년부터 5월 30일자 外相聲明을 통해, 南韓에 신무기를 반입했다고 비난했으며, 1958년 2월 5일에도 미국과 남한이 신형무기를 반입하며 원자무기의 기지를 창설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자무기 반입에 대한 비난은 1959년 3월 4일 中國이 유엔참전국 정부에 전달한

서한에도 나타났는데, 특히 중국은 자국군대가 1958년 11월에 철수를 완료했으므로 유엔측도 각자의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 후반기 北韓의 군비통제 제안의 초점은 이렇듯 외국군철수, 남·북한 병력감축, 신형무기의 반입금지등으로 나타났으며, 때로는 자유왕래와 통신 및 통상 제안까지 결들였음을 알수 있다.

## 2. 1960年代 北韓의 軍縮提案

南韓에서 4.19혁명이 발생하자, 北韓은 평화공세를 적극적으로 전개했다. 1960년 4월 27일 북한은 '정당·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의 즉시철수와, 南北經濟委員會 樹立과 자유로운 왕래 및 서신교환의 실현을 주장했다. 7월 19일에도 북한은 남북인사의 자유왕래를 위해 非武裝地帶를 개방하자는 제의를 했다.

1960년 8월 14일 金日成은 8.15경축대회 연설에서 자유로운 南·北韓총선거 실시를 제안하고,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 조치로서 남·北朝鮮의 聯邦制'를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이러한 제안들을 수락할 수 없다면, 실업계 대표로 구성되는 '經濟委員會'를 조직하자고 요구하면서, 南·北韓 문화사절 왕래와 과학·문화·예술·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를 다시금 제의했고, 아울러 주한미군의 즉시 철수와 남·북한 군대를 10만 또는 그 이하로 축소할 것을 제의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 문제를 먼저 제기하면서, 신뢰구축방안과 군축문제를 同時に 제의한 점이다. 상식적으로는, 군사적 긴장상태를 감안하며, 運用的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신뢰구축방안을 먼저 내놓고, 다음으로 構造的 군비통제에 해당하는 미군철수 및 南·北韓 병력감축을 논한 후에, 끝으로 연방제 통일안을 제의했어야 좋았을 것이다.



4.19직후 南韓의 혼란한 정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군축 및 통일문제의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만들었다. 11월 23일의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회의에서 최원택 의장은 다시 한번 남북총선거나 聯邦制를 수락하거나, 여의치 못하면 정치문제와 무관한 經濟協力과 交流만이라도 실현하자고 제의했다. 이 제안에는 상품교역을 위한 合同商工會議所를 만들어 긴밀한 연계를 맺고 各 都市에 공동시장을 개설하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과학·문화·교육·보건·의료분야에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며, 운수·체신분야에서 全國的인 화물직속 대책을 마련하고, 서울 - 원산간과 신의주 - 부산간의 간이 직통여객 열차를 운행하며, 남포·청진·홍남·인천·목포·군산항을 서로 개방해서 南·北韓간의 海上輸送對策을 강구하며, 南北韓의 자유로운 왕래와 교통은 물론 전신·전화의 개통을 위해 서울 - 평양간 직통전화를 개통하고 각종 郵便物의 교환대책을 조급히 강구하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南·北韓 병력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축소와 관문점이나 서울 또는 평양에서 민족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協商會議를 열자고 제안했다.<sup>8)</sup> 이러한 北韓제안에 대하여 張勉총리는 11월 24일 공산측의 대남원조 및 통일협상제의를 상투적인 선전공세의 일환이며 政府로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으나, 4.19후에 北韓側이 신뢰구축과 연관되는 정치·군사·경제분야의 폭넓은 제안을 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1962년 6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최용건 위원장은 보고를 위해 미군철수, 南北韓 不可侵條約 체결 및 병력의 10만 이하로의 감축을 주장했다. 이어서, 196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에서 김일성은 南北聯邦制실시와 더불어, 남북한의 '武力不行使協定の 체결'과 '남북 병력을 각각 10만이내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1963년 9월 8일 정전수립15주년 기념행사에서 재강조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2일자로 北韓이 제18차 유엔총회에 보낸 '한국통일문제 해결에의 길'에



관한 각서에서도 되풀이 되었고,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이 남한에 보낸 호소문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북한이 1960 - 1963년기간에 美軍撤收와 더불어 不可侵協定締結 및 남·북한 병력의 10만으로의 감축을 반복제안했던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4.19직후 南韓의 정세는 혼란스럽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었으므로, 정권이 안정되고 제1차 5개년계획을 조기완수한 北韓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남쪽에 접근해 볼 필요성을 느꼈었을 것이다. 그러나, 5.16軍事革命은 북한에 기대를 무산시켰고, 中·蘇紛爭의 심화와 쿠바사태 발생 및 北韓·蘇聯關係의 악화가 북한지도층을 우려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소련의 군사·경제원조가 중단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北韓이 불가침협정과 남·북한 병력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감축을 거듭 제의했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北韓의 經濟計劃에 차질이 생기고 四大軍事路線을 추구했던 시기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과감한 軍縮提議를 했었다는 데에는 '공세적 방어'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직하다.

1960년대 後半期에는 남·북한관계가 너무 악화되어 군비통제를 생각할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못했다. 특히, 1967년과 1968년 기간은 북한의 對南 또는 對美 도발행위가 휴전후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다. 이 기간 휴전선의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건들을 살펴 보면, 1966년의 37件에서 1967년에는 445件으로 증가하고 1968년에는 542件으로 더욱 증대되었으며, 南韓내에서의 도발사건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험악한 분위기는 데탕트가 열리기 시작한 1969년 중반에 가서야 진정되기 시작했다.

### 3. 1970年代 北韓의 軍縮提案

1970년 6월 12일 New York Times지는 닉슨행정부가 駐韓美軍 64,000명중 상당수를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를 했고, 7월 11일에는 정총리가 국회에서 주한미군 64,000명중 20,000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증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변화를 맞아 北韓은, 6월 22일자 정부비망록을 통해, 美軍撤收후 南·北間의 不可侵을 서약하는 平和協定을 체결하고, 남·북한의 군대를 10만 이하로 감축하는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 남·북한간의 경제·과학·문화 등의 交流와 협력을 위한 협상을 제안하기도 했다. 9월 16일자 北韓外交部 성명도 남북연방제 실시와 相互減軍 및 不可侵協定締結을 다시금 강조했다.

1971년에 들어와서 美國은 주한미군중 제7보병사단을 철수시켰고, 비무장 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거듭 제안하였었다. 이에 대해, 7월 29일의 군사정전위 319차회의에서 北韓과 中國은 미군 全駐屯 병력의 철수, 핵무기 철거, 휴전선에 설치된 기지철폐를 요구하고 나왔다. 1972년 1월 10일 金日成은 요미우리신문 기자와의 회견에서, 정전협정의 남북사이의 平和協定으로의 전환과, 미군을 철거시킬 조건에서 남북한의 무력을 대폭 줄일 것을 주장했다. 北韓으로서는 데탕트의 개막과 더불어 실현된 美軍撤收에 고무될 수 있었으며, 그러한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기를 바랬었을 것이다.

1972년의 '7.4共同聲明'은 南·北韓이 데탕트시기를 맞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을 인정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祖國統一原則중에는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武力行使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다. 또한, 공동성명은 불신제거와 이해 및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 상호 증상·비방의 중지, (2) 大小武力挑發의 止場, (3) 군사적 충돌의 방지, (4) 다양한 交流의 실시,

(5)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의 성공지원, (6) 우발적 軍事事故의 미연방지와 문제들의 신속해결을 위한 남북직통전화의 가설운용 등과 같은 운용적 군비통제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sup>10)</sup> 7.4공동성명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준수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南·北韓關係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이며, 군비통제면에서도 훨씬 진전되어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북한은 1973년 金日成의 新年辭가 보여주듯이 7.4공동성명을 勞動黨의 승리라고 주장했으며, 韓國의 對北不信感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다. 즉, 정치적 계산과 불신이 짙게 깔린 가운데, 7.4공동성명은 처음부터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1973년 3월 14 - 16일의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회의에서, 평양측은 (1) 군비경쟁의 중지, (2) 남·북한 군대의 10만 또는 그 이하로의 대폭축소, (3) 미군을 포함한 일체의 외군철수, (4) 외국으로부터 일체의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중지, (5) 남·북한간의 武力不使用을 담보하는 平和協定締結을 요구하는 5개 군사조항을 제안했다. 4월 5일의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서 金日成은 南·北平和協定 締結등 5개 항을 또다시 강조하였다.<sup>11)</sup>

北韓의 군사문제해결 重視 立場은 1973년 6월 23일 金日成이 후사크 환영연설에서 제시한 조국통일 5대강령중 첫번째가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의 해소'라는 데에서도 재확인되었다. 9월 9일의 정권수립 25주년 기념회의 연설에서도, 金日成은 군사적 대치해소와 緊張緩和를 재차 강조했다.<sup>12)</sup>

그러나, 1974년 1월 18일 朴正熙 大統領이 '相互不可侵協定'체결을 제의하자, 북한은 1월 26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체결제의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다가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採擇된 미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미국과 직접 '對美平和協定'체결을 제의하였

다. 이는 南韓과 협상하지 않고, 實勢인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통해 美軍撤收 문제등을 해결하겠다는 立場의 表明을 의미한다.

그러나, 1975년 越南의 敗亡이 임박하자 金日成은 북경 방문중에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적극 지원할 것이고, 敵들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전쟁으로 단호히 대답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잃는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을 것은 조국통일일 것이다”라는 好戰的인 발언을 하는 태도변화를 보이기도 했다.<sup>13)</sup> 이러한 발언이 남·북한관계를 크게 긴장시켰음은 물론이다. 상대방의 不信滅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발언은 신중히 자제되었어야만 했다.

197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30돐을 맞아, 金日成은 美軍撤收 조건하의 平和協定締結과 南·北韓 군대의 10만선으로의 감축 및 군비경쟁 중지를 촉구하면서, 전국적 民族統一戰線의 형성을 주장했다. 1976년 3월 28일 金日成은 일본의 ‘世界’지 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 南北韓 不可侵條約 체결에 반대하고, 對美平和協定 체결후 남·북한간의 군축을 주장했다. 7월 22일 키신저국무장관은 美·中을 포함하는 4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8월 15일 박대통령은 남·북대화의 재개를 촉구했다.

8.18판문점 사건은 韓半島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위기를 조성했었으나, 양측의 자제로 ‘위기의 안정’에는 일단 성공하였으며, 南·北韓과 美國은 軍備統制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경험을 한 셈이다. 카터大統領의 駐韓美軍撤收 표명은 주로 월남전의 영향때문이었지만 판문점사건의 영향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카터행정부의 등장은 북한의 큰 기대감을 불러 일으켰으나 國際情勢의 악화와 對内外 壓力에 직면한 카터행정부가 駐韓美軍撤收計劃을 보류함으로써 북한을 크게 실망시키고 말았다. 카터 취임후인 1977년 9월 29일에 김일성은 미국의 정책때문에 양국관계가 적대관계에 놓여 있으며, 카터大統領이 공약대로 駐韓美軍을 撤收시킨다면, 이는 대단히

좋은 것이며, 미국과의 나쁜 관계는 제거될 것이라고 희망적인 견해를 피력했었다. 그러나 카터가 1979년 2월 10일 주한미군의 철수를 暫定的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하고, 6월 29일 - 7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美軍駐屯을 박대통령에게 확신시켰으며, 7월 20일 미군철수시기 및 속도를 1981년에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자, 북한은 미국을 맹비난했다. 7월 22일자 中央通信社 성명은 카터의 철군중지를 가르켜 “시대조류에 대한 도전이며, 大統領이 되기위해 큰 공약을 했으나 파렴치하게 그를 짓밟았고, 3當局者會議 제안도 분열책동과 전쟁책동을 가지기 위한 외교적 술책임에 분명하다.”고 신랄하게 공격했다.<sup>14)</sup> 북한으로서는 카터행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이다.

#### 4. 1980年代 北韓의 軍縮提案

1980년 10월 10 - 14일까지 열렸던 勞動黨 제6차 黨大會에서 나온 10大 施政方針에서는, 남·북한이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同族相爭을 종식시키기 위하여 쌍방의 군대를 10만 내지 15만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군사분계선을 없애고 그 일대의 모든 군사시설을 제거하며, 南·北의 民間軍事組織들을 해산하고 민간훈련을 금지하여, 단일한 ‘民族聯合軍’을 조직하여 연방정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두자고 제의했다. 현실상의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태를 생각할 때, 민족연합군의 조직까지 제의한다는 것은 정치·선전면이 강하고 상당한 비약이지만,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구상을 구체화 시켰다는면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조선노동당과 일본사회당은 1981년 3월 16일 ‘동북아시아 非核平和地帶創設’에 관한 다음과 같은 共同宣言文을 발표했다 : (1) 동북아지역의 모든 핵무기 철거, 파괴 및 核武器와 生化學武器의 개발, 시험, 생산,

소유, 운반, 저장, 반입, 사용을 일체금지하여 ; (2) 동북아 인민들의 의사에 어긋나는 非法的으로 배치된 외군기지와 군대를 철거하고 ; (3) 동북아 지역의 침략적 군사블럭 및 새로운 군사동맹 체결시도를 저지하며 ; (4) 동북아 비핵·평화지대의 범위는 조선과 일본 및 주변해역으로 한다.

이는 北韓이 본격적으로 韓半島의 非核地帶化를 이슈화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南韓의 반응은 비교적 냉담한 편이었으나, 일본사회당과 공동으로 이러한 선언을 한데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北韓은 1984년 1월에 남·북한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緩和하기 위하여, 미·북한간의 회담에 남한을 포함시키는 '3자회담'을 開催하여, 미·북한간에는 平和協定을 체결하는 문제를 토의하고, 남·북한간에는 '不可侵宣言'을 채택하는 문제를 토의하자는 주장을하였다. 平和協定에서는 주한미군문제를 포함시키고, 不可侵宣言에서는 상호간 무력불행사와 쌍방군대의 감축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음을 제의했고, 이와는 별도로 政治協商會議를 소집하여 聯邦國家를 창설하는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랑군사태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남한의 반응은 냉담했으며, 단지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촉구했었다.

1984년 韓江유역의 홍수를 계기로 남·북한은 赤十字會談을 재개하여 고향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류를 성사시켰으나, 북한은 1986년 1월 11일자 외교부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군사훈련때문에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일방적 중단을 선언했다. 북한으로서는 人的 交流의 後續的 餘波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며, 적십자회담보다는 군축 및 통일문제를 다루는 政治軍事會議에 더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적십자회담을 중지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986년 6월 7일에 북한은 기존의 대화창구를 무시한채, '3자군사회담'을 제의하고 나왔다. 6월 28일에는 黨政聯合會議를 열어 핵전쟁방지와 核武器



撤廢 등을 비동맹운동의 역점방향으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6월 23일의 ‘韓半島 非核地帶 創設’에 관한 政府聲明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해방 41주년을 맞아 8월 14일 정당·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연합성명에서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韓·美양국이 緊張緩和를 위해 북한의 軍事會談제안에 무조건 호응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1986년 9월 5일 北韓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조치에 따라, 人民軍과 인민경비대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投入中이라는 것을 보도하면서 韓·美당국자들이 대등한 평화적 조치를 취한다면 韓半島를 위해 보다 큰 전진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sup>15)</sup> 이는 雙方의 合意없이도 일방적으로 병력을 감축하는 조치로서, 상대방의 호혜적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閉鎖性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檢證할 길이 없었으며, 특히 現役을 건설현장으로 투입했는지 아니면 除隊시킬 병력을 투입했는지 조차 南側에서는 판단할 길이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北韓은 유엔이 1986년을 「國際平和의 해」로 정한 것을 이용하며, 9월 6일 - 8일까지 평양에서 ‘非核·平和를 위한 平壤國際會義’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를 위해 북한은 이해 3월에 부주석 朴成哲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선국제평화의 해 기념 조직」을 구성하고 50여개국에 유치단을 파견한 바 있었으며, 대회에 78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했다고 선전하였다. 회의에서는 韓半島에서의 핵전쟁위협성과 주한미군의 철수가 제기되었으며, 특히 李鍾玉은 3者會談과 韓半島 非核平和地帶 設定’을 강조했다. 회의 마지막날인 9월 8일에 채택된 ‘평양선언’에서 다음과 같은 7개항이 강조되었다 : (1) 조선반도에서의 核武器의 개발과 시험, 생산과 저장, 보유와 전개, 전파와 使用의 일체 禁止 ; (2) 조선반도에서의 외국군사기지의 설치와 외국군대주둔의 不許容 ; (3)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맺어진 군사조약폐기 및 새로운 군사



불력의 형성기도 沮止 ; (4) 조선반도의 緊張激化와 전쟁위험의 요인이 되고 있는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의 중지 및 병력·군비의 축소 ; (5) 조선반도에서 緊張狀態緩和 및 平和와 平和統一의 유리한 前提를 조성하기 위한 3者會談 또는 군사당국자회담과, 이를 통한 협상분위기 조성후의 여러 남북대화의 재개 ; (6) 조선에서 緊張狀態緩和와 민족적 단합을 위한 제24차올림픽대회의 共同主權 ; (7) 조선반도에서 恒久的 平和를 보장하는 가장 근본적 방도는 7.4공동성명의 3대원칙에 따른 民族的統一의 實現이라는 내용들이었다.<sup>16)</sup>

1986년 6월 17일 人民武力部長 吳振宇는 韓國의 李基白국방장관과 립시司 令官에게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은 군사책임자들간의 회담을 통해 군사훈련의 中止와 군비축소 및 정전협정 준수 문제 등을 7월 중순에 논의하자는 이례적인 것이었다.<sup>17)</sup> 韓國側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北韓은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金日成의 政治演說을 통해 南·北韓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시사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군사회담에서 정치·군사회담으로 바뀐 점이다.

북한은 1987년 1월 11일 政務院總理 李根模와 인민무력부장 吳振宇의 명의로 정치·군사회담에 관한 편지는 盧信永국무총리와 李基白국방장관에게 전달하였다. 편지내용은 상호 비방·증상의 중지, 合作과 交流, 군비경쟁 중지 및 무력축소, 비무장지대의 平和地帶化, 대규모 군사훈련의 중지, 중립국 감시군의 조직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다.<sup>18)</sup>

특기할 점은 美國의 참여에 관한 언급이 없이 南·北韓이 정치·군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부총리와 참모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자는 것이었다.

1987년 7월 23일 北韓은 정부성명을통해 다시금 군축협상을 제의했다. 제의 내용은, 첫째로 남·북한 및 미국이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들을 읍서버로 참관시킨 가운데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多者間 軍縮協商을 개최하

며, 둘째로는 1988-1991년 기간에 3단계에 걸쳐 남·북한 병력을 10만이하로 유지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sup>19)</sup>

이어서, 7월 30일 북한은 7.23군축제의의 1단계로서 연내로 10만병력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으며, 8월 6일에는 외교부대변인 성명을 통해 군축문제 등의 논의를 위한 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 外務長官會談을 8월말 경 제네바 또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열자고 제의하였다.<sup>20)</sup> 이러한 제의의 배경에 美·蘇間의 중거리핵미사일(INF)폐기 合意와 韓國내 6.29선언 등의 환경변화가 있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3자회담제외이유로서 '군축제의 해결에 주한미군문제가 불가피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한 사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서울올림픽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는 1988년 11월 7일 北韓은 '中央人民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및 '정무원' 등의 연합회의에서, '평화 보장 4원칙'과 이에 기초한 '包括적인 緊張緩和 方案'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나라의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음을 일치하게 확인했다면서 특히 盧大統領이 10월 19일자 유엔연설에서 군사문제협의 용의를 밝혔음을 지적한 점은 北韓이 대응형식으로 군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왔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緊張緩和方案은 (1) '2개 조선'에 반대하는 統一을 指向하고, (2) 3단계에 걸쳐 1991년 말까지 미군의 철수를 진행시키고, (3) 南·北韓병력을 1989년 말까지 40만명으로, 1990년 말까지 25만명으로,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하며, (4) 남·북한과 미국간의 3자회담을 진행시켜, 미·북한간에는 '平和協定'을, 남·북한간에는 '不可侵 宣言'을 성사시키고, (5) 남·북한간 상호비방 및 증상의 중지 및 다방면적인 합작교류의 실현을 통한 정치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키며, (6) 非武裝地帶의 平和地帶化와 대규모 군사연습 및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군사행동 등의 중지등을 통해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시키

고, (7) 그리고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다.<sup>21)</sup>

이 包括的 緊張緩和方案은 아래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며, 종합적 제안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핵무기는 2단계로 나누어 1990년 말까지 철수시키고 ; (2) 미군병력은 1991년 말까지 3단계로 철수시키며 ; (3) 南·北韓 무력은 3단계에 걸쳐 10만명 이하로 줄이고 ; (4) 減縮 通報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권능을 확대하여 검증사업을 진행시키며 ; (5) 남·북한과 미국간 3자회담을 진행하고, 이 테두리 내에서 2자회담도 열도록 하며 ; (6) '정치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비방중지 및 교류·합작을 실현시키고 ; (7) 군사훈련중지 등을 통해 '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며 ; (8) 남·북한간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되 高位級 政治會談과 軍事會談을 따로 할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북한의 입장과 방안을 밝힌 점이다.<sup>22)</sup> 이 제안이 금년 5월 31일자 북한의 군축제안과, 9월~12월에 걸친 3차의 남·북총리회담에서 나타난 북한측 軍備統制안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은 北韓이 제13차 青年·學生祝典때문에 바빴던 해였고, 축전이후는 동구에서의 연속적인 變革이 북한의 지도층을 극도로 긴장시켰던 어려운 해였다. 특히 11월의 베를린장벽 붕괴와 12월 말의 루마니아 사태는 북한지도층으로 하여금 體制 및 政權의 維持에 온 힘을 쏟지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따라서, 북한의 對南關係는 2次的인 문제가 되었으며, 韓國은 한국대로 국내문제와 北方政策에 주력했던 것을 볼 수 있다.

## 5. 1990年代 北韓의 軍備統制案

1990년 1월 1일 金日成은 지난 해의 성과와 1990년도 대내외정책 방향

을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는 동구권의 변혁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社會主義 路線 固守立場을 분명히 하였다. 동구변화를 가리켜 '사회주의적 배신' 또는 '反社會主義的 策동과 음모'라고 비난하는 북한의 입장은 적극적 적용이 아닌 수세적 입장을 보여준 것이었다.

주목할 점은 金日成의 新年辭에서 남·북한이 분단의 장벽을 제거한 후 자유왕래를 실현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분야를 全面開放하는 등 결정적 救國對策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점이다. 그는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 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하고, 자유왕래의 전제조건으로 한국측의 콘크리트 장벽 철거를 촉구했다.<sup>23)</sup> 障壁除去와 자유왕래 실현 및 각 분야개방 등은 상당히 전향적인 인상을 주지만, 북한의 대내외 환경을 고려할 때, 진정한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공세적 방어'의 성격을 띤 對南提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北韓은 4월 22일에 제9기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선거를 예전보다 앞당겨 실시하여, 金日成 父子를 포함한 687명의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는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體制 및 政權의 재정비를 위한 것이었으며, 改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기본 권력서열에 변화가 없었고, 정치·경제적 改革案의 제시가 없었다.

金日成은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행한 施政演說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사회주의 원칙을 버리고 資本主義的 본보기에 의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면, 난관은 극복할 수도 없으며 사회주의의 고유한 우월성을 마비시키고 혼란상태에 빠지게 되며 피로서 생취한 혁명의 戰取物 마저 잃게 된다고 경고하면서, 社會主義 고수 입장을 강력히 表明했다.<sup>24)</sup>

金日成의 施政演說은, 강력한 사회주의 노선 견지의 입장표명과 더불어,

조국통일의 실현을 위하여 5가지 문제해결책을 제시한 점과, 특히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특색으로 돋보인다. 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보장이 평화통일을 위해서 先次的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南·北韓간의 불가침선언 채택과, 美·北韓간의 平和協定締結을 통해 남·북한 무력을 10만 이하로 줄이고 핵무기 및 외국군대를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으로 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남·북한간 자유내왕의 전면개방을 실현하여야 하며, 셋째로는 南·北韓이 平和統一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는 對外關係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특정한 계층이 아닌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全民族的 對話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민족적 統一戰線의 형성을 역설하면서, 1990년대를 역사적인 祖國統一의 연대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軍縮問題와 관련하여, 金日成은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하고 외국군대와 군사기지를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평화는 구걸이 아닌 투쟁을 통해 쟁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日成의 施政演說중 군축에 관한 부분은 5월 31일 '中央人民委員會'와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 및 政務院 聯合會議에서 나온 軍縮方案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북한은 전지역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15만 여명의 병력을 社會主義 건설에 돌렸으며, 일방적으로 10만명의 장병을 제대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한간의 대폭적 군축을 촉구했다. 聯合會議에서 1988년 11월에 제안한 '포괄적 평화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마련하였다는 軍縮方案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南·北韓간의 信賴造成을 위해 남·북한이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제한한다. (1) 외국군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 및 군사훈련 중지 ; (2) 사



단급 이상의 군사훈련 및 연습 중지 ; (3)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일체의 군사연습 금지 ; (4) 自己領内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 불허용 ; (5) 군사연습의 사전 호상 통보.

둘째, 남·북한은 非武裝地帶를 平和地帶로 만든다. (1) 非武裝地帶 모든 군사 인원들 및 군사장비물 철수 ; (2) 非武裝地帶내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의 해체 ; (3) 非武裝地帶를 민간에 개방하고, 평화목적에 이용.

셋째, 우발적 충돌과 확대를 막기 위한 安全措置를 취한다. (1) 쌍방 高位軍事當局者 사이에 직통전화 설치·운영 ;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도발행위 금지.

넷째, 南北韓은 武力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 (1) 병력감축은 쌍방간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 동안 3단계에 나누어 실시하되, 첫 단계에서는 각각 30만명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각각 20만명 선으로, 셋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각각 10만명 이하로 兵力을 유지 ; (2) 단계별 병력감축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을 축소, 폐기 ; (3) 正規武力 감축의 첫 단계에서 모든 민간 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

다섯째, 南·北韓은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을 중지한다 : (1) 새로운 軍事技術裝備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 중지 ; (2)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음.

여섯째, 南·北韓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 실시한다 : (1) 무력감축 정형을 상호 통지 ; (2) 상대측 지역에 대한 상호 현지시찰을 통한 군축합의 이행여부를 검증.

일곱째, 南·北韓은 朝鮮반도를 非核地帶로 만든다 : (1) 남한에 배치된 모든 핵무기들을 즉시 철수시키기 위한 공동노력 ; (2) 핵무기를 생산·구입하지 않음 ; (3) 핵무기를 적재한 외국비행기 함선의 조선경내로의 출입과 통관금지.

여덟째, 南·北韓은 조선반도에서 일체의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1) 주한미군 및 장비들을 남·북한 무력감축에 상응하게 단계적으로 완전 철수 ; (2) 美軍撤收에 상응하는 남한내 미군사기지들의 단계적 철폐.

아홉째, 南·北韓은 군축과 그 이후의 平和保障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 非武裝地帶안에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 ; (2) 군비통제와 군사상의 분쟁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쌍방의 참모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南·北軍事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

열째, 南·北韓은 협상을 통하여 不可侵宣言을 채택하고 대폭적인 군축에 합의해야 한다.<sup>25)</sup>

위의 10개항에는 신뢰조성방안 및 緊張緩和方案과 더불어, 실제적인 무력감축과 검증 및 평화보장 방안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물론, 북한 나름대로의 이익과 필요성을 계산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韓國側에서는 구체적인 군비통제안을 제시하지 못했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北韓은 유럽에서의 軍備統制 成果와 신데땅뜨 및 韓國의 消極的인 군비통제에 대한 자세를 감안하며, 이와 같은 구체적 案을 攻勢的으로 제시했던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sup>26)</sup>

## 6. 總理會談에서 提示된 北韓의 軍備統制案

1990년 9월~12월에 걸쳐 개최된 3차의 南·北韓總理會談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할 데 대한 양측의 입장을 분명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南韓이 신뢰구축을 통한 漸進的 軍비통제 및 불가침에 대한 보장을 강조한 반면, 北韓은 不可侵宣言과 더불어 군축을 과감히 실현하자는 입장을 견지했었다.



平壤에서 열렸던 제2차 총리회담시, 북한의 延享默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시각에서 남·북한의 입장차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문제해결의 先後次例와 관련하여, 北韓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는 문제에 先次性을 부여하고 이와 並行하여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해 나갈 것을 제의하는 반면에, 南韓側은 협력과 교류문제에 선차성을 부여하면서 군축문제를 차후의 과제로 제기하고 있다.

둘째, 군사문제 해결의 단계설정과 관련하여, 北韓은 군사문제 해결을 하나의 統一的 過程으로 보고 있으나, 南韓은 군사적 信賴構築段階와 군축 단계를 서로 구분하고 있다.

셋째, 美軍 및 核武器撤收와 관련하여 北韓은 이를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간주하고 있으나, 南韓側은 어떠한 대책도 예견하지 않고 있다.

넷째, 쌍방의 제안들이 부분적인 근사점이 있으나 總體的으로는 그 성격이 다르다. 즉, 北韓안이 철저히 통일지향적인 것이라면, 南側提案들은 현상고착화라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sup>27)</sup> 相互不信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不信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인도주의 문제 및 교류·협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不可侵선언의 채택을 강력히 촉구했다.

12월 12~13일의 제3차 總理會談에서도 北韓은 교류협력보다 불가침선언의 선차적 채택을 고집했고, 南韓側은 '기본합의서'의 채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남한은 신뢰구축을 전제로하여야 하며, 불가침선언은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實踐意志와 불가침 이행을 보장하는 確固한 裝置가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sup>28)</sup>

不可侵宣言 채택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양측이 모두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南韓側이 北韓의 과거 도발행위 및 불변한 대남정책

때문에 실천외지에 의문을 품어 대남정책의 修正과 확고한 保障裝置의 마련을 선차적으로 요구한 때문이다.<sup>29)</sup> 또한 불가침선언 채택후에 북한이 즉각적으로 주장하고 나올 주한미군 및 核武器의 철거요구를 우려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측이 不可侵宣言 채택을 집요하게 성사시키려 한 의도는 연형묵총리가 설명한 북한의 기본입장을 검토하여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 武力減縮과 외국군철수 및 한반도의 非核地帶化 요구가 필연적으로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北韓이 불가침선언초안에서 남·북한 武力減縮과 주한미군철수 및 非核地帶化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南·北韓간 본격적인 軍備統制협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합의 도출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提案의 약점은 실재하는 불신과 敵對感의 정도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시일내에 相互武力減縮과 미군철수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제3차 南北總理會談시 연형묵 북한총리는 기조연설에서 南側이 불가침선언 채택을 회피하는 것은 전쟁방지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불가침선언 자체가 가장 공고하고 믿음성 있는 信賴保障 장치이며, 이를 의심하면 南·北韓사이에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역설했다.<sup>30)</sup> 이러한 北韓側의 접근방법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과거 경험에 바탕을 둔 南韓側의 우려나 피해의식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側이 솔직하게 과거 사실을 인정하고 대남정책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表明한다면, 남북한관계에는 큰 變化가 오겠으나, 이는 북한지도층의 '新思考'와 決斷을 요하는 어려운 문제이다. 韓國側도 北韓의 威脅認知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未來指向的으로 對應할 필요가 있다.

### Ⅲ.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北韓의 집요하고 일관성있는 軍備縮小 제안들과 비교할 때, 南韓의 軍備統制 提案은 北韓의 제안들을 정치선전적인 것으로 批判하거나, 신뢰구축방안과 같은 制限的인 범위의 군비통제안을 제시하는 消極的 대응을 하여 왔다. 南韓側이 소극적인 이유는 6.25 남침으로 인한 피해의식 등이 가시지 않고 있으며, 中·蘇의 支援을 쉽게 받을 수 있는 北韓에 비해 地政學的으로 不利한 立場에 처해 있고, 北韓이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공산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존재때문에 軍備統制문제는 韓·美間의 협력 및 이해관계 조정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단, 最近에 와서는 국내외 정세의 급변으로 인하여, 南韓도 軍備統制問題를 더 이상 금기시하지 않고, 北韓과 정면으로 마주앉아 논의하겠다는 前向的인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 1. 1950年代와 1960年代 한국의 軍備統制提案

南韓은 휴전협정에 서명을 거부할 만큼 6.25南侵으로 인하여 北韓에 대한 적대감이 강했다. 李政權은 휴전후에도 상징적으로 北進統一을 강조할 만큼 北韓을 적대시하여 타도의 대상임을 분명히 했었다. 自由黨 정권하의 비현실적인 '북진통일'은 4·19학생혁명으로 張勉정권이 등장하면서 포기되었다. 그러다가, 5·16軍事革命으로 軍事政權이 들어서면서 反共을 국시로 하는 강경한 對北韓政策을 추구함으로써, 南·北韓關係는 다시금 경직화 되었었다.

따라서 휴전후로부터 1960年代 기간의 南·北韓關係는 적대관계의 지속이었으며, 軍備統制는 생각조차하기 힘들었다.

南韓은 休戰協定에 서명을 거부했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休戰協定締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南韓은 새로운 남침시 효과적인 美國의 지원 보장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韓·美相互防衛條約이 1953년 10월 1일締結되기에 이르렀다. 이 條約 4條는, “韓國은 美國의 陸海空軍兵力의 한국영토 및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용하고, 미국은 그 권리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sup>31)</sup> 韓·美防衛條約은 휴전후 미군의 한국주둔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었다.

1954년 제네바會談시, 韓國측도 軍備統制提案을 제시했었다. 1954년 5월 22일 변영태 외무장관이 제시한 14개 항목의 韓半島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3개 항이 軍備統制와 관련이 있었다. 그는,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후 전국적인 의회가 구성되면, 그 의회가 군부대의 해체문제를 논의하고자 제의했다. 또한, 그는 모든 中共軍이 선거 1개월전에 철수를 완료하도록 하며, 유엔군의 철수는 선거전에 시작할 수는 있으나 統一政府가 韓半島 전체를 관리하고 유엔이 이를 확인할 수 있을때까지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sup>32)</sup> 결국, 제네바會談은 실패로 끝나, 統一은 커녕 軍備統制問題에서도 하등의 접근을 볼 수 없었다.

1955년 10월 8일 韓國 國會에서 채택된 통일 및 안보에 관한 결의문에는 공산주의자들의 韓半島장악 음모에 대한 경계와, 中共軍이 무조건 철수해야 한다는 요구와, 유엔이 북한 괴뢰군의 무장을 해제해야한다는 주장과, 세계는 平和共存의 선전에 기만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 있다.

<sup>31)</sup> 이 決議案은 당시의 南韓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서, 北韓과의 軍備統制를 위한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 되어 있다.

1956-1958년 기간, 北韓은 軍備縮小提案을 여러 차례 내놓았으나, 南韓측

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특히, 1958년에는 中共軍의 철수와 연계시켜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 철수를 北韓과 中國이 공동으로 요구하기도 했으나, 南韓과 유엔측은 그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다.<sup>34)</sup>

1959년 3월 4일, 中國은 유엔참전국 정부들에 서한을 전달하여 중공군의 완전철수를 상기시키면서 南韓內 외국군대의 철수를 요구했다. 10월 26일에는 北韓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6차회의에서, 외국군대를 철수시키고, 南北朝鮮軍隊를 각각 10만 이하로 감축하며, 상대방에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자고 제의했으나, 韓國은 북진통일 입장을 견지했다.<sup>35)</sup>

4·19學生革命의 발생으로 기회를 포착한 북한은 1960년 8월 14일 연방제 제안과 함께 미군의 철수 및 남·북한 병력의 10만 또는 이하로 줄일 것을 제의했었다. 이에 대하여, 8월 17일 정일형 외무장관은 北韓의 제의가 韓國內의 政治, 經濟, 사회적 교란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맹렬한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sup>36)</sup> 그러나, 정 장관은 24일 발표한 7개항의 외교정책 성명에서, 과거 자유당이 주장한 무력에 의한 통일과 같은 무모한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민주당정권의 對北政策변화를 발표했다.<sup>37)</sup>

그러나, 北韓측의 對南平和攻勢는 5·16軍事革命으로 韓國內의 정세가 급변하면서 큰 좌절을 겪게 되었다. 軍事政權은 革命公約에서 反共을 國是의 제1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며,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강경한 대북한 입장을 밝혔다.<sup>38)</sup>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내세우는 때에, 南·北韓間의 軍備統制協商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1960년대 전반기 北韓은 쿠바사태와 중·소분쟁의 惡化로 인해 自衛路線을 강조하게 됨으로써, 軍備統制는 사실상 생각하기 힘들게 되었지만, 北韓은 1963년 9월 8일 15주년 기념식에서 美軍撤收, 불가침조약 체결, 10만이하로의 감군을 제의했으며, 11월 22일자 제18차 유엔총회에 보낸 통일문제 해결

에 관한 각서에서도 南·北韓 무력불가침 및 평화조약체결과 10만이하로 감군을 반복 제의했다. 이어서, 12월 9일 유엔에 제출한 통일방안과 다음날인 12월 10일 南韓의 민중, 정계인사 및 사회활동가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도 똑같은 제의를 했다.<sup>39)</sup>

이에 對한 南韓측의 반응은 정치선전적인 것으로 무시하는 편이었으며, 그 보다는 경제적 실력배양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김종필씨는 1963년 11월 6일 서울대학교에서의 토론을 통해 통일을 위해 同族끼리 싸우는 것은 찬성하지 않으며, 우리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통일할 수 있도록 경제실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sup>40)</sup>

한편, 北韓도 1965년 4월 15일 김일성이 인도네시아의 알리아루합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3대 革命力量의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軍備統制의 眞意를 의심케 만들었다.

1966년에서 1969년까지의 기간은 南·北韓關係가 심각한 정도로 惡化되었던 시기였다. 휴전선 내부 및 주변에서 무수한 무력 충돌이나 도발사태가 발생했으며, 1968-1969년에는 청와대기습 사건과 푸에블로호사건 및 EC-121기 격추사건과 같은 심각한 사건들이 발생했다.<sup>41)</sup> 이 기간은 南韓의 對北 경제심이 극도로 고조되었던 시기로서, 軍備統制보다는 오히려 軍備競爭으로 나아갔던 시기가 된다.

綜合적으로, 1960년대 韓國의 軍備統制提案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며, 오히려 자체의 經濟力強化 및 국방력강화를 위해 노력한 기간이었다. 특기할 점은 韓國軍이 美國의 월남전 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대를 해외에 파병했었고, 월남전경험과 사용하던 병기들을 통해 전력을 강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 2. 1970年代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1970年代는 데탕트 시대로서, 韓半島에서도 주한미군중 1개사단 병력이 철수되었고, 남·북한간에도 '7·4공동성명'이 성사되는 등의 변화가 나타났었다. 닉슨독트린의 韓半島에서의 적용과, 월남의 敗亡 및 카터행정부의 철군 정책은 한편으로 南韓을 긴장시켜 전력보강책을 강구하도록 만들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과의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1970년 6월 12일자 '뉴욕타임즈'紙는 주한미군 64,000명중 상당수가 감축될 것이며, 수 주일내 韓國政府와 서울서 협상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7월 11일 정일권총리는 주한미군 64,000명중 20,000명이 감축될 것이라고 國會에서 증언했으며, 7월 16일 국회는 미군감축 반대와, 한국군 장비의 현대화 및 군수산업육성 지원의 선행을 요구하는 對美 메시지를 채택했다.

8월 15일 박대통령은 北韓이 무장공비 남파 등의 도발행위를 중지하고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기도해 온 종전의 태도를 포기하겠다는 점을 명백히 선언하고 行動으로 實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그는 北韓이 전쟁준비에 광분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立證하는 개발 및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sup>42)</sup> 이에 대하여 8·23일자 노동신문사설은 8·15선언이 統一을 위한 실질적 方案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미군의 철수를 거듭 주장했다.<sup>43)</sup>

1971년 6월 12일 유엔군측 軍事停戰委員會 首席代表 로저스 소장은 제137차 본회의에서, 비무장지대로부터 모든 군인과 무기를 철수시키고 모든 요새화된 진지와 軍事施設을 破壞할 것과,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인 민간활동을 위해 이용할 것을 제의했다. 7월 4일 로저스 소장은 南·北間 접촉 유도



를 위해 停戰委 유엔군측 수석대표를 韓國人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했다. 7월 9일과 7월 28일 로저스 수석대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다시금 제안했다.<sup>4)</sup>

1972년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로서, 1월 1일 朴正熙 대통령은 南·北 赤十字會談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2월 12일에는 김용식 외무장관이 긴장완화를 위한 4개 선행조건으로서 (1)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2) 간첩남파의 중지, (3) 억류 민간항공기 승객의 송환, (4) 그리고 무력적화 야욕의 포기를 요구했다. 3월 15일에도 철거와 무장병력의 철수를 요구했다. 3월 30일 박 대통령은 재차 무력 적화통일정책의 포기와 비무장지대내 軍事施設의 즉각 철거 및 무장간첩의 남파중지와 비정규 특수부대의 해체 등을 요구했다.

1972년 5월 2일-5일 이후락 정보부장의 은밀한 平壤 방문과 5월 29일-6월 1일 사이 박성철 부수상의 비밀리 서울방문을 통해, 南·北韓은 환경 변화에 맞게끔 南·北韓關係 개선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로 '7·4공동성명'에 나타난 역사적 합의가 탄생되었는데 내용중에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들어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의 배경으로, 1971년의 주한 미 제7사단 병력 철수, 1972년 2월 닉슨의 중국방문 및 5월의 미·소간 전략 무기제한협정(SALT-1)締結 등의 큰 변화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주목할 만한 軍備統制의 실현으로서, 일방적 조치였다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73년에 들어와 北韓은 南北調節委員會 제2차회의(3.14-16),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4.5)에서의 金一報告, 그리고 南北調節委 제3차회의(6.12-14)를 통해 軍備競爭中止와 미군철수 및 南·北韓 兵力의 10만이하로의 감축을 요구하는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하여, 朴正熙 대통령은 '6.23선언'을 통하여, 平和的 統一과 相互 내정불간섭 및 不侵略 등을 강조하는 대외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6.23선언은 중요한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박대통령은 다음해인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제29주년 기념식전에서, 남북한이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하여 相互 不可侵協定을 締結하여야 하며, 相互 門호를 開放하고 信賴를 회복해야 한다는 등의 平和統一 3大基本 原則을 제시했다. 그는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간의 성실한 대화와 다각적인 交流·協력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5년 1월 14일의 연두기자회견시 不可侵協定 締結과 南北對話再開를 다시금 촉구했으며, 6.25 25주년 기념식에서도 北韓이 相互不可侵協定을 수락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北韓의 金日成은 北京 訪問기간인 4월 18일 남조선에서 혁명이 발생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호전적 발언을 하였으며,<sup>45)</sup> 1976년 3월 28일 일본 '世界'誌 편집국장과의 회견에서도 不可侵條約을 반대하면서 對美平和協定 締結후의 南北韓 軍縮을 역설했다.

카터행정부의 출범은 韓國으로 하여금 더욱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닉슨독트린의 출현으로 인하여 주한미군 20,000명이 철수한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카터의 모든 地上軍 철수계획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였다. 따라서, 韓國은 전력증강을 통한 군사력 均衡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內·外의 압력으로, 1978년 4월 21일 미국은 제1차 철군규모가 6,000명 예정에서 3,400명으로 축소발표했고, 1979년 1월 15일 카터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보고에서 北韓軍事力 재평가의 결과로 철군계획이 재조정 될수 있음을 시사했다.<sup>46)</sup> 이어서 카터 대통령은 2월 10일에 주한미군의 철수를 잠정적으로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카터행정부 기간은 南韓側의 위협인지와 우려를 증대시킨 반면, 北韓에서는 큰 기대를 불러 일으켰던 기간으로서, 韓國측으로서는 軍備縮小를 생각하기 보다는 미군철수에 따른 전력차질을 보강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실

제로도 전력증강을 추진시켰던 시기가 된다.

1970년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韓國측 제안은 신뢰구축과 남·북대화를 促求하는 수준에 머물렀었고, 본격적인 軍備統制提案은 생각하기도 힘들었으며, 정치선전적 차원의 軍備統制提案마저도 별로 시도하지 않았었다.

### 3. 1980年代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

1980年代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은 前半期和 後半기로 나누어 생각 할 필요가 있다. 전반기에는 10.26사태 발생과 蘇聯의 아프간 침공사태로 인한 美·蘇관계의 惡化 등으로 南北對話가 어려웠던 시기였다. 반면에, 후반기에는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미·소관계의 호전, 한국의 올림픽개최 준비 및 성공적 개최, 6.29선언, 북방정책 추진 등의 영향으로 南·北韓 關係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었다.

10.26사태 이후 北韓이 總理會談을 1980년 1월에 제의하여 實務接觸이 진행되었으나 9월부터 중단되고 말았다. 韓國으로서는 국내사정때문에 남·북한 대화에 소극적인 수 밖에 없었고, 北韓은 남한내의 불안정한 정세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總理會談이 성사되기는 어려웠었다.

北韓이 1980년 10월의 제6차 당대회를 통해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립방안과 10大施政方針을 제시한 후, 南韓은 全斗煥대통령의 1981년 1월 12일자 국정연설을 통해 '南北韓當局 最高責任者 상호방문'을 제의 했다. 全대통령은 최고책임자간의 만남이 신뢰회복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전쟁재발을 방지하는 데 획기적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北韓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金一의 성명을 통해 상호방문제의를 거부했다.

1년 후인 1982년 1월 22일 全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을 체결할 것을 제의

했다. 잠정협정안중 넷째항은 쌍방이 韓半島에서 긴장완화와 戰爭防止를 위하여 현존 休戰體制를 유지하면서 軍備競爭의 지양과 軍事力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하자는 내용이며, 다섯째 항에서는 분단으로 인한 民族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相互 交流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1월 26일 北韓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거부성명을 발표했다.

南韓側은, 1·22제의에 이어서, 2월 1일에 통일원장관 성명을 통해 '20개 示範實踐事業'을 제의했다. 이는 '運用的 軍備統制'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 軍備統制 提案들이다. 신뢰구축방안을 폭넓게 생각할 때, 20개항은 모두 해당된다. 특히 제17항의 非武裝地帶内の 공동경기장 시설마련 및 친선경기, 제18항의 비무장지대 동식물 생태계 연구를 위한 공동학술조사, 제19항의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 완전 철거, 제20항의 남북간 軍備統制裝置 協議 및 쌍방 軍事責任者間的 직통전화 설치·운용은 분명한 軍備統制提案들이다.  
4) 그러나, 협상 분위기가 성숙된 것은 아니었으며, 진전 결과가 있어 南·北韓은 서로 정치선전에 더 큰 관심을 지닌 듯이 보였다.

1984년 1월 11일 손재식 통일원장관은 버마사태에 대한 是認·謝過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最高責任者會談 또는 각료급 회담을 개최하여 긴장사태해소와 軍備競爭中止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 선언'문제를 협의하자고 촉구했다. 이는 1월 10일자 북한의 남·북한 및 미국의 3자회담 제의와 그를 통한 미·북한 平和協定締結 및 남·북한 불가침선언 채택 제의에 대한 응답이 되는 셈이다.

1984년 9월의 水災物資 引導 및 引受가 계기가 되어 南·北韓關係가 개선되는 가운데, 全대통령은 광복절 40주년 기념사를 통해 南北의 相互不可 侵 약속 및 구체적 실천조치와 동시에, 상호 교류·협력에 대한 원칙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8월 28일에는 朴東鎭 통일원장관은, 北韓이 강조하는

긴장완화와 신뢰조성 및 불가침선언 문제는 말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상호불가침의 實踐意志를 대내외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1980년대 전반기에 제시된 韓國의 軍備統制 提案은 거의 모두 정치·군사적 信賴構築에 관한 것들로서, 北韓의 구조적 軍備統制안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기로 들어가면서 남한내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제적으로는 美·蘇關係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열기와 서울올림픽개최가 영향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86년에는 韓國國際政治學會가 그동안 금기시 되었던 軍備統制問題를 주제로 서울에서 國際學術會議를 개최하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sup>48)</sup> 이는 한국의 軍備統制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金日成이 1986년 12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제8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제의한 후 北韓은 軍備統制를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한국 사회에서도 국내의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軍備統制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증대되기 시작했다.

특히, 6.29선언이후의 民主化추세와 성공적인 88서울올림픽은 軍備統制에 대한 南側의 기피현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했다. 또한, 軍備統制問題를 외면한채 남·북관계개선을 시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韓國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신감 증대를 바탕으로 北韓의 제의를 정면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황전개에 맞게끔 南·北韓關係를 이끌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다. 韓國內 변화는 국방부내에 軍備統制室을 신설하는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으며, 최근 '韓國國防研究院', 외교안보연구원, 국제문제연구소등에서는 南·北韓 軍備統制를 주제로 國際學術會議를 여러차례 개최한 바도 있고, 통일원에서는 오래전부터 개괄적으로 군축연구를 한데 이어 軍備統制와 관련해서 먼저 상당수의 연구문헌을 발간했다. 이는 1980년대 말에 이르러 한국 내 軍備統制에 대한 관심과 연구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1988년 6월 10일에는 崔光洙 외무장관이 제3차 유엔 軍縮特別總會에서 韓半島軍縮3段階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남북대화와 相互協力を 통한 상호신뢰구축 단계를 거쳐, 불가침협정체결을 통한 制度的 保障 장치를 마련한 후, 마지막으로 상기 토대 위에서 軍縮協商을 개시하자고 제의했다. 韓國은 1989년 2월 8일 고위급회담을 위한 제1차예비회담에서, 대규모훈련의 사전통보와 참관초청 및 남북 고위 軍事當局者간의 直通電話 가설을 제의하였다.

盧泰愚대통령은 1989년 10월 18일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南北頂上會談에서 '남북불가침선언'을 제의했었다. 이어서, 1990년 6월 7일 워싱턴 기자회견시에도, 北韓의 무력통일공세 포기 및 신뢰구축 바탕위에서 주한미군 및 南·北 軍縮問題를 논의할 수 있음을 밝혔다.

1980년대 말에 이르러 韓國政府도 이렇듯 軍備統制를 직접 언급하거나 運用的 軍備統制에 주안점을 둔 단계적 軍備統制案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美軍撤收 및 南北韓 병력의 10만 이하수준으로의 감축을 주장하는 北韓 제안과 비교할 때는 아직도 거리가 먼 점진적 해결을 선호하는 제안들이었다. 韓國側 입장은 1990년 9월-12월에 개최되었던 總理會談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났다.

#### 4. 總理會談時 提示된 韓國의 軍備統制案

1990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과 평양에서는 세 차례에 걸친 南北總理會談(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다. 3차에 걸친 총리회담을 통해, 軍備統制에 대한 南·北韓의 입장과 상이점이 명백히 밝혀졌다. 北側은 역시 軍備減縮에 역점을 두었고, 南側은 정치·군사력 신뢰구축을 통한 점진적 軍備統制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9월 4일~7일까지의 제1차회담에서 韓國側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軍備減縮 및 검증의 3단계 軍備統制案을 제시했다.<sup>49)</sup> 1단계 '政治的 信賴構築'에서는 상호 체제인정 및 상호 비방중지, 신문·라디오·TV·출판물의 상호개방, 서울과 평양에 각각 상주 연락대표부를 설치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2단계 '軍事的 信賴構築'에서는, 軍 人士의 상호방문 및 교류실현, 군사정보 상호공개 및 교환, 특정규모이상 군부대의 이동 및 기동훈련 사전통보 및 참관신청, 우발적 무력충돌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軍責任者간 직통전화 설치운용, 非武裝地帶의 실질적 非武裝化와 평화적 이용을 제안했다. 제3단계인 軍備縮小段階에서는, (1) 우선 공격형 戰力構造를 방어적 전력구조로 전환하고, (2) 相互同數 保有 원칙을 적용하되, 많은 쪽이 적은 쪽 수준으로 우선 減縮한 후 同數均衡減縮을 실시하며, (3) 常備戰力 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 및 유사한 군사조직도 감축하며, (4) 군축 합의사항 이행의 보장을 위해 現場檢證과 監視를 실시하고, (5) 쌍방 군사력 최종수준은 統一國家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한 것을 제안했다.<sup>49)</sup>

韓國側 軍備統制案은, 北韓이 구체적으로 3~4년동안 병력은 각각 30만, 20만, 1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자고 제의한 데 비해, 구체적 감축규모나 소요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입장 및 軍備統制방법을 명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자체만도 상당한 進展임에 틀림 없다.

10월 16일-19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총리회담에서 우리 측은 '南北關係改選을 위한 基本合義書'를 제시하는 한편, 통행·통신·경제교류협력에 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韓國측은 기본합의서 채택후에 不可侵 問題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2차회담시 韓國側이 제시한 軍備統制提案은 1차회담시 제시된 바와 같이,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력 신뢰구축, 構造的 軍備統制의 3단계 접근방법 및 방안들을 제시했다.<sup>50)</sup> 2차회담시, 北韓은 불가침



선언'을 즉시 채택을 촉구했으나, 南韓側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채 귀경했다.

제3차회의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일반인들의 기대속에 12월 11일-14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는데, 韓國側은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北側의 불가침선언 서명 촉구에 대하여, 남측은 첫째로 대남혁명노선을 포기할 것과, 둘째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실현, 셋째로 경제교류 및 협력을 活性化 할 것을 촉구했다. 북측의 不可便宜言 서명요구에 관해서, 남측은 '실효성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 불가침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實踐意志의 뒷받침 필요성; (2)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고 파괴·전복시키려는 정책이나 태도의 포기; (3) 불가침 이행을 보장하는 확고한 保障裝置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sup>51)</sup>

이러한 남측의 강력하고 분명한 보장장치 요구는 불가침선언 서명후 미군 철수와 비핵지대화 및 南·北韓 병력의 조속한 감축을 요구하려는 북한의 軍備統制 구상에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고 남측이 불가침선언을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남측은 기본합의서가 채택되면 1개월 이내에 '交流·協力 分科委員會'와 '政治·軍事 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교류협력 실시문제와 더불어 불가침문제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sup>52)</sup>

어쨌든, '불가침선언'에서 合意을 보지 못한 것은 남·북한간의 不信과 敵對感이 아직도 팽배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며, 동시에 南·北間 軍備統制 協商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미숙과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남·북한은 계속 접촉하고 협상할 필요가 있으며, 20여년이나 가까이 온갖 경험을 쌓은 유럽의 軍備統制協商과 그를 통한 성과 및 실패로부터 많은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 IV. 南北韓 軍事問題關聯 提案 比較評價

南北韓은 군비통제문제에 있어 뚜렷하게 다른 立場과 接近方法을 擇해 왔다. 휴전후 駐韓美軍은 韓國防衛를 위해 정치·군사·심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北韓의 남침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억지력이 되어왔다. 반면에, 北韓은 미군의 존재를 지상목표인 共產化統一을 저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장애로 인식하여 왔으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직접·간접으로 北韓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믿어왔다. 따라서, 韓國은 미군의 주둔을 안보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여 온 반면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안보 및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先決條件으로 삼아 왔다.

### 1. 北韓의 軍備統制 提案 評價

北韓측 군비통제 제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쌍방간의 불신감 및 敵對感을 선차적으로 해소하지 않은 채로, 군비통제에서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構造的 統制에 속하는 병력철수나 감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다. 또한, 북한 군비통제 제안의 특색은 유럽식의 단계적 과정을 거침이 없이, 곧바로 주한미군철수나 남·북한 병력을 10만 또는 그 이하로 減縮하자는 입장을 휴전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는 점이다.

둘째,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긴장완화나 신뢰구축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통일을 위한 불가결의 선결요건으로 간주하여 주장하여 왔다는 점이다. 즉, 統一과 軍縮을 連繫시키고 있는 것이 북한 군비통제 제안의 한 특징이다.

셋째,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대내외적인 政治·宣傳的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점이다. 루이스(John W. Lewis) 박사는 군비통제가 어차피 정치 선전적인 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한다.<sup>53)</sup> 따라서,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실현성을 감안하기 보다는, 對內外的 선전과 그를 통한 정권의 정통성 및 政權安保에 역점을 두는 듯한 인상을 배제할 수가 없다.

넷째,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現狀打破를 추구하는 입장인데,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남측의 6.25경험 및 무력도발에 대한 경계와 두려움을 過小評價 또는 무시하여 왔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은 남한뿐 아니라 한·미관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周邊 強國들의 이해관계도 얽혀있음을 소홀히 한 면이 있다. 주한미군이나 핵무기문제를 해결하려면 즉각적인 평화협정체결에 앞서 상당한 對美關係改善 노력을 기울여야 효과적 임에도 불구하고, 對美 敵對感을 고조시키면서 협정체결만을 요구하는 非現實的 접근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최근에는 약간의 변화가 생겼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북한의 對美 敵對政策은 비생산적이고 비효과적인 것이었다.

여섯째, 북한은 정치·군사회담을 강력히 추진해 온 반면에,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경시해 왔기 때문에, 군비통제나 통일 논의의 眞實性이 대외적으로 신빙성을 잃어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총리회담에서도 남측이 불가침선언의 실천의지와 보장문제를 제기하고 나오게 된 것이다.

일곱째, 북한은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해소하는 문제에 합의하지 않고서는 교류·협력이 큰 의미가 없으며, 큰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릴 시급한 문제를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긍정적 측면을 이해는 할 수 있으나, 불행히도 신뢰하지 못하는 사이에서는 그토록 중요한 문제를 선뜻 합의하여 해결하기가 결코 용이하지 않다. 현시점에서, 교류·협력을 북한사회 개방을 통한 浸透로 인지하기때문에 북한지도층이 정치·군사회담에만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접근방법에는 限界가 있기 마련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北韓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一貫性있게 주한미군철수와 남·북한병력의 10만 또는 이하 수준으로의 감축을 주장해 왔다. 이는 構造的 軍備統制 제안으로서, 가장 어렵고 마지막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군비통제 제안이다. 運用的 軍備統制로 불리우는 긴장완화방안이나 신뢰구축방안을 도외시한 구조적 군비통제는 불신감과 적대감이 해소되지 않은 대치상태에서는 생각하기 힘들다. 北韓의 최근 제안에 신뢰구축 조치들에 관한 부분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사실이나, 단기간인 3~4년내에 10만수준으로 군축을 하자는 것은 지극히 非現實的이고 非合理的이다. 신뢰구축으로 기반을 쌓아가면서 점진적으로 군비축소를 해나가는 南側의 제안을 이해하고 수용할 태세를 갖추때, 진정한 軍備縮小 협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 2. 韓國의 軍備統制提案 評價

韓國은 1949년 미군철수 후에 당한 남침과, 北方三角勢力의 존재 및 地政學的 不利함, 휴전후 북한의 무수한 무력 도발·등으로 인해, 늘 安保問題에 민감해 왔으며, 주한미군의 철수는 북한의 재침을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속에서 살아 왔다. 또한, 북한의 군사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전략증강을 통해서 군사력 균형태세를 이룩하여야 한다는 強迫觀念에서 벗어나지

못해 왔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축은 기만적이며 政治·宣傳에 불과하다는 否定的 視角을 지녀왔으며, 흔히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 북한의 군축문제를 내세운 攻勢가 가열화되고 국내외 정세가 크게 바뀌면서, 군비통제문제를 점차 심각하고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 올림픽의 성공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北方政策은 소련 및 동구의 變革과 맞아 떨어지면서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국의 對外的 자신감이 크게 증대되었다.

北方政策은 對北韓關係로 이어지고 성과가 나타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보람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韓國의 다음 목표는 자연히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라는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는 데,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요구하는 정치·군사회담에 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北韓의 대내외 상황이 악화된 점도 韓國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의 군축협상요구에 응할 수 있게 된 배경이며, 전세계적 和解協力추세와 韓國內의 民主化로 인한 壓力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韓國의 軍備統制 제안을 최근 제시된 案들을 중심으로 분석·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國은 과거의 불행한 경험, 미군의 주둔, 군사력 불균형 인지, 保守勢力의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군비통제문제에는 비교적 消極的인 입장을 택해왔다. 이는 北韓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산주의자들과의 對話나 협상을 근본적으로 혐오하거나 兩面戰略에 기만되는 것으로 경계하여 왔다. 南韓이 군비통제문제에 소극적인 다른 이유중의 하나는 정책결정과정의 北韓처럼 단순하지도 않으며, 정권교체나 정치변동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다는 점이다. 北韓은 韓國社會가 불안정하거나 유동적

일때 통일안이나 군축안을 제시한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럴 경우 남측이 소극적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 한국은 군비통제문제 접근에 있어, 미군철수나 병력감축이 아니라, 信賴構築方法을 중시해 왔다. 신뢰없는 군비축소는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하여 왔으며, 신뢰구축이 된 후에 군축을 논하자는 현실적이고 段階的인 접근방법을 선호해 왔다. 이는 반면에 현상유지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소지를 지니고 있다.

셋째, 휴전선과 서울의 거리가 불과 30여마일이라는 취약점과 북한군의 65%가량이 평양 - 원산 이남선에 집중배치되어 기습공격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sup>54)</sup> 韓國은 총리회담에서 공격형 戰力構造를 방어형 전력구조로 전화할 것을 제의했다. 이는 군비통제의 또 다른 접근방법으로서 전략이나 군사독트린에 주안점을 두는 방법으로서 장비나 병력의 수를 감축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최근 蘇聯의 방위개념이 '合理的 充分性'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대방을 위협함이 없이 충분한 방어력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군사문제를 조정·해결해 나갈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넷째, 한국의 군비통제 제안에는 주한미군 및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 문제는 韓·美關係나 美·蘇關係의 범위내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세계적 추세를 볼때, 韓國으로서도 독자적인 구상이나 案을 지녀야 하며, 北韓과의 군비통제협상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해외주둔 병력이나 기지를 축소하는 추세이고, 韓國도 마냥 미국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우리의 案을 가지고 미국과 절충하고 북한과 협상할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계속 受動的으로만 나가면, 미국이 국내외 사정으로 撤軍을 결정할 경우 낭패를 당하고 말 것이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軍備統制는 오랜 시



간을 요하는 '긴 과정'인만큼, 한국도 미군의 궁극적 철수를 전제로 한 군비통제 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핵무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다섯째, 한국은 不可侵宣言 署名을 위해서는 북한의 실천의지나 무력사용 포기 및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천의지나 보장을 처음부터 요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서명후에도 불가침선언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한국은 충분한 監視手段을 지니고 북한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美·蘇와 같은 나라들을 포함한 國際監視團의 보장을 확보하고서 군축을 실현해 나갈 필요를 느낀다.

여섯째, 한국은 북한도 군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經濟安保가 점점 중요시 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북한의 안보는 상당한 취약점을 지닌다. 북한도 군축을 통해서 經濟難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기때문에 이를 원하고 있을 것이며, 무력적화통일의 꿈이 사라져 가고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名分으로나 外形的으로는 사회주의나 한반도의 공산화를 포기할 수 없겠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현 가능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목표는 국제적으로도 호응을 얻지 못한다. 따라서, 한국은 군비통제를 좀 더 前向的으로 생각하고 정면으로 북한의 제안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여유를 지닐 필요가 있다. 북한보다는 분명 우리에게 여유가 있으니 만큼, 한국은 軍備統制問題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수준의 여유와 진지함과 성숙함 및 지혜를 보여 주어야 하겠다.



## V. 結 論

韓半島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위험한 지역의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협소한 이 지역에 150만명 이상의 重武裝한 兵力이 대치하고 있으며,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핵무기까지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南·北韓間에 군비통제가 필요함은 누구나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올해 國防白書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자체방위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가 존재하고 있어,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韓國戰爭時 보다 80배에 이르는 戰力水準으로 인하여, 일주일내에 24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개월이 되면 500만명 이상의 사상자와 시설의 90%가 파괴될 것이라는 'Wargame' 결과까지 나오고 있다.<sup>55)</sup>

軍備統制의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있으며, 군비경쟁에 드는 비용을 建設에 돌릴 수 있다는 利點을 지닌다. 또한, 군비통제는 위기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점도 있지만, 危機安定(Crisis Stability)에도 도움을 준다. 즉,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쟁으로까지 악화되지 않도록 위기를 안정·수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韓半島 軍備統制는 반드시 필요하고 많은 노력과 現實感覺 및 비전을 요구한다.

北韓이 철수와 병력감축만을 주장하고 韓國은 신뢰구축을 통해 점진적으로 군축문제를 해결하자는 상이한 접근방법을 택해 왔기때문에, 아직까지 南·北韓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측이 군비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실, 휴전후 37년동안 양측은 전쟁의 再發防止에 성공했고, 전쟁이 나면 모두가 敗者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國際情勢도 군비통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남·북한의 국내정세도 시간이 갈수록 군비통제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 美·蘇關係의 호전과 유럽에서의 화해·협력무드는 亞·太地域으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남북한 국내분위기들도 계속 변하고 있어, 군비통제 실현전망이 반드시 어둡지는 않다.

그러나, 군비통제를 가능케 하는 相互信賴의 심각한 결여는 남북한 군비통제협상이 순탄하지 않을 것임에 예고한다. 北韓은 신뢰구축이 선차적임을 과감히 인정하고 보다 유연하게 협상해 응할 필요가 있으며, 南韓은 과거 경험에만 집착하거나 北韓의 호전적 발언 및 비방에만 신경을 써, 군비통제 협상을 좌초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軍備統制로 不利益을 얻는 계층이나 집단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차원에서 군비통제가 필요하고, 군비통제 실현이 巨視적으로 모두의 안녕과 이익에 기여한다는 점을 같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北韓의 주장대로 군비통제 없는 統一을 생각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통일을 달성하기 전에, 가장 시급한 현실 문제인 긴장완화와 무력충돌의 방지 및 危機安定을 위해서, 실현가능한 것부터 점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군비통제는 오랜 세월과 거듭되는 협상을 요하며, 양측 모두에게 利益과 成就感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설득시키며 인내하는 자세가 양측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總理會談에서 군비통제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지만, 양측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협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변화이며 큰 진전이다. 양측이 서로 軍備統制問題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비교적 간단한 것부터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보다 核心的이고 構造的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현시대는, 理念과 體制의 차이를 극복하여, 南北韓이 共存하고 和解協力を 모색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지속적인 軍備競爭이 궁극적으로는 民族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이상 한민족은 용기와 슬기를 발휘하여 軍備統制를 통한 生存과 發展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軍備統制는 南·北韓 모두에게 利益이 되며, 雙方을 함께 勝者로 만드는 길로 우리 民族을 인도할 것이다.

## 第6章 〈註〉

1. 統一院資料를 이용한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1948 - 1988년 기간에 걸쳐 북한은 235회 남한은 59회나 군비통제 제안을 내놓았다.  
Young - Koo Cha, Arms Talks an the Korean Peninsula : A Korean Perspective, A Paper Presented for the 18th International conference Sponsored by the KIIS, July 4-6, 1989, Seoul, Korea, pp.5-8
2. Krause는 군비통제 접근 방법으로, (1) 군비의 철수 및 감축, (2) 신뢰구축 방안, (3) 군사독트린, 전략, 군구조, (4) 일방적인 호의적 제안 등 네가지 접근방법을 지적하고 있다. Joachim Krause, Prospects for Arms Control in Europe (New York : Institute for East-West Security Studies, 1988), p.29
3. 盧重善 編, 民族과 統一 : 資料編 (서울 : 사계절, 1985), pp.328-329
4. 同, pp.334-338
5. 同, pp.339-341
6. 同, pp.347-351
7. 同, p.372
8. 同, pp.386-387
9. U.N. Security Council Official Records, October - November, 1970, p.43
10. 韓國國際文化協會, 南北對話, 第1號 (1973년 7월), p.3
11. 國土統一院, 南北對話年表, 1970-1980 (1981년 10월), pp.192-193
12. 同, p.234
13. 노동신문, 1975년 4월 19일, p.3
14. 노동신문, 1977년 7월 23일

15. 國土統一院, 南·北統一對話提議比較, 1945-1987. p.433
16. 前掲書, pp.433-435
17. 내외통신 (綜合版), 第33券 (1986.1.1 - 6.30). p.519
18. 國土統一院, 南北對話推進現況 (1988.8), pp.112-113
19. 南北韓 統一·對話提議比較, 1945 - 1987, p.491
20. 前掲書, pp.493-497
21. 内外通信, 第613號 (1988.11.11), pp. 연1R-자6R
22. 同
23. 内外通信(綜合版), Vol.41 (1990.1.1 - 6.30), pp.3-6
24. 同, pp.51-52
25. Institute for Disarmament and Peace, DPRK, On Easing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reating a peaceful climate for National Renuification, pp.1-8
26. 例로서, 지난 6월 17-20일간 Kuala Lumpur에서 '말레이시아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ISIS Malaysia)주최로 열렸던 회의에서, 북한측 대표인 오창림은 한반도만이 국제적 데탕트 및 군축기류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위험제거와 평화보장이 평화통일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27. 東亞日報, 1990년 10월 18일, p.10
28. 國土統一院, 統一速報, 第20號 (1990.12.18) 참조
29. 國土統一院, 불가침문제와 관련한 우리의 立場 (1990.12), pp.3-10; 統一速報 (1990.12.14), pp.16-19
30. 統一速報 (90.12.14), pp.47-48

- 31) Han K. Kim, Reunification of Korea : 50 Basic Documents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Asian Studies, 1972), pp. 29-30.
- 32) Ibid., pp. 32-33.
- 33) Ibid., pp. 39-40.
- 34) 1958년 2월 5일 北韓은 조선에서 美軍과 中國人民 지원군을 포함한 모든 외국군대의 동시철수를 주장했고, 2월 7일 중국도 북한을 지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3월 5일 韓國戰 참전 16개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6월 24일에도 중국측의 UN군 철수요구를 다시 거부했다. 盧重善 (編), 民族과 統一(자료편) (서울 : 사계절, 1985), pp. 352-360.
- 35) 1959년 6월 9일 이승만대통령의 '호놀룰루 스타'紙와의 회견 내용과 자유당의 입장은 北進統一을 강조했다. 上掲書. pp.365-366.
- 36) Han K. Kim, Op. Cit., p. 45.
- 37) 盧重線, 前掲書, p. 373; Han K. Kim, Op. Cit., p. 46.
- 38) 盧重線, 前掲書, p. 424.
- 39) 前掲書, p. 430-433; 南北韓 統一·對話提議比較, 1945-1987, pp. 77-79.
- 40) 盧重善, 前掲書, p.431.
- 41) 休戰線의 軍事分界線 남쪽에서 발생한 심각한 사건회수를 보면, 1966년 37건에서, 1967년에는 445건으로 급증하고, 1968년에는 542건으로 더욱 늘었다가, 1969년에 87건 그리고 1970년 22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UN Security Council Records, Oct-Nor, 1970, p.43.
- 42) Han K. Kim, Op.Cit., pp. 60-61.
- 43) Ibid., pp. 61-62.
- 44) 盧重善, 前掲書, pp. 471-472.
- 45) 노동신문, 1975년 4월 19일. p.3.

- 46)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April, 1979, p. 26.
- 47) 南·北韓 統一·對話提議比較, 1945-1987, 前掲書, pp.244-246.
- 48) “東北亞에 있어서의 군비경쟁과 군비통제”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는 北韓·美·日 3국의 학자들이 참여했었다. 국제정치 논총, 제26집 제2호 (1986. 12) 참조.
- 49) 李瑞恒, “韓半島 軍備統制의 要件”, 外交安保研究院 주최의 “한반도 군비통제”주제를 가지고 1990. 10. 10~11 동 연구원서 열린 대책 협의자료”, 1991. 12. 21일 국방연구원에서 열린 국방학술토론회 발표논문, p.24.
- 50) 姜英勳총리 및 延亨默총리의 기초연설문 전문은, 東亞日報, 1990년 10월 18일, p. 10. 참조.
- 51) 國土統一院, 統一速報(1990. 12. 18), pp. 5-6.
- 52) 同, p. 14.
- 53) 1990년 10월 10일-11일 양일간 外交安保研究院 주최로 동 연구원에서 개최된 ‘한반도 군비통제’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에서 행한 발언내용임.
- 54) 國防部는 북한지상군 주력부대가 平元線 이남 전방지역에 61개 사단/여단이나 추진 배치됨으로써, 부대의 재배치나 조정없이 현위치에서 즉각 공격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國防部, 國防白書 1990, p.78.
- 55) 前掲書, p.127.